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2019.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10. 1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지출을 전년 대비 43.9조원(9.3%) 증액하는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책대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구조적인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공고화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외교 통일 위원 회

[외교부]

I. 예산안 개요 / 1

1. 현 황	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5

II. 주요 현안 분석 / 8

1. 전략사업비 사업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8
2. 지역별 원조사업(ODA)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14
2-1.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16
2-2. 신북방·신남방지역 사업포트폴리오의 재검토 필요	21
2-3. 사업관리 강화 노력 필요	24
3.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내역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28
3-1.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29
3-2.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33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39

1. 해외안전의식 제고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39
2. 선진문화국가 이미지제고 사업의 신규내역사업 필요성 검토 등	42
2-1. 한스타일 공간연출 신규내역사업의 검토 필요	43
2-2. 전략적 문화교류증진사업 글로벌 문화교류사업과 통합·연계 필요	46
3. 효율적인 대미 정책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체계 정비 필요	49
4. 한중 기업교류 강화사업 기존사업들과의 통합연계방안 모색 필요	53
5. 외교센터 리모델링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57
6.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액 미편성 문제	60
7. 인도적 지원(ODA) 사업방식 개선 필요	63
8. 영사콜센터 리모델링 공사 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통합 필요	67
※. 외교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69

[통일부]

I. 예산안 개요 / 73

1. 현 황	7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7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79



CONTENTS

II. 주요 현안 분석 / 81

- 1.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운용 문제 검토 등 81
 - 1-1.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질적인 국회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필요 84
 - 1-2.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재원 운용의 문제 87

III. 개별 사업 분석 / 93

- 1.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93
- 2. 북한인권재단 기관운영출연금 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97
- 3.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정규조직화 필요 99
- 4.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신진연구자 지원 개선 필요 102
- 5.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건립비용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106
- 6.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보험금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110
- 7.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 대출금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1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예산안 개요 / 119

- 1. 현 황 11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21



CONTENTS

Ⅱ. 개별 사업 분석 / 122

- 1.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성화 노력 필요 122
- 2.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무실의 사용허가 후 운영 필요 125

국방위원회

[국방부]

Ⅰ. 예산안 개요 / 133

- 1. 현 황 13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0

Ⅱ. 주요 현안 분석 / 143

- 1.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전 부처 재정소요 관리 필요 등 143
- 2. 부서관 역량강화 목적 신규 내역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147

Ⅲ. 개별 사업 분석 / 152

- 1.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의 사업명 변경, 계획 보완 및 사전연구 수행 후 추진 필요 152



CONTENTS

2. 기존 사업의 집행부진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156
3. 육군3사 합동교육 실시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필요 등	160
4. 장병 주도형 맞춤형 디지털 교재 제작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재검토 필요	163
5. AI 기반의 면접체계 활용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필요	167
6.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대 보급의 적정성 검토 필요	171
7. 화력장비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해소 필요	175
8. 의무장비획득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80
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규모 최소화 노력 필요 ...	185
10. 평택기지이전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88
11. 환경치유기준 합의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191
12. 학자금대부 수요 감소에 따른 계정 존치 여부 검토 필요	194
13. 수당 성격의 항공전력강화비 등 지급 부적절 등	197
14. 육아휴직수당 예산의 정확한 편성 노력 강화 필요	199

[방위사업청]

I. 예산안 개요 / 203



CONTENTS

[병무청]

I. 예산안 개요 / 259

- 1. 현 황 25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6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61

II. 개별 사업 분석 / 262

- 1. 모병면접장 예산 증액의 적정성 검토 필요 262
- 2. 병역명문가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65
- 3. 적정 수준의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 필요 269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기금(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05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74억원(7.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837억원, 국제교류기금 694억원, 국제질병퇴치기금 522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외교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89,418	266,734	266,734	283,734	17,000	6.4
- 일반회계	289,418	266,734	266,734	283,734	17,000	6.4
기 금	114,923	111,175	111,175	121,570	10,395	9.4
- 국제교류기금	75,235	65,072	65,072	69,405	4,333	6.7
- 국제질병퇴치기금	39,688	46,103	46,103	52,165	6,062	13.1
합 계	404,341	377,909	377,909	405,304	27,395	7.2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외교부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조 7,32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829억원(11.5%)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조 5,996억원, 국제교류기금 676억원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657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외교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174,674	2,347,324	2,347,324	2,599,579	252,255	10.7
- 일반회계	2,174,674	2,347,324	2,347,324	2,599,579	252,255	10.7
기 금	107,383	102,708	102,708	133,261	30,553	29.8
- 국제교류기금	66,788	62,768	62,768	67,563	4,795	7.6
- 국제질병퇴치기금	40,595	39,940	39,940	65,698	25,758	64.5
합 계	2,282,057	2,450,032	2,450,032	2,732,840	282,808	11.5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외교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2,83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70억원(6.4%) 증가하였다.

[2020년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89,418	266,374	266,374	283,734	17,000	6.4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5,99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440억원(10.4%) 증가하였다.

[2020년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186,490	2,355,607	2,355,607	2,599,579	243,972	10.4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외교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940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318억원(12.1%)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국제교류기금 1,936억원, 국제질병퇴치기금 1,004억원이다.

[2020년도 외교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제교류기금	207,894	176,272	176,272	193,554	17,282	9.8
국제질병퇴치기금	82,674	85,872	85,872	100,407	14,535	16.9
합 계	290,568	262,144	262,144	293,961	31,817	12.1

주: 1. 총계 기준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외교부

라. 재정구조

2020년도 예산안의 외교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0억원을 예탁하고, 419억원의 예탁원금 및 예탁이자를 상환받는다.

2020년도 외교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대미·대일 외교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 지원 예산을 증액하였고, ②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 외교활동을 지원하며, ③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재외국민 영사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④ 한국에 대한 호감도 증진을 위한 재외공관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 및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외교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⑤ 국제사회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을 증액하였다.

2020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략사업비(ODA) 사업은 ①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사전검토의 미흡으로 사업취소·변경과다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며 ② 신속한 정상외교 후속조치 측면에서 일반 ODA예산편성 절차를 따른 사업과 소요기간에 차이가 크지 않고 ③ 긴급구호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 측면에서 기 편성된 해외긴급구호지원 예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원조사업은 ① 집행실적이 1%미만인 사업의 원인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안 마련 및 예산조정을 고려해야 하며, ② 원조액이 대폭 증가한 국가 중 국가협력전략이 부재한 국가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③ 적정 공정률 관리를 강화 및 중간평가·환류를 통한 사업관리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중장기 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회성 행사 위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교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부사업은 없다.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공공외교 역량강화, 재외국민 보호,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등이 있다.

①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은 미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대미 정책공공외교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은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한-남태평양 풀뿌리 교류 및 기업진출 활성화 신규 내역사업이 반영되었으며, ③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증액과 K-Entertainment 비즈니스 포럼 및 주한외국공관 네트워크 활용 공공외교 신규 소요가 반영되었고, ④ 재외국민 보호 사업은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콜센터 운영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⑤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사업은 '한중 기업 교류 강화' 신규 내역사업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외교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개)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3,489	3,489	5,934	2,445	70.1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514	3,514	9,235	5,721	162.8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58,739	58,739	86,892	28,153	47.9
	신북방정책 추진	387	387	535	148	38.2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347	347	475	128	36.9
	인도네시아(ODA)	4,690	4,690	12,925	8,235	175.6
	필리핀(ODA)	15,039	15,039	21,781	6,742	44.8
	몽골(ODA)	3,977	3,977	13,407	9,430	237.1
	라오스(ODA)	12,339	12,339	21,536	9,197	74.5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리랑카(ODA)	9,200	9,200	16,489	7,289	79.2
	파키스탄(ODA)	2,350	2,350	7,002	4,652	198.0
	아프가니스탄(ODA)	1,089	1,089	2,766	1,677	154.0
	에티오피아(ODA)	13,162	13,162	22,024	8,862	67.3
	모잠비크(ODA)	1,188	1,188	2,771	1,583	133.2
	우간다(ODA)	4,213	4,213	9,338	5,125	121.6
	파라과이(ODA)	7,900	7,900	14,002	6,102	77.2
	팔레스타인(ODA)	1,762	1,762	2,422	660	37.5
	협력사업 지원(ODA)	41,733	41,733	56,782	15,049	36.1
	전략적 협력강화(ODA)	6,000	6,000	8,000	2,000	33.3
	선진문화국가 이미지제고	2,155	2,155	3,347	855	39.7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3,082	3,082	4,029	947	30.7
	공공외교 역량강화	15,416	15,416	23,579	8,163	53.0
	국민외교 추진기반구축	515	515	920	405	78.6
	재외국민 보호	11,879	11,879	19,127	7,248	61.0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1,895	1,895	4,472	2,577	136.0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 총론 수립	162	162	2,089	1,927	1,189.5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52,619	152,619	166,111	13,492	8.8
	국립외교원 기본경비(총액)	189	189	2,263	2,174	1,150.3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8,834	8,834	14,032	5,198	58.8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959	959	2,093	1,134	118.2
	외교센터 리모델링	150	150	9,114	8,964	5,976.0
국제교류 기금 (1개)	정책공공외교강화	6,465	6,465	9,804	3,339	51.6
국제질병 퇴치기금 (2개)	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	15,854	15,854	31,150	15,296	96.5
	글로벌국제질병퇴치	16,351	16,351	25,035	8,504	51.4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외교부

주요 OECD 국가들 간 경제규모 및 정부예산 대비 외교 인력 및 예산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ECD 주요국가 외교 예산 및 인력 비교]

(단위: 조원, %)

국가	GDP	정부 총 예산	2019 외교부 예산	총예산대비 외교부 예산	외교인력	재외 공관 수	소관	
							ODA	통상
미국	24,138	5,191	47.1	0.91	13,770	276	O	X
일본	5,854	1,116	8.0	0.72	6,000	271	O	O
독일	4,707	458	7.7	1.68	11,652	230	O	X
영국	3,328	477	3.7	0.78	4,700	238	O	X
프랑스	3,271	603	6.4	1.06	13,500	97	O	X
이탈리아	2,442	1,136	3.4	0.30	3,789	206	O	O
한국	2,027	470	2.5	0.53	2,405	166	O	X
캐나다	2,013	314	5.8	1.85	6,561	179	O	O
스페인	1,80	616	2.4	0.39	907	142	O	X
호주	1,686	386	4.4	1.14	6,083	117	O	O
멕시코	1,441	312	0.5	0.16	3,599	157	O	X
네덜란드	1,075	389	1.6	0.41	4017	153	O	O
스위스	831	264	3.7	1.40	4,037	162	O	X

주: 1. 외교 인력은 재외공관 행정인력은 제외한 숫자이며, 독일의 경우 공관행정인력도 외교관도 동일 대우하여 인력산정에 포함시킴. 미국은 국무부 내 일반공무직 등 제외한 숫자임.

2. 프랑스는 재외공관 인력 예산삭감 및 축소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3. 독일은 ODA예산이 분산되어 있으며, 외교부가 약 9%예산을 운영함.

4. 스페인은 재외공관 인력 파악이 불가능하여 본부 인력만 산출함.

자료: 외교부

1

전략사업비 사업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전략사업비는 전략적 협력강화사업(ODA)¹⁾의 내역사업으로 정상회담 및 고위급 차원의 약속사업과 주요 국정과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60억원이다.

[2020년도 전략적 협력강화(ODA)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략적 협력강화	0	6,000	6,000	8,000	2,000	33.3
전략사업비	0 ¹⁾	5,000	5,000	6,000	1,000	20

주: 1) 2018년도 예산액 100억원 전액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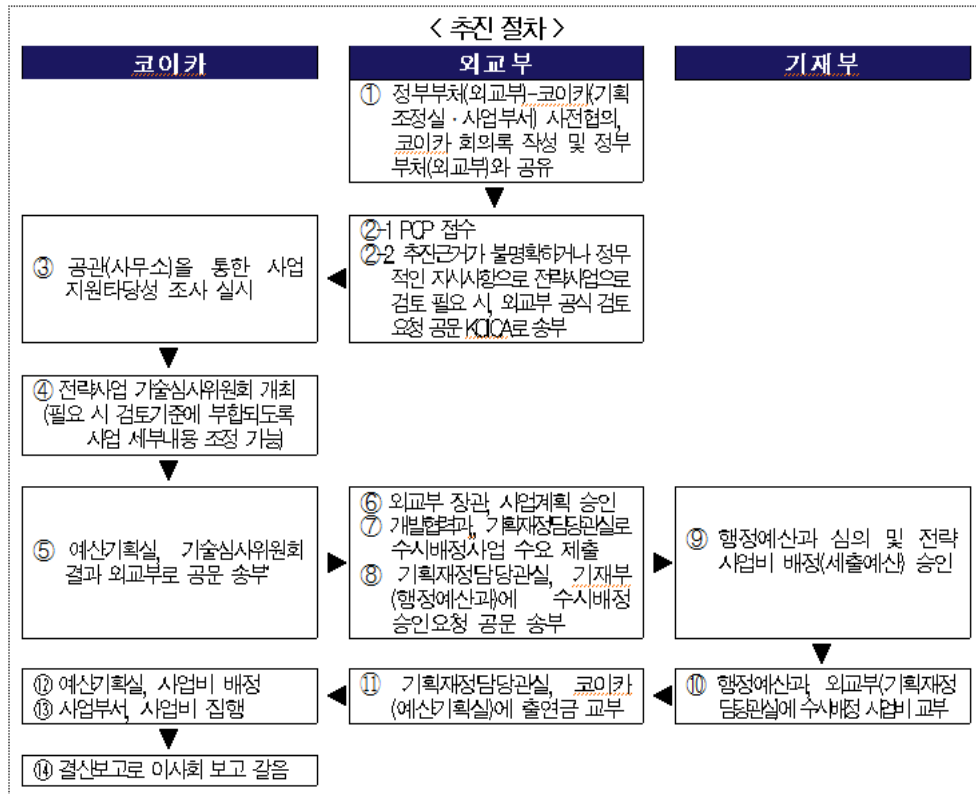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

전략사업비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대통령·국무총리 개도국 약속사업 fast-track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회계연도에 도입되었다. 전략사업비 사업은 일반 ODA사업과 내용은 같으나, fast-track으로 진행되어 예산편성 및 사업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일반 ODA사업은 사업 발굴 및 사업선정 절차 후 개별사업별로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한다. 그러나 전략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전략사업 목적으로 총액을 확정하고, 이후 해당 사업이 있을 경우 수시배정 절차를 통해 예산을 배정받고 집행한다. 수시배정을 통해 당해연도에 전략사업비로 신규 추진된 사업은 차년도에 해당 국가가 포함된 지역별 ODA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된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637-401

[전략사업비 추진절차]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부는 신속한 정상외교 후속조치와 긴급구호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무상원조 프로그램 내 전략사업비를 세부사업으로 별도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①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제약 ② 정상외교 후속조치의 시급성, ③ 긴급구호 지원 재원확보 필요성의 측면에서 전략사업비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략사업비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예산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우며, 사전검토의 미흡으로 집행과정에서 사업취소·변경 및 과다불용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

전략사업비는 발생가능성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이자 사업별 용도를 정하지 않은 총액계상적 성격의 사업이다. 따라서 다른 원조사업과 달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이나 집행가능성에 대한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검토를 어렵게 하고, 무상원조에 대한 예산 정보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국회 심의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사전검토 과정의 한계로 전략사업비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미흡에 의한 사업취소·변경 및 과다불용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14-2016년도에 평균 집행률이 58.8%에 불과했으며 2017, 2018년도에는 전액 불용되었다. 2019년도 집행률도 23% 수준²⁾이다. 사업개시 이후 사업내용 변경, 사업취소 및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여타 ODA사업과 달리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수요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생략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미진행되는 등 사업계획 검증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16-'19)]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9월말 현재)
전략사업비(A)	22,000	18,000	10,000	5,000
배정액(B)	16,297	-	-	2,336
미배정액(C=A-B)	5,703	18,000	10,000	2,664
미배정율(C/A)	26	100	100	53
배정액 중 집행액(D)	14,529	-	-	1,152
배정액 중 집행률(D/B)	89	-	-	43
예산액 중 집행률	66	0	0	23

자료: 외교부

국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2017년도 결산 시 전략사업비 추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외부통제절차 마련 등을 요지로 하는 제도개선을 시정요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내부심의 절차

2) 전략사업비로 배정된 3개 사업 가운데 긴급구호적 성격의 1개 사업을 제외한 2개 사업은 2019년 9월말 기준 전액 미집행 상황이다.

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심의 내용을 보면 신규 추진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보다는 확정된 사업의 추진 당위성 확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속한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나 실제 정상 간의 약속 이후에도 기획 및 상세협의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일반 ODA예산편성 절차를 따른 사업과 사업착수 소요기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

2019년도 전략사업비로 신규 추진된 사업 3건을 살펴보면 기 추진되던 ODA 사업의 확대이거나 동일 취지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우선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이미 2018년도에 전략사업비로 추진하다가 연내 사업착수가 불가하여 취소한 사업을 재추진한 사업이다. 이주로 인한 베트남 사회취약계층 여성 및 가구 지원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결혼 후 베트남 귀환여성 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라오스 아타프주 피해재건복구사업은 해당 지역을 추가지원한 것으로 해외긴급구호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선 지원한 바 있다.

[2019년도 전략사업비 배정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유형	사업명 (기간/금액)	사업기간	배정액	집행액 ¹
정상 후속조치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 구축사업(729만불)	'18-'20	851	0
정상 후속조치	이주로 인한 베트남 사회취약계층 여성 및 가구 지원사업 (100만불)	'19-'21	165	0
긴급구호	라오스 아타프주 홍수피해재건복구사업(1,200만불)	'19-'23	1,320	1,152
합 계			2,336	1,152

주: 1) 2019년 8월말 현재 집행액 기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건의 사업 중 긴급구호지원 목적의 라오스 사업 외에 2건은 9월말 현재까지 사업착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예산이 전액 이월되어 지역별 ODA예산안에 편성된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상회교 후속조치를 위한 ODA사업이 전략사업비가 아닌 일반적 ODA사업의 예산안 편성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도 사업추진에 실질적 지연을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긴급구호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 측면에서는 기 편성된 해외긴급구호지원 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사업³⁾의 내역사업인 해외긴급구호지원 예산을 통해 국제기구와 피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분쟁·재해지역의 빠른 피해복구와 긴급구호에 필요한 현금·현물을 지원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의 2020년 예산액은 960억 2,700만원 중 일정 비율을 긴급재난 대비 유보액으로 편성하고 있다. 동 예산은 해외 긴급재난 발생 시 수일 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빠르게 집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략사업비 및 해외긴급구호지원 사업 동일국가 중복지원 내역('15-'19)]

(단위: 백만원)

년도	전략사업비		해외긴급구호지원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2015	필리핀 태풍피해 재건	243	필리핀 태풍피해 인도적 지원	1,101
	터키, 요르단,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지원	5,150	시리아 난민 지원	6,438
2016	터키 내 시리아 난민지원	5,700	시리아 및 주변국 난민 인도적 지원	8,550
2019	라오스 홍수피해 재건복구사업	1,152	라오스 댐 사고피해 지원(18.12월)	2,134

자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긴급구호를 위한 전략사업비 편성과 목적 및 사업 지원 범위 등에서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전략사업비를 통해 긴급구호 목적으로 지원된 내용을 보면 해외긴급구호 지원을 통해 지원된 국가에 대해 동일 사안을 이유로 추가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중복편성의 우려도 있다.

3)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사업(1638-402)'은 해외긴급구호 내역사업,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내역사업,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으로 구성된다.

[해외긴급구호 사업 내 재난대응비 분기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년도	집행시기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7	428	1,176	1,893	4,196	7,693
	5.95%	16.35%	26.32%	58.33%	100%
2018	2,614	6,440	25,158	46,754	80,966
	3.26%	7.95%	31.07%	57.75%	100%
2019 (6월말 기준)	2,552	22,198	-	-	-
	3.11% ¹⁾	27.1%	-	-	-

주: 1) 총 예산액 대비 비중임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긴급구호 지원사업의 2020년 예산액은 16.5% 이상 증가한 상태이고, 연도 중에 예비적 목적으로 집행을 유보하여 4/4분기에 예산의 58% 이상이 집행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전략사업비를 별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낮다.

가. 현 황

지역별(국별) 원조사업(ODA)¹⁾는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아프리카지역원조’, ‘중남미지역원조’, ‘중동·CIS지역원조’를 포함하는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일치하는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을 통해 국가별 협력전략 기반의 맞춤형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 경제력 신장에 상응하는 책임감 있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 한다는 계획 하에 2020년도 ODA사업 관련 예산을 11.4% 증액하였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 역시 전년대비 14.9% 증가하여 총 4,175억 7,300만원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는 전년대비 35.1%증가한 1,990억 8,800만원,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1,329억 5,900만원, 중남미지역 국가원조는 전년대비 5.8%증가한 573억 2,900만원, 중동·CIS지역 국가원조는 전년대비 10.8%감소한 281억 9,700만원이다.²⁾

[2020년도 지역별 원조(ODA)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1631]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49,089	147,362	147,362	199,088	51,726	35.1
베트남	31,787	23,659	23,659	28,360	4,701	19.9
인도네시아	4,123	4,690	4,690	12,925	8,235	175.6
캄보디아	11,337	8,140	8,140	10,388	2,248	27.6
필리핀	21,567	15,039	15,039	21,781	6,742	44.8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600

2)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 아프리카지역 국가, 중남미지역 국가,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단위사업 4개의 총 합계액은 4,175억 7,300만원이며, 소규모 무상원조 및 사업효과성 제고비 등을 제외한 국별협력사업 총 예산은 3,719억 300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방글라데시	10,961	10,070	10,070	9,693	△377	△3.7
몽골	4,781	3,977	3,977	13,407	9,430	237.1
라오스	11,246	12,339	12,339	21,536	9,197	74.5
스리랑카	3,875	9,200	9,200	16,489	7,289	79.2
네팔	7,430	11,395	11,395	11,253	△142	△1.2
파키스탄	1,495	2,350	2,350	7,002	4,652	198.0
아프가니스탄	3,720	1,089	1,089	2,766	1,677	154.0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	20,467	22,216	22,216	26,882	4,666	21.0
미얀마	16,300	23,198	23,198	16,606	△6,592	△28.4
[1632]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10,806	130,044	130,044	132,959	2,915	2.2
가나	6,753	10,172	10,172	10,298	126	1.2
에티오피아	11,023	13,162	13,162	22,024	8,862	67.3
모잠비크	5,923	1,188	1,188	2,771	1,583	133.2
르완다(	12,982	14,127	14,127	6,671	△7,456	△52.8
우간다	6,803	4,213	4,213	9,338	5,125	121.6
아프리카지역 비중점 국가그룹	52,813	64,164	64,164	57,840	△6,324	△9.9
탄자니아	6,907	11,777	11,777	15,026	3,249	27.6
세네갈	7,602	11,241	11,241	8,991	△2,250	△20.0
[1633]중남미지역 국가원조	55,384	54,209	54,209	57,329	3,120	5.8
콜롬비아	4,048	3,901	3,901	5,721	1,820	46.7
페루	6,971	9,585	9,585	5,924	△3,661	△38.2
볼리비아	7,681	9,000	9,000	7,566	△1,434	△15.9
파라과이	10,140	7,900	7,900	14,002	6,102	77.2
중남미지역 비중점 국가그룹	26,544	23,823	23,823	24,116	293	1.2
[1634]중동CIS지역 국가원조	50,265	31,599	31,599	28,197	△3,402	△10.8
우즈베키스탄	11,255	6,059	6,059	3,488	△2,571	△42.4
아제르바이잔	2,657	1,597	1,597	1,526	△71	△4.4
이라크	12,012	6,074	6,074	3,978	△2,096	△34.5
팔레스타인	6,698	1,762	1,762	2,422	660	37.5
중동CIS지역 비중점 국가그룹	17,643	16,107	16,107	16,783	676	4.2

자료: 외교부

2-1.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역별 원조사업(이하 ODA)은 단위사업인 4개의 지역별 원조사업 내 30개 세부사업에 58개 국가를 대상으로¹⁾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에 추진될 지역별(국가별) ODA사업은 총 273개²⁾의 내역사업이며, 이 중 75개의 신규사업을 제외한 198개 사업이 '19년도에 이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3,096억 6,100만원이다.

2020년 계속 추진 내역사업의 2019년도 집행실적(8월 말 기준)을 보면,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전체 198건 중 166건으로 83.8%이며, 집행률이 25%에 미달하는 사업도 114건으로 57.7%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다년도 사업으로 착수초기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계획 대비 예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집행률이 1% 미만으로 사업 진행이 매우 부진한 47개 사업(23.9%) 역시 모두 2020년 예산안에 최초 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액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9월말 기준) 집행률 1%미만 사업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 예산액	2020 예산안
베트남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정보시스템 구축	550만	'18-'21	1,440	1,500
베트남해양환경관리기반구축을위한역량강화및시범사업	350만	'18-'21	1,500	650
베트남 교통분야 DEEP사업	500만	'15-'20	500	20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 ITS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	550만	'19-'22	239	2,10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운영안정화를 위한 역량강화	330만	'19-'22	892	1,100
캄보디아 KOICA-GHSA 로드맵 수립 및 3대행동계획이행 지원	300만	'17-'20	60	150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 1) 세부사업이 국가별로 편성되나 일부는 비중점 국가그룹 사업(예. 동티모르 솔로몬군도, 피지, 인도네시아)은 세부사업 '아시아비중점국가그룹'에 편성)으로 한 개 세부사업 내 해당 지역의 여러 비중점 지원국가를 합하여 관리·운영 중이다.
- 2) 관리·운영 중인 내역사업은 총 264개이나 이 중 7개는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관리 중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 예산액	2020 예산안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역량강화	600만	'19-'22	450	4,830
라오스 성생식 모자보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준 강화 및 지역기반 프로그램	750만	'19-'24	206	970
스리랑카 해양대학교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250만	'17-'21	700	870
파키스탄 태양전지모듈 인증시험소 설립	950만	'19-'23	490	1,948
파키스탄 물과 위생(WASH) 분야 포괄적 역량강화	742만	'19-'24	500	3,408
동티모르 결핵진단 및 관리 역량 강화 2차사업	600만	'19-'24	1,049	1,100
피지 기후변화 대응 보건역량 강화	600만	'19-'22	1,331	1,200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1000만	'19-'23	300	1,993
가나 센트럴 주 쌀가치사슬체계 향상사업	800만	'19-'23	108	1,967
에티오피아 싱글원도우 사업	749만	'17-'21	719	2,754
에티오피아 SHaPE 2차: 인구 생식보건 행동변화·서비스 증진	1,200만	'19-'23	1,405	2,746
모잠비크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	700만	'19-'23	510	2,000
우간다 지속가능농촌개발 시범마을 확산사업	590만	'19-'23	1,700	1,954
알제리 사이버 보안센터 설립 사업	650만	'19-'22	735	300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 확대·개선사업	250만	'19-'22	564	1,195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상수 급수 연결 2차사업	590만	'18-'21	2,108	2,206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2차사업	560만	'18-'21	3,025	2,805
DR콩고 루분바시 실험실 감염병 감시 및 진단 역량강화	200만	'17-'20	792	83
말리 NESCO 교육을 통한 여성청소년 역량강화	515만	'16-'20	1,596	898
세네갈 NICEF 영유아발달 지원사업	460만	'18-'22	2,369	1,843
파라과이 도로기술연구소 구축을 통한 도로기술 역량강화	400만	'19-'21	700	1,500
엘살바도르 치안역량강화 3차사업	550만	'19-'24	700	3,645
엘살바도르 국립보건교육센터 설립 및 보건교육강화	650만	'19-'23	700	1,500
온두라스 교원 ICT 활용능력 강화사업	180만	'18-'21	700	887
필리핀 팜팡가강 유역 수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	580만	'19-'22	1,529	1,811
네팔 UNESCO 포괄적 성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소녀 및 여성 역량강화	151만	'16-'20	924	801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950만	'19-'23	300	1,700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9 예산액	2020 예산액
미얀마 중앙 중추고속도로 타당성조사	580만	'18-'20	3,000	1,437
파라과이 항공 전문인력 역량강화	1,100만	'19-'22	700	1,500
베트남 한베 친선 IT 대학 4년제 승격지원사업	520만	'13-'20	200	79
캄보디아 동북부 소외지역 모자보건 프로그램	700만	'19-'22	200	1,225
모로코 스마트 멀티마이크로그리드 R&D 역량강화사업	400만	'19-'22	850	1,635
카메룬 농촌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670만	'19-'23	136	1,442
페루 아마존지역 태양광에너지 기반 바이오비즈니스 생산성제고 모델수립 사업	934만	'17-'22	934	77
몽골 광해관리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580만	'14-'20	580	180
파라과이 바냐도수르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및 따끔부지구개발 상세계획수립	350만	'18-'22	1,000	1,710
이라크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2차 지원사업	500만	'14-'20	933	100
베트남 뚜옌꽝성 포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	1,500만	'19-'23	200	2,400
필리핀 GGGI 미마로파 낙후농촌지역 기후복원력 강화 지원	500만	'19-'21	565	1,512
우간다 UNICEF 카라모자지역 초중등학교 식수시설 보급 및 위생교육	800만	'18-'22	1,915	2,326
탄자니아 잔지바르 중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교육환경 개선사업	1,000만	'18-'22	2,974	3,583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2019년도 집행실적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원인을 분석, 2020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마련 및 예산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ODA사업은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일시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원국과의 기본협정 체결 지연 및 수원국과의 이견으로 사업의 기초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사업, 정세불안으로 중단 및 취소된 사업 등은 차년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예산 편성 시 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업 추진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이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 ITS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원국과 기본협정도 체결되지 않고 있으며, 스리랑카 해양대학교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스리랑카 폭탄테러 발생 및 수원국 치안문제로 인해 전문가 파견이 불가능하여 미집행된 사안이다.

[2019년도 집행률 1%미만 사업 집행부진 사유]

집행부진 사유	주요 사례	건수 및 비율
수원국·수원기관과의 협의지연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 ITS 마스터플랜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수원국과의 사업 협정체결지연으로 집행계획 및 RFP수립 지연	18건(38.3%)
사업자 선정지연	▫ 에티오피아 싱글윈도우 사업, 17년도 착수 하였으나 협정체결 지연으로 사업자 선정절차 지연 및 적정 업체 선발 어려움으로 업체선발 공고 중	13건(27.7%)
계획변경·추가조사	▫ 피지 기후변화 대응 보건역량 강화사업, 수원국 측 사업부지 미제공으로 사업계획 변경 예정	2건(4.3%)
수원국 정세불안·자연재해	▫ 스리랑카 해양대학교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폭탄테러 발생 및 치안 문제로 프로젝트 매니저 파견 보류	5건(10.7%)
기타	▫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시범사업, 10월까지 투입내역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집행예정	9건(19.1%)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률 1%미만 사업 47건의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약정금 지급일 미도래 등 2020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사업 중 9건을 제외한 38건은 아직 수원국과의 협의지연, 사업자 선정문제, 계획변경, 테러 등 정세불안 등으로 사업착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사실상 차년도에도 사업일정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어려울 확률이 높다.

동 사업들은 사실상 2020년에 기본계획 시 수립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 원 계획대로 각각 21억과 8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당해연도 불용과다 등 집행상의 문제와 원조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2019년 집행실적이 현저히 낮은 사업에 대해 사유를 분석, 2020년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검토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

2-2. 신북방·신남방지역 사업포트폴리오의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외교부는 2020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에서 밝힌 ‘ODA를 활용한 정책시너지 효과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도 신남방지역과 신북방지역 원조 예산규모를 확대하였다.

2020년도 지역별 원조 예산안을 보면 신남방지역(미얀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에 전년대비 29% 증가한 1,122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신북방지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27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 ODA사업 예산안 지역별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수원국 수	지역별원조 총예산대비
신북방	16,124	27,883	11,759	72.9	6	7.5
신남방	87,065	112,236	25,171	28.9	7	30.2
아시아·태평양	41,047	56,594	15,547	37.9	9	15.2
아프리카	115,690	114,189	△1,501	△1.3	22	30.7
중남미	48,957	51,516	2,559	5.2	14	13.8
중동·CIS	14,924	9,485	△5,439	△36.4	4	2.6
합계	323,807	371,903	48,096	14.9	62	10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신북방·신남방지역에 국가협력전략(CPS)이 수립되지 않은 비중점국가 지원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면밀한 사전검토 및 실행가능성을 감안한 예산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지역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지역의 총 예산 증가는 73%이나, 실질적으로 6개국 중 4개국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고, 몽골과 키르기스공화국 원조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총 증가폭이 크게 보인다. 특히 비중점국가인 키르기스공화국 원조 예산이 1012.4% 증가했다. 신남방지역 역시 원조대상이 아니었던 인도 원조예산이 순증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2020년 신남방·신북방 지역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 (B-A)	증감 (B-A)/A	증감율
신북방 (7개국)	중점	아제르바이잔	1,597	1,526	△71	△4.45	58.4
		몽골	3,977	13,407	9,430	237.1	
		우즈베키스탄	6,059	3,488	△2,571	△42.4	
	비중점	키르기스공화국	655	7,286	6,631	1012.4	110.7
		타지키스탄	2,366	1,538	△828	△35.0	
		투르크메니스탄	1,470	638	△832	△56.6	
신남방 (7개국)	중점 협력국	캄보디아	8,140	10,388	2,248	27.6	28.1
		라오스	12,339	21,536	9,197	74.5	
		미얀마	23,198	16,606	△6,592	△28.4	
		베트남	23,659	28,360	4,701	19.9	
		인도네시아	4,690	12,925	8,235	175.6	
		필리핀	15,039	21,781	6,742	44.8	
	비중점	인도	0	640	순증	순증	순증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직후부터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보완해 왔다. 여기에는 수원국 특성 및 개발수요, 중점협력 분야별 분석과 우리나라의 원조역량 등을 종합한 전략과 함께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의 구체적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원조액이 크게 증액 및 순증한 국가가 모두 국가협력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비중점협력국가들로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수원국의 특성 및 개발수요, 협력분야별 분석 등에 관한 기초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인도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 동안 무상원조를 실시한 경험이 없어 코이카 현지 사무소가 부재하고 무상원조 기본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추진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점협력국가와 비중점협력국가의 예산배분을 조정하고 비중점협력국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사업관리 강화 노력 필요

가. 현 황

2020년도에 수행될 지역별(국가별) ODA사업 중 2019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던 사업은 총 68건이다. 이 중 2019년도 종료예정이었으나 2019년도 계획변경 결정에 의한 사업연장으로 추진되는 건이 총 31건이며, 2020년 사업종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1-2년 추가연장된 사업이 14건이다. 한편 사업비에 대한 계획변경은 총 24개 사업이며 증감액 규모는 196억 2,400만원이다.

2020년도 종료예정인 ODA사업 총 75건 중 37.3%에 해당하는 28건의 사업이 공정률 50%미만으로, 해당 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종료계획 사업 공정률]

(단위: %)

국가	2020년 종료 계획 사업(사업시작년도)	공정률 ¹⁾ (19.8월말)
베트남	베트남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설립지원 사업('14)	37.7
	베트남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Q-health) 사업('15)	39.7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종합정책수립사업('18)	28.4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8호선 건설 예비타당성조사(Prec-F/S) 사업('18)	18.6
필리핀	필리핀 쿼리노주 농촌종합개발 2차 사업('18)	26.9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소방방재 역량강화사업('16)	11.1
네팔	네팔 기술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기술직업교육훈련 질 제고사업('15)	20.1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13)	50.0
미얀마	미얀마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 역량강화 사업('16)	12.7
	미얀마 에와야디 델타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17)	34.4
	미얀마 중앙 중추고속도로 타당성조사사업('18)	28.4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라디오방송을 통한 초등교육역량강화사업('13)	40.1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15)	31.2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단위: %)

국가	2020년 종료 계획 사업(사업시작년도)	공정률 ¹⁾ (198월말)
르완다	르완다 전자영수증 발급 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조세포털 구축사업('18)	19.6
남아공	남아공 새마을운동 DEEP사업('16)	48.4
모로코	모로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지원사업('17)	5.8
알제리	알제리 새우양식 사료 제조역량 강화 사업('18)	11.1
탄자니아	탄자니아 무역증진을 위한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18)	0
볼리비아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저수용댐 축조 및 관개수로 건설사업('11)	38.8
	볼리비아 고원지역 농업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증대 지원사업('13)	18
니카라과	니카라과 중등교사 ICT교육 역량강화 사업('17)	36.6
	니카라과 새마을기반 정책개발역량강화사업('17)	46.5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동부건조지역 수계 복원력증대를 통한 기후변화대응사업('17)	49.1
이라크	이라크 배전분야 에너지 효율개선 및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사업('12)	35.5
	이라크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2차 지원사업('14)	11.8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외교부 행정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네트워크 구축사업('18)	29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14)	43.2
이란	이란 국립 직업훈련교사 훈련원 현대화사업('17)	0.8

주: 1) 총 사업비(전 사업기간) 대비 사업시작년도부터 현재(2019.9월말)까지 투입된 사업비 비율임.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나. 분석의견

지역별(국별) 원조사업이 착수 후 장기간 방치, 표류하지 않도록 사업별 적정 공정률 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 중간평가 및 환류를 통한 사업관리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ODA사업은 통상 3-5년의 장기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측했던 사업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계획된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 등에 따라 적절히 변경 및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 중 85.3%가 종료예정 당해연도 혹은 종료예정 직전년도에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 사업계획 변경 이유를 보면 수원국의 요청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일례로, 캄보디아 새마을 운동기반 캄퐁참 국립농업대학 교육 및 연구개발 혁신 역량강화사업(16년 착수)은 수행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일정순연을 이유로 2017년도에 계획변경에 따른 기간연장을 했으나, 2019년도에 다시 유사 사유로 추가연장하고 있다.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 역시 초기 설계업체 선정 지연 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했으며, 2019년 종료예정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020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였다.

사업종료연도에 임박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검토되는 것은 사업착수 후 사업기간별 공정률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OICA의 사업기간 연장 사업들을 분석해보면 지난 2-5년 동안 사업추진 상 장애가 발생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본부 차원의 공정률 관리 및 중간평가를 통한 문제점 보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획변경이나 사업취소율을 충분히 축소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혹은 조기에 계획변경 조치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ODA사업의 특성 상 해외 현지사정이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발생이 빈번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현지사정 등에 의한 장애요소 해결 및 사업표류 방지 등을 목적으로 284개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 산하 해외 44개 사무소와 1개 분소를 운영 중에 있다. 매년 약 210억원¹⁾ 상당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이러한 해외사무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더불어 협력사업 지원사업과 ODA선진화 사업 예산²⁾을 통해 중간평가 및 사업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의 환류를 통해 문제점 개선 및 사업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사업평가 내역을 확인하면 평가대상이 된 모든

1) 세부사업인 협력적 지원사업(1636-401) 예산 중 국제협력증진 내역사업의 일부 예산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19년 예산액과 2020년 정부 예산안 금액의 평균임.

2) 2020년 예산안 기준 협력사업 지원사업(1636-401) 내 ‘사업평가 및 심사 내역사업’에 15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ODA선진화 사업(1638-401) 내 ‘ODA현지 모니터링 내역사업’에 1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만 진행되었으며, 중간점검과 이를 통한 환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간평가를 대체하여 연차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나 이 역시 전체 사업의 40%에 달하는 104-109개 사업만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내용상 기본적 집행을 확인 등만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과정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사업별 적정 공정률 관리와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적극적 사업관리, 사업 중간평가 및 환류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원조사업 내실화와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¹⁾은 동남아시아 국가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신뢰 구축을 통한 우호·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1%증가한 18억 400만원이다.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한-동남아 국가 교류협력 강화사업에 1억 7,300만원,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사업에 7,500만원,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5억 8,400만원,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사업에 1억 2,300만원, 신남방 외교강화사업을 내역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823	1,554	1,554	1,804	250	16.1
한-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²⁾	302	172	172	173	1	0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 ³⁾	5	75	75	75	0	0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534	484	484	584	584	20.6
신남방 외교 강화	0	700	700	850	150	21.4

자료: 외교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431-401

2) 기존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동남아+서남아태평양)' 내역사업에서 서남아태평양지역 관련 예산을 이관한 후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3) 동 내역사업은 각각 다른 내역사업에 있던 동남아지역 명예영사 보조 내내역사업과 2019년 신규 편성된 대베트남 외교강화 내역사업을 합하여 새로운 내역사업을 편성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임. 2018년 결산액은 동남아지역 명예영사 보조 내내역사업 집행액이며, 2019년 예산액은 두 내내역사업의 예산을 합한 금액이다.

3-1.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내역사업인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사업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정세 적시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대 동남아 외교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존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의 내내역사업이었던 대 베트남 파트너십 강화사업과 동남아국가 명예영사 보조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새롭게 편성한 내역사업이다.

[2020년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 내역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국외업무여비 (220-01목)	□ 대 베트남 파트너십 강화 - 베트남 당 대외관계위원회와의 협의	16
사업추진비 (240-01목)	□ 대 베트남 파트너십 강화 - 베트남 당 대외관계위원회와의 협의	4
정책연구비 (260-02목)	□ 대 베트남 파트너십 강화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등 연구 50	50
해외경상이전 (340-01)	□ 동남아국가 명예영사 보조 - 명예영사 보조금 5	5
합 계		75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사업은 대베트남 교류협력을 위한 여비 및 연구용역비와 명예영사 보조금으로만 구성되어, 별도 내역사업으로 구성할 실익이 없으므로 한-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사업은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대 베트남 파트너십 강화 사업예산이 93.3%를 차지한다. 동 사업의 예산은 베트남 당 대외관계위원회 인사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여비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연구용역비로 구성된다.

외교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4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투자, 인적교류 등이 압도적 1위인 국가로 별도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의 외교상대로서의 중요성과 별개로 동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베트남 당 대외관계위원회 인사와의 교류협력은 한-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 1억 7,300만원을 활용하여 추진이 가능하다. 더불어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주아세안대표부 활용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여비 및 사업추진비 1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 관련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한-동남아국가 교류협력강화 ¹⁾	정상급 양자회담	34
	각료급·고위급 양자회담 및 정책협의회	42
	실무급 양자회담	30.5
	다자계기 양자회담	30.5
	전문가·유력인사 초청사업	14
	지방정부 주요인사와의 협의	22
	합 계	173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주아세안대표부 활용 네트워크 강화	163

주: 1) 한-동남아국가 교류협력강화 내역사업은 대륙 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와 해양 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으로 구성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기존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예산으로 매년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2019년도에 ‘베트남 관련 신규사업’을 내내역으로 신규편성하여 추진한 시기와 실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존 예산활용과 내역(국가) 간 재원 조정으로도 베트남과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사업목적을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의 교류협력 내용]

(단위: 백만원)

년도	세부내용(산출내역)	비고
2017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리셉션(2월) 외교장관 베트남 공식방문 및 외교장관 회담(3월) 국회의장 베트남 공식방문(4월) 대통령 특사 베트남 파견(5월) 국무총리, 베트남 국회의장 면담(6월) 외교1차관, 베트남 공산당 대외관계위원장 면담(7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2회(7월, 11월) 국회의장 베트남 수석부총리 접견(12월)	ASEAN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예산 집행
2018	한·베트남 정상회담(3월)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면담(3월), 대통령 베트남 총리 면담(3월) 대통령 베트남 국회의장 면담(3월)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3월) 베트남 총리실 장관 방한(5월) 1차관, 베트남 공산당 대외관계 부위원장 면담(6월)	
2019 (8월말 기준)	2차관 베트남 외교차관보 면담(3월) 2차관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원장 접견(3월) 남아태국장 베트남 외교부 차관보 면담(4월) 국무총리 베트남 부총리 접견(6월) 국무총리 베트남公安부장관 접견(7월) 2차관 베트남 사회과학원장 접견(8월)	일부 베트남 관련 신규사업 예산 집행

자료: 외교부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연구사업 역시 기존 연구용역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본 사업의 필요성으로 베트남 정책결정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회의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안은 외교부 산하의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 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0년 예산안에 국별 외교정책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비가 전년대비 1,190% 증액된 17억원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 예산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동남아국가 명예영사 보조 사업은 태국 푸켓과 치앙마이, 필리핀 다바오 지역의 명예영사 3인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으로만 편성되므로 이는 한·동남아국가 교류협력 강화 사업 내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교 상대로서 베트남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대동남아국가 교류협력강화 사업의 별도 편성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2.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신남방 외교강화사업은 중요한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현지에서의 정책홍보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9년도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8억 5,000만원이다.

[2020년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예산액
신남방협력증진연구	양자관계 및 다자간 협력 방안 등 신남방정책 이행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연구 수행	100
Team Korea 활동 지원	신남방 외교 강화를 위한 정계, 재계, 언론계, 시민 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129
한아세안/한메콩협력기금 사업체제 강화	아세안 유관기관 협력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 발굴 및 평가	80
싱크탱크와의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對아세안 외교안보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정책적, 학술적 지원 기반 마련 및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기반 조성	75
대외홍보 및 대국민 아웃리치 강화	현지 국가 대상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배포 우리 국민 대상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 등 개최	175
신남방협력 거점공관 활용 네트워크 강화	아세안 지역 인프라 담당관회의, 아세안 공관장 회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등 참석	90
신남방협력 거점공관 연계성 포럼 개최	아세안 공관장 회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등 참석	201
합 계		85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신남방 외교강화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210-01)	- 신남방협력체제 강화 - Team Korea 활동 지원 40 - 신남방협력 거점 공관활동 회의자료 준비 20 - 신남방 거점 공관 연계성 포럼 자료 등 제작 120 - 신남방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 - 아세안 및 주변국 썬크탱크와의 교류협력 회의자료 외 24 - 대외 홍보 영상물 등 자료제작 100 - 대국민 아웃리치 관련 간담회 개최 55	359
임차료 (210-07)	- 신남방협력체제 강화 - Team Korea 회의장 11 - 신남방 거점 공관 연계성 포럼 회의장 72 - 신남방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 - 아세안 및 주변국 썬크탱크와의 교류협력증진 회의장 1 - 대국민 아웃리치 관련 회의장 5	89
사업추진비 (240-01)	- 신남방협력체제 강화 - Team Korea 활동지원 6 - 한·아세안/한·메콩기금 유관기관 업무협의 20 - 신남방 거점공관 활동 업무추진 지원 30 - 신남방 거점공관 연계성 포럼 업무추진 15 - 신남방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 - 아세안 및 주변국 썬크탱크와의 교류협력 업무추진 6 - 대외 홍보 영상물 등 제작관련 관계자 협의 9	86
국외업무여비 (220-01)	- 신남방협력체제 강화 - Team Korea 유관기관 협력 72 - 한·아세안/한·메콩기금 유관기관 업무협의 40 - 신남방 거점공관 활동 업무추진 지원 40 - 신남방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 - 아세안 및 주변국 전문가 초청 등 44 - 대 아세안 아웃리치 출장 6	202
일반용역비 (210-14)	- 신남방협력체제 강화 - 한·아세안/한·메콩 협력기금 대국민조사 3	3
일반연구비 (260-01)	- 신남방협력체제 강화 - 신남방협력증진 연구 100 - 한·아세안/한메콩 협력기금사업 발굴 및 평가 11	111
합 계		850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중장기 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회성 행사 위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 신남방협력증진연구 사업은 아세안 국가와의 외교·경제분야의 경쟁·협력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남방정책 이행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2018년 신남방정책 이론적 기반마련과 정책제언이 가능한 연구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외교안보연구소 내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외교안보연구소의 재원인 2020년 외교안보 연구활동 사업예산(안)이 3억 1,400만원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의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29.9% 증가한 3억 4,300만원이다. 전문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신남방지역 및 정책 분석에 근거한 내부수행과제(연 7건) 및 연구용역(연 6건), 정책세미나 개최 및 결과보고서 실적(연 5건)을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시 ‘신남방정책 이행지원’ 사업을 신설, 13억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교부의 수요가 있을 시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관련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동 사업의 진행내역 중 ‘신남방정책을 통한 잠재 협력분야 발굴연구’는 아세안인도 연구센터의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환경과 추진방향’ 등 기본과제 연구와 주요 선진국의 전략 및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분석을 근거로 신남방정책 방안을 도출한 6건의 연구용역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아세안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변화에 관한 연구’ 역시 대외경제연구원의 신남방지역 밸류체인 분석과 역내 교역 확대 방안, 아세안 산업분석 연구, 한국의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2019년(8월말) 신남방협력증진연구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주제	집행액	수행기관
Identifying the Potential Niches and Networks for Developing Korea-ASEAN Connectivity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49	경희대학교 개발협력연구센터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진전에 따른 지역 내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변화에 관한 연구	49	주아세안대표부에서 공개입찰 진행중

자료: 외교부

따라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증진 방안 연구를 통한 중장기 전략수립이라는 목표는 기본 사업을 활용하여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므로, 편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Team Korea 활동지원 사업은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있는 아세안 관련 기관·단체 간 협업체제를 의미하는 Team Korea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사개최를 위한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외여비, 사업추진비로 구성된다. 외교부는 자체 보유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관 및 단체별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다가 단계적으로 유기적 협업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 하에 동 예산을 신규편성하였다.

신규편성 당시 차세대 지도자교류사업과 한·아세안 의회 정례협의체 구축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한·아세안 의회 정례협의체 구축사업은 2019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2020년에는 차세대 지도자교류사업 지원만 계획되어 있다.

2019년도 9월말 현재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뉴질랜드·싱가포르·호주 차세대 지도자 포럼 및 싱가포르 금융인의 밤 행사를 지원하였다. 모두 일회성 행사 지원 경비로 집행되었고 뉴질랜드와 호주 차세대 지도자 포럼은 신남방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해당 행사들은 모두 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2020년 예산안에도 단기 행사비 지원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 이를 통한 유기적 협업체제에 대한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Team Korea 활동지원 집행내역 및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2019년 집행내역 ¹⁾		2020년 예산안
	집행액	지원 건명	
일반수용비(210-01)	34	뉴질랜드 차세대지도자 포럼	40
임차료(210-07)	6	호주 차세대지도자 포럼	11
국외여비(220-02)	72	싱가포르 차세대지도자 포럼	72
사업추진비(240-1)	4	싱가포르 금융인의 밤	6
합 계	116	인도네시아 영리더스 다이얼로그	129

주: 1) 2019년 집행내역은 8월말 기준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아세안 관련 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집행 내역 상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지속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거점공관 활용 네트워크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동 사업의 신규편성 당시 아세안 지역에 10개 공관을 거점 공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아세안 분야별 다자 협의체 참석 및 현지국가 아웃리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대표부에서 총괄·조정하는 가운데 아세안 10개국 공관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2019년 집행내역을 보면 아세안 지역 인프라 담당관 회의 개최, 아세안 공관장 회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연례회의, 아세안대표부 신청사 개소식,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등 참석에 동 예산을 집행하였다.

[거점공관 활용 네트워크 강화 집행내역 및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2019년 집행내역		2020년 예산안
	집행액	지원 건명	
일반수용비(210-01)	9	아세안 인프라담당관회의	15
국외여비(220-02)	40	아세안 공관장 회의	60
사업추진비(240-1)	11	아세안대표부 신청사 개소식	15
합 계	60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등 참석	90

주: 2019년 집행내역은 8월말 기준
자료: 외교부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역할은 재외공관의 기본 역할에 불과하며, 외교부는 이미 위와 같은 사안을 위해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예산(공관별 약 3,700만원),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사업 예산(공관별 약 4,600만원), 공관장회의 및 기타현안대응사업 예산 22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외교 예산을 활용하여 재외공관의 현지국가 대국민 아웃리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동 세부사업의 한·아세안 전략협력강화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5억 8,400만원 중 아세안 지역 담당관 회의 개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참석 등을 내내역사업으로 하는 한·아세안 전략사업에 2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주아세안대표부 활용 네트워크 강화사업 예산에도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거점공관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집행내역과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동 예산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기본 역할을 위해 추가적인 활동 여비와 사업추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은 구체적 중·장기 계획이 없고 동 세부사업 내 다른 사업예산과의 차별성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예산 심의 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신남방정책 거점공관 연계성 포럼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이다. 외교부는 4대 핵심협력분야(교통, 에너지, 수자원, 스마트시티)에 대해 분야별 거점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공관 주도로 한·아세안 포럼을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포럼 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와 목표가 불명확하며, 4대 분야별로 새롭게 거점공관을 지정하고 그 중심으로 협력한다는 점 외에 거점공관 활용 네트워크 강화사업과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즉,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거점공관 활용 네트워크 강화사업이 가지고 있는 ① 재외공관의 기본역할을 위한 추가적 사업추진비 지원방식의 문제 ② 사업계획과 목표의 불명확성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모호 등의 문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즉, 신남방 외교강화사업은 첫째,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 이후 아직까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중·장기전략이 부족하고, 둘째, 기존사업 혹은 동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을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으며 셋째, 내역사업 간에도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해외안전의식 제고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해외안전의식 제고사업은 재외국민보호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해외안전정보를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제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1.7% 증가한 12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해외안전의식제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외국민 보호	10,485	11,879	11,879	19,127	7,248	61.0
해외안전의식 제고	1,344	1,124	1,124	1,256	132	11.7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해외안전의식 제고사업은 홍보예산 증액을 통한 인지도 제고 노력에 앞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 및 재사용의사 저조문제의 원인분석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명: 일반회계 1831-401

외교부는 최근 사회이슈가 된 해외 재난·안전사고에 의한 자국민 피해 문제에 대응하고자 재외국민 보호 사업예산을 61% 증액하였다. 해외안전정보 제공 및 외교부의 관련 정책 홍보를 골자로 하는 해외안전의식제고 내역사업 역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외교부는 인지도 부족으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정보 제공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일명 ‘동행’)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고, 일반시민이 출국 전 최소 3회 노출되도록 홍보비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하였다.

[2020년 해외안전의식제고사업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비고
일반수용비(210-01)	- 방송매체(YTN,KBS WORLD)를 통한 광고 548 - 신문을 통한 광고 20 -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 70 -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광고 40 - 해외안전여행 토크콘서트 37 - 항공사를 통한 광고 190 -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발간(본부) 38 -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발간(재외공관) 72	1,015	기타내역 전년 동일 대중매체 이용한 광고예산 전년대비
관리용역비(210-15)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운영 80 - 해외안전여행·국민외교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20	100	16.5% 증액
일반용역비(210-14)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97	97	
사업추진비(240-01)	- 여행사, NGO 및 선교단체 간담회 2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국가별 맞춤형 로밍문자메시지 1	1	
자산취득비(430-01)	- 홍보자료 제작용 그래픽소프트웨어 구입 1	1	
일반연구비(260-01)	-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40	40	
합 계		1,256	

자료: 외교부

그러나 외교부의 해외안전의식제고 성과가 저조²⁾한 이유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문제보다 서비스 접근성과 편리성 한계에 의한 (재)이용의사 저조, 외교부 제공 해외여행정보의 한계 등의 문제와 관련성이 높다.

2) 외교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12.8%만이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8년 말 기준 인천공항 출국자가 20만명인데 반해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만 명 미만(동일인 중복접수 모두 포함)이다.

먼저,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제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설문 조사결과³⁾를 보면, 해외여행 관련 정보를 접한 곳 중 유용했던 경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7.2%가 ‘여행 관련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답했으며, ‘지인을 통해’, ‘여행전문 잡지·책자, TV채널 가이드북’ 등이 뒤를 이었다. 25개 경로 가운데 유용성이 높았던 경로로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선택한 빈도는 4%, 외교부 SNS 0.7%, 대사관 홈페이지 1.7%에 불과하다.

2020년 예산안을 보면 YTN, KBS WORLD 등 방송광고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광고와 신문광고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 경로를 통해 접한 정보가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시민은 전체 응답자 중 2.3%, 0.2% 수준에 불과하다.

중요한 정책프로그램인 ‘해외안전경보’ 역시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를 통해 해외안전경보 기준의 문제와 여행경보의 불확실성 등이 지적된 바 있다.⁴⁾ 외교부는 동 사안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있어 이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나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에서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역시 6억여 원을 들여 개발되었고, 2020년에도 유지보수비용 4,000만원 편성⁵⁾되어 있으나, 실제 애플리케이션 구동자체가 되지 않거나 해외여행지에서 재외공관 위치를 일반 공장지대로 안내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면, 해외안전의식제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홍보비 증액을 통한 정보 노출빈도확대, 정부서비스 인지도 제고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교부는 면밀한 해외안전의식제고 사업의 문제점과 원인분석에 근거한 개선방안과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외교부에서는 매년 인천공항 출국자 1000-1300명을 대상으로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 대표적 여행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최근 납치사건이 발생한 부르키나파소 지역이 동일한 황색 경보 지역으로 표시되며,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곳이 안전지역으로 분류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5) 국민외교 애플리케이션과 공동운영하여 재외국민보호 사업에 6개월분 2,000만원, 국민외교 사업에 6개월분 2,000만원이 분리 편성되어 있다.

가. 현 황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사업¹⁾은 UNESCO·세계관광기구를 통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및 재외공관 예술품 전시,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9.7%증가한 30억 1,000만원이다. 내역사업으로 대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 외교강화 사업에 13억 9,400만원,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사업에 11억 2,300만원,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에 1억 9,300만원,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선진문화국가 이미지제고	1,790	2,155	2,155	3,010	855	39.7
한스타일 공간연출	0	0	0	300	순증	순증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381	200	200	193	△7	△3.5

자료: 외교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731-401

2-1. 한스타일 공간연출 신규내역사업의 검토 필요

가. 현 황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은 재외공관을 한류문화 홍보공간 및 문화외교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목적 하에 전라북도의 ‘재외공관 한스타일 연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2007년부터 전통문화소재인 한지 등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재외공관에 연출하는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각각 동 사업에 대해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중 전라북도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를 통해 동 사업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지원	300
합 계		300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은 기존 사업의 활용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계획 대비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한지 등을 활용한 조명, 가구, 소품 데코작업으로 재외공관의 공간연출을 함으로써 직·간접적 전시효과를 통한 홍보효과를 이용하여 전통 산업 발전과 부가가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외공관 한스타일 연출사업을 2007년부터 수행해왔다. 대상 재외공관을 선정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공간연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2018년부터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 역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부터 재외공관의 한스타일 연출사업을 지원해왔다. 2018년까지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다가 2019년에 폐지하였고, 2020년 예산안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재편성했다.

① 동 사업은 재외공관을 예술품 전시 등 한국문화 홍보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편성된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사업을 활용하여 추진이 가능하다.

동 사업은 재외공관에 한지를 활용한 소품이나 가구를 배치하거나, 인테리어에 활용함으로써 문화 홍보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의 목적이 기존의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사업과 동일하며, ‘재외공관의 전시장화’라는 기본구상도 일치한다. 실제 사업이 수행된 4년 간 동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되었고, 사업의 목적과 세부추진 계획이 모두 당시와 동일하다. 신규 내역사업으로 분리하면서 달라진 점은 기존에 외교부가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나, 2020년 예산안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외교부는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사업의 목적 달성이 기존 사업의 활용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신규내역사업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추진계획을 보면 기존 수준(2-3개 공관 대상)과 동일한 사업규모가 예상되고 보조할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안)도 확대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3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최근 4년 간 추진기관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년도	추진 대상 대사관		재원	예산액 ¹⁾
2019	3건	영국, 독일, 베트남	전라북도	150
			전주시	100
2018	4건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체코 (각 주체별 자체추진)	전라북도	150
			전주시	100
			외교부	100
2017	8건	중국, 가나, 콜롬비아, 제네바, 폴란드, 시드니, 사우디아라비아, 샌프란시스코	전라북도	150
			전주시	100
			외교부	100
2016	5건	시에틀, 몽골, 프랑스, 모로코, 싱가포르	전라북도	150
			전주시	86
			외교부	100

주: 1) 실제 집행액과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함.

자료: 외교부·전라북도·전주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업추진 기관별 2020년 예산액 및 계획]

(단위: 백만원)

추진기관	계획 공관 수	예산액(안)
전라북도	약 5개 공관	300
외교부		300
전주시	1-2개 공관	100

자료: 외교부·전라북도·전주시 제출자료

2020년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될 경우, 외교부와 전라북도는 약 5개 공관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집행액을 토대로 보면 1개 공관당 평균 7,000-8,000만원 수준의 소요가 발생했다. 따라서 5개 공관을 기준으로 해도 총 4억원 이내의 소요가 예상된다. 전라북도 역시 개별적으로 3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감액이 된다고 해도 연례적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외교부의 보조금 규모는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동 신규내역사업 편성의 필요성과 실 예산소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전략적 문화교류증진사업 글로벌 문화교류사업과 통합·연계 필요

가. 현 황

전략적 문화교류증진사업은 우리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전략적으로 외교관계 증진이 필요한 국가들의 문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외교관계 강화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0년 전략적 문화교류증진사업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일반수용비(210-01)	문화행사 홍보 등 제반비용	123
국외업무여비(220-02)	문화행사 전문가 및 역할참가자 등 초청(15인)	33
임차료(210-07)	문화행사 대관비용	15
일반용역비(210-14)	문화행사 운영 용역	20
사업추진비(240-01)	문화행사 준비를 위한 업무협의	2
합 계		193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문화교류사업과 사업목적 및 내용에 있어 유사하므로 통합·연계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문화교류증진 사업은 전략적으로 교류증진이 필요한 국가들의 문화와 예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에서 연 1-2회, 3-5일 간 특정 지역 국가들의 문화예술품 전시 혹은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동 사업의 사업목표와 집행내역을 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문화교류 내역사업과 목적과 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외교부에서 밝힌 글로벌 문화교류사업의 목적은 외교전략국가, 교류미진지역, 수교기념국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문화예술품 전시사업을 개최하여 우리국민의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3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 중 전시·공연 및 영화상영에 편성된 예산은 16억 7,900만원이다.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관련사업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선진문화국가 이미지제고	글로벌 문화교류	
	전략적 문화교류증진	글로벌센터	KF아세안문화원
사업 개요	전략적으로 교류증진이 필요한 국가들의 문화· 예술전시 및 공연 개최	외교전략국가, 교류미진지역, 수교기념국가의 문화예술품 전시사업·공연개최	아세안 국가 문화예술품 전시 및 교류를 통한 이해제고
예산 편성	- 문화예술 전문가초청 33 - 대관 및 홍보 160	- 협력전시 283 - 협력공연 268 - 협력영화 10 - 학술 및 교육 140 - 글로벌센터운영 1,003	- 전시 750 - 공연 268 - 영화 100 - 학술 및 교육 675 - 문화원운영 710

자료: 외교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업실적을 보면,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이 문화권에 기반하여 연 1-2회 문화예술전시·공연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글로벌문화교류 사업에서는 특정 국가별로 행사를 마련하여 소규모로 다수 진행한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글로벌센터의 행사·전시 사업(최근 3년간 연평균 30건)을 보면 매년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에서 소개한 국가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019년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동남아도서전 역시 KF아세안문화원에서 2017년부터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동남아 지역 국가 문화·예술품 전시 및 행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 내역('16-'19)]

년도	행사명	참여국	행사내용
'16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각국 공연, 전시, 영화제, 연극, 강연
'17	노르딕 문화예술축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공연, 전시, 영화제
'18	프랑코포니 문화예술축제	불어권국제기구(OIF)회원국	공연, 전시, 영화제
	한일공감콘서트	일본	북·음악 콘서트
'19	문화소통포럼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문화소통포럼
	동남아도서전	베트남 외 아세안국가	도서 전시

자료: 외교부

[글로벌사업 내역('18-'19)]

년도	행사명	예시
'17	(글로벌센터)노르웨이 외 총 29개국 41건 문화예술 전시·공연	노르웨이 다큐멘터리 상영
	(아세안문화원) 아세안 총 10개국 상설전시, 기획전시2건	한독 현대미술작가 교류전 한·베 수교20주년 기념전
'18	(글로벌센터)불가리아 외 총 20개국 35건 문화예술 전시·공연	불가리아 락밴드 공연
	(아세안문화원) 아세안 총 10개국 상설전시 외 전시·공연 19건	네덜란드 현대사진전 아세안50주년 기념사진전
'19	(글로벌센터) 브라질 외 총 33개국 42건 문화예술 전시·공연	브라질 재즈공연·사진전시
	(아세안문화원) 아세안 총 10개국 상설전시 외 전시·공연 18건	중앙아시아 문화, 도서 전시 아세안 전통무용 공연

자료: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우리나라와 외국 간 각종 교류사업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다. 물론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공외교 사업이라고 해도 본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 사업은 상대국가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예술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으로 고위급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외교부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만큼 대규모의 국제행사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다. 사업의 내용상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설립한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은 사업의 통합·연계 등 사업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외교부는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북미지역과의 전략강화사업의 내역사업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문화공공외교국의 공공외교 관련 사업들을 통해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추진 중인 한미미래비전 네트워크사업¹⁾은 정책공공외교 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한미 동맹관계 발전 및 한미관계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대미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5.1% 증가한 57억 4,400만원이다.

[2020년도 한미미래비전 네트워크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책공공외교 강화	6,338	6,465	6,465	9,804	3,339	51.6
한미미래비전 네트워크	1,944	2,670	2,670	5,744	3,074	115.1

자료: 외교부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 강화사업²⁾의 내역사업인 동맹기반 강화사업 역시 모든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여 한미동맹을 원숙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동맹기반 및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포괄적인 한·미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북미지역내 친한·지한 인사 네트워크강화사업과 미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사업 등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9.3% 증가한 36억 700만원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국제교류기금 1733-402

2) 코드: 일반회계 1133-401

[2020년도 동맹기반 강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강화 사업	3,566	3,489	3,489	5,934	2,445	70.1
동맹기반 강화 사업	2,355	2,416	2,416	3,607	1,191	49.3

자료: 외교부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대미 정책공공외교 그랜드 디자인 사업에도 대미 우호지지기반 구축과 대미 정책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한 메타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원이다.

나. 분석의견

대미 정책공공외교 관련 사업은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 간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예산안에는 대미 외교정책의 전략적 중요도를 반영하여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미국 내 친한·지한 인사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주요 싱크탱크와의 교류협력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은 주요 싱크탱크에 코리아체어 및 펠로 설치·운영, 차세대 전문가 대상 세미나와 방한 프로그램 및 연구지원, 싱크탱크 연구원과 의회관계자·언론인과 함께 하는 한국 현안 세미나 등 싱크탱크의 한국 연구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들로 구성된다.

북미지역 내 동맹기반 강화 사업은 고위급 교류나 미 의회 대상 법률 자문 및 홍보회사와의 계약 등 지역외교 전담부서가 수행해야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동 사업 내 공공외교 성격의 사업 역시 연방의원 및 주정부, 주의회 인사초청 사업과 권역별 추진 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 증액된 미국 전문가 방한 초청사업이나 싱크탱크와의 공동세미나, 싱크탱크 정책연구 용역 등은 사실상 목적과 대상, 사업 내용에 있어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등 기존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대미 정책공공외교 관련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세부 편성 내역	예산액
정책공공외교 강화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	대미정책연구 인프라구축	미국 싱크탱크에 한국전문가 석좌직 설치 및 펠로 운영	820
	차세대 정책 전문가육성	싱크탱크 연구원 세미나 및 방한 프로그램 운영, 한국 관련 정책연구지원	1,500
	한국현안 세미나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 의원·보좌관 대상 세미나 개최 및 방한초청 연계	1,830
	대미언론 아웃리치	미 언론인 대상 한반도 현안세미나 개최 및 방한 프로그램 운영	604
	미의회대상 한국현안이해	미 의회 의원 및 보좌관 대상 한국 현안 브리핑 및 세미나	990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강화			
동맹기반 강화	북미지역 친한·지한 인사 네트워크 강화	- 친한·지한 인사 교류(워싱턴) 32 - 유력인사 또는 연방의원 초청 90 - 주정부, 주의회 인사초청 130 - 미 평화봉사단 후속 관리 사업 50 - 대미 권역별 정책공공외교 사업 220	522
	미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싱크탱크·학계·언론 방한초청 160 미 싱크탱크와 공동 세미나 1,295 미 싱크탱크 정책연구용역 24	1,479
공공외교 역량강화			
정책공공외교 협의체 운영	대미 정책공공외교 그랜드 디자인	우호지지 기반 구축 100 - 주한미군 근무경험자, 평화봉사단, 한국 정부장학생 등과의 우호행사 및 세미나	100
		대미 정책공공외교 메타 용역 美 연구자 한국 공공외교평가 수행용역	200
글로벌 인적교류			
미평화봉사단 재방한	미평화봉사단 재방한 외	- 미 평화봉사단 경험자 방한 초청 115 - 미의회 보좌관 초청(차세대지도자교류 내내역사업에 분류) 332	447

주: 기타 사업명에 대미(對美)사업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내용상 대미 네트워크 강화 및 싱크탱크·정책연구지원 사업들이 있으나 분석에서는 제외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일례로 주요 싱크탱크의 방한 초청이나 싱크탱크와의 공동세미나 사업들은 한미미래비전 네트워크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추진하던 한국 현안세미나, 언론 아웃리치, 미 의회대상 한국현안 이해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두 사업 모두 2020년 예산이 전년대비 47%~306%수준으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

미 평화봉사단 후속관리 사업은 국제교류재단의 미평화봉사단 재방한 내역사업과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다. 더불어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내에도 대미 정책공공외교 그랜드 디자인 내역사업에서 우호기반 지지구축의 일환으로 미국 내 평화봉사단이나 주한미군 근무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한프로그램이나 행사개최 등이 수행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국 현안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사업 역시 각각의 세부사업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사실상 미국 내 연구소의 한국 연구 지원은 국제교류재단의 해외정책연구소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고, 세부사업별로 연구용역 주제나 지원대상자가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충분히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특정 지역의 정책공공외교 사업은 해당 지역외교 전담부서 뿐만 아니라 외교부 전체 공공외교 전담부서와 기관에서 함께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미 정책공공외교를 위해 편성된 사업의 목적, 대상, 그리고 세부 추진실적과 내용을 보면 사업별로 유사·중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별 특성에 근거한 통합·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부서 간 협의 활성화 및 지역외교 담당부서의 분석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사업¹⁾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유망시장 개척활동 지원, 기진출 기업들에 대한 법률 자문서비스 제공 및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경제협력사절단 파견,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파견,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한중 기업교류 강화 사업, 전략국가와의 경제외교 강화, 수입규제 대응체제, 재외공관 경제담당관 회의, 대미경제외교 강화 사업을 내역으로 한다.

2020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136%가 증가한 44억 7,200만원이며, 증가액 25억 7,700만원 중 25억 2,200만원은 신설된 한·중 기업교류 강화 내역사업 예산액이다.

[2020년도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1,788	1,895	1,895	4,472	2,577	136.0
한·중 기업교류 강화	0	0	0	2,522	2,522	순증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한·중 기업교류 강화사업은 중장기 계획이 모호한 상태에서 일회성 행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활용하여 추진가능한 사업들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32-401

외교부는 공관을 적극적인 경제외교 및 마케팅 기관으로 전환하고 중국 성·시의 지역별 수준차이, 지방정부의 해당 지역발전 수요를 경제협력의 레버지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근거로 한중 기업교류 강화 내역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0년 한중 기업교류 강화사업 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210-01목)	▣ 한중 기업매칭 상담회 등 개최	508
	▣ 중국정부와의 업무협의 및 기업인 네트워크 간담회	65
	▣ 한중 민관경제협력 세미나 등 개최	204
	▣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과의 복합 경제 공공외교 행사개최 - 경제행사 개최 시 문화공연 등 행사준비 522 - 한중 기업상담회 계기 소규모 문화공연 및 체험 이벤트 500 - 기업지원 세미나 등 개최계기 소규모 문화공연 및 체험이벤트 80	1,102
임차료 (210-07)	▣ 한중 기업매칭 상담회 등 개최	221
	▣ 중국 정부와의 업무협의 및 기업인 네트워크 간담회	26
	▣ 한중 민관 경제협력 세미나 등 개최	156
국외업무여비 (220-02)	▣ 한중 기업매칭 상담회 - 상담회 참석 출장, 전문가 초청	130
사업추진비 (240-01)	▣ 중국 정부와의 업무협의 및 기업인 네트워크 간담회	110
합 계		2,522

자료: 외교부

세부내역을 보면 한중 기업매칭 상담회 개최비용, 중국정부와의 업무협의 및 기업인 네트워크 간담회, 한중 민관경제협력 세미나 등 개최, 기타 지방정부와의 공공외교 행사개최 비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사업계획이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후속조치와 추진기반을 통해 사업의 목적인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불분명하다. 특히 예산의 43.7%가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화공연 및 체험이벤트 행사 경비로 편성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둘째, 외교부는 기존 사업들을 통해 중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경제외교 및 공공 외교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기존 사업을 활용한 경제협력 강화 및 동 사업들과의 통합·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0년도 한중 기업교류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한중 기업교류 강화 내역사업 계획	세부사업	편성 내역 [사업내용]	계
□ 한중 기업 매칭 상담회 969 □ 중국 지방정부 주최행사 우리 기업 참여지원 91 □ 경제협력 세미나 개최 360 □ 중국 지방정부·기업과의 경제공공외교 행사 개최 1,102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 중국 내수시장 진출지원 401 □ 한중 우호주간행사 개최 172	573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604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강화 276 □ 중국 지도부와 협력관계 구축 848 □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534	2,262
	해외진출 기업활동 지원	□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 강화 1,213	1,213
	외교안보연구 활동강화	□ 중국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181
	양자경제외 교국 기본경비	□ 대중국·동아시아·아세안지역 경제외교	206
	글로벌 협력강화	□ 공공외교세미나(한중 공공 외교 포럼 외) 144 □ 지역전략사업(대중전략사업)	100

주: 기타 공공외교 관련예산 중에도 주중공관 아웃리치(3억 6,600만원) 등과 같이 대중(對中)예산이
상당비중을 차지하나 이 표에는 기재하지 않음.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경제외교 측면에서 이미 동 세부사업 내에 중국 내수시장 진출지원사업
과 한중 우호주간행사 개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진출기업활동 지원사업에
서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강화 내역사업의 집행에 있어 중국 내 공관에 배정되는

예산의 비중이 상당하다. 이외에도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내역사업으로 대중국 경제외교를 위한 사업추진비 등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경제협력 강화의 토대가 되는 경제·공공외교 행사개최 예산의 경우 동북 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국제교류재단에서 추진 중인 공공외교 예산 및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예산의 활용도 가능하다.

경제협력 세미나 사업 역시 한중 공공외교포럼과 외교안보연구소 내 중국연구센터의 세미나 개최행사에서 경제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 사업의 경우 중국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외공관을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업들 역시 중국 지방정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일부 사업은 이미 중국 내 지역별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예산안 심사 시 사업추진을 통한 정책목적 달성의 실현가능성과 기존사업들과의 통합·연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¹⁾은 외교센터(12층, 27,122㎡)의 새로운 사용계획에 따른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초동에 위치한 국립외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관리 중이나, 2020년 1월부터 외교부가 관리권을 환수하여 직접 관리·사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관리권 환수를 계기로 국민외교센터, 여권민원실, 영사콜센터, 국립외교원의 대외교육 시설을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사기간은 약 6개월로 예정되어 있다.

2019년 설계비 집행을 위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에는 개보수 공사비용 9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	0	150	150	9,114	8,964	5,976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예산이 중기사업계획 심의결과보다 3배 이상 증액된 사유가 불명확하며, 인테리어 공사비의 소요계상 근거가 미흡하다.

외교부는 '19-'23년 중기사업계획 검토 시 외교부는 동 사업에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당국은 외교부 요구안 중 센터 진입마당 토목·조경공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제시키고 내부 리모델링·인테리어 비용 27억 1,300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7033-413

만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2·3차 심의과정에서 내부 리모델링·인테리어 비용 추가 되고 초기 심의 때 배제되었던 진입마당 외부 토목 및 조경공사와 국립외교원과의 연결브릿지 공사 예산이 추가되었다. 이에 더해 시설장비 교체비용과 자산취득비가 추가로 편성되어 총 사업비가 91억 1,4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편성 및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중기사업계획검토(1차심의)		2020년 예산안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구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2,713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4,105
- 외부 토목 및 조경공사	-		- 외부 토목 및 조경공사	133
- 연결통로(오버브릿지) 신설	-		- 연결통로(오버브릿지) 신설	598
* <외교부 요구안 2,920> 리모델링·인테리어 2,847 외부 토목 및 조경 73		⇒ 시설장비 교체	- 냉온수기 교체 1,071 - 자동제어 구축 1,570 - 엘리베이터 840	3,481
		자산취득비 외	- 자산취득비 792 - 이전비 5	797
합 계	2,713	합 계		9,114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와 같이 2020년 예산액이 중기사업계획 검토 시점의 예산액에 비해 236% 이상 대폭 증가했으나, 일부 노후장비교체 외에 추가적 소요 발생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산 추가편성의 근거 역시 불명확하다.

또한 공사비의 적정성 근거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공사비 계상에 있어 신축을 기준으로 하는 조달청의 공사비 기준 단가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사의 견적단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나,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유사 시설물 단위면적(㎡)당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하되, 본 공사는 신축공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단가의 50%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 리모델링 공사는 별도 단가를 적용한 연결통로와 진입마당 외에는 구조변경이 전혀 없는 순수 인테리어 공사의 성격으로, 공사기간이 5-6개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철골구조공사부터 토목, 기계, 조경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신축공사 단가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가. 현 황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사업¹⁾은 재외공관 청사·관저의 국유화 사업을 위해 국고채무부담행위²⁾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2020년 원금상환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고 이자상환액은 전년대비 2억 4,300만원 감소한 4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이자상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	11,816	8,283	8,283	0	8,283	순감
재외공관 국유화 이자상환	840	691	691	448	△243	△35.2

자료: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재외공관 재산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³⁾에 따라 1974-2011년까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차입한 자금 \$7.9억(약 9,00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해 매년 국회 의결을 거쳐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을 확정 후 공관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을 통해 상환하였다.

2012년부터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이전 차입금 중 미상환 원금 잔액 \$1.67억(약 1,900억원)과 해당 이자에 대해 10년(’12-’21)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상환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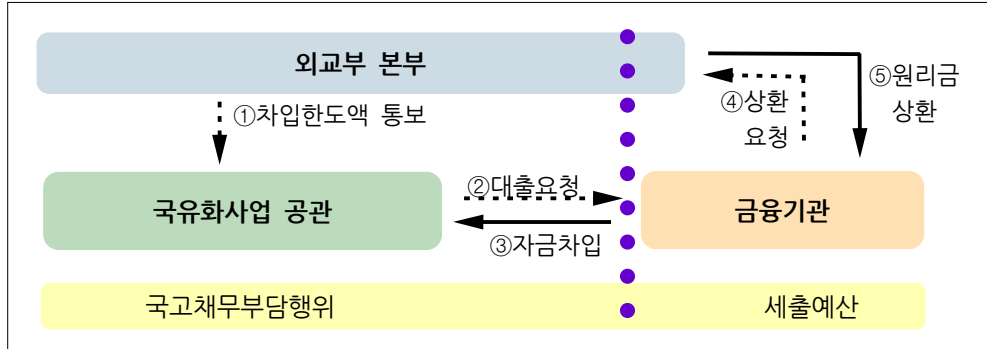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9861-980

2) 「국가재정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국회의 의결은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받은 것이지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지출을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성립해야 한다.

3)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동산의 취득)①재외공관의 장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부로 지급할 것으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2012.2.28. 폐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을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 집행구조]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부 예산안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차입자금의 원금상환을 위한 소요예산이 미 편성되어 연체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외교부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을 위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차입한 자금의 2019년 8월 현재 원금 잔액은 약 \$8,717,759(약 103억 7,413만원⁴⁾)이고, 이에 대한 추정 이자액은 \$332,215(약 3억 9,533만원⁵⁾)이다.⁶⁾

차입 시 약정에 의하면, 외교부는 2020년 원금 미상환 잔액 약 103억 7,413만 원 중 원금 약 69억 4,506만원과 이자액 약 3억 9,533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 2020년 예산안에는 원금상환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4) 달러환율 1,19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5) 추정 이자액은 3억 9,533만원이나 환율변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에는 이자상환액이 4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6) 이자 상환은 상환원금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Libor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에 가산금리 1.4%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자금 차입 상환액 및 미상환 잔액]

(단위: US dollar)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미화상환(계획)액	15,438,978	10,456,234	7,529,788	5,836,187	2,881,572
미화상환 잔액	26,703,780	16,247,547	8,717,759	2,881,572	0

자료: 외교부

2020년 약정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자 약 2억 6,461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2021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상환액은 약 111억 6,480만원으로 예산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원금상환 시나리오별 소요 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0-2021 소요예산추정액
2020년 원금상환 시	원금	6,945	원금	3,429	10,900
	이자	395	이자	131	
2020년 원금미상환 시	원금	0	원금	10,374	11,164
	이자	395	이자	395*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08.28.일자 Libor금리를 기준으로 계상한 금액이며 금리변동으로 추가소요발생 가능

동 사업의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모두 원금상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부처요구 및 재정당국의 예산편성단계에서 동 사안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반영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해 각 부처의 해명이 상이하여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어려우나, 두 부처 모두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교부는 원금상환 미편성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지출, 국가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인도적 지원사업은 해외재난(분쟁,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국에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재난구호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과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5%증가한 1,003억 4,300만원이다.

[2020년도 인도적 지원(ODA)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인도적 지원	84,793	86,119	86,119	100,343	14,224	16.5
해외긴급구호	80,448	81,803	81,803	96,027	14,224	17.4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가 상황별 대응방식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국 선정을 위한 심의과정 및 의사결정절차의 투명성 제고하고 중·장기 지원전략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의 내역사업인 해외긴급구호 사업은 재난대응에 대한 긴급재난 대비 유보액, 만성적 재난 지원액, 재난대응 구호물품 비축 및 창고관리비, 긴급구호 관련 교육 및 훈련,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비, 재난 관련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비로 구성된다. 이 중 재난대응과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된다.

[해외긴급구호 사업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산출내역)	예산액
재난대응	긴급재난 대비 유보액	17,121
	만성적 재난 지원액	68,481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구호물품 비축 및 창고관리비	300
	긴급구호 관련 교육·훈련,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1,945
	재난관련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30
국제부담금	CERF(The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7,140
	OCHA(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1,190
합 계		96,027

자료: 외교부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① 만성적 재난과 긴급재난 예산 배분에 대한 근거의 불명확성 ② 사업 효과성에 대한 평가 미흡 ③ 지원 결정기준의 불명확성과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① 만성적 재난과 긴급재난 예산배분 및 양자 대 다자 간¹⁾ 지원 비중을 보면 연도별로 배분이 달라지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4/4분기에 집행되는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사업의 성격 상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OCHA 등 국제기구분담금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출이 연말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재난대응의 사업목적 상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현 집행은 중장기 계획 및 기본계획 없이 단기적 대응방식으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시리아 난민 등 만성적 재난에 대해서는 예견가능한 부분이 있고, 만성적 재난 대응 예산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더불어 난민 문제, 기후변화, 감염병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 발생과 재난의 장기화·복잡화 증대

1) 양자지원은 재난지역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순수양자방식과 국제기구 및 대상국 적십자사를 통해 특정국을 지원하는 다자성양자지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다자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행하는 방식의 지원금을 말한다.

로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요청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적 재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해외긴급구호 재난형태별 집행내역]

(단위: US dollar)

구분		2017	2018	2019.9월초
재난 형태	만성재난	53,152,422 (75.9)	53,512,180 (76.0)	32,136,271 (80.7)
	긴급재난	11,907,166 (17)	10,920,007 (15.5)	1,700,000 (4.3)
	기타	5,000,000 (7.1)	5,972,617 (8.5)	6,000,000 (15)
지원 경로	양자	4,940,400 (7.1)	10,820,007 (15.4)	2,497,760 (6.3)
	다자	65,119,188 (92.9)	59,584,797 (84.6)	37,338,511 (93.7)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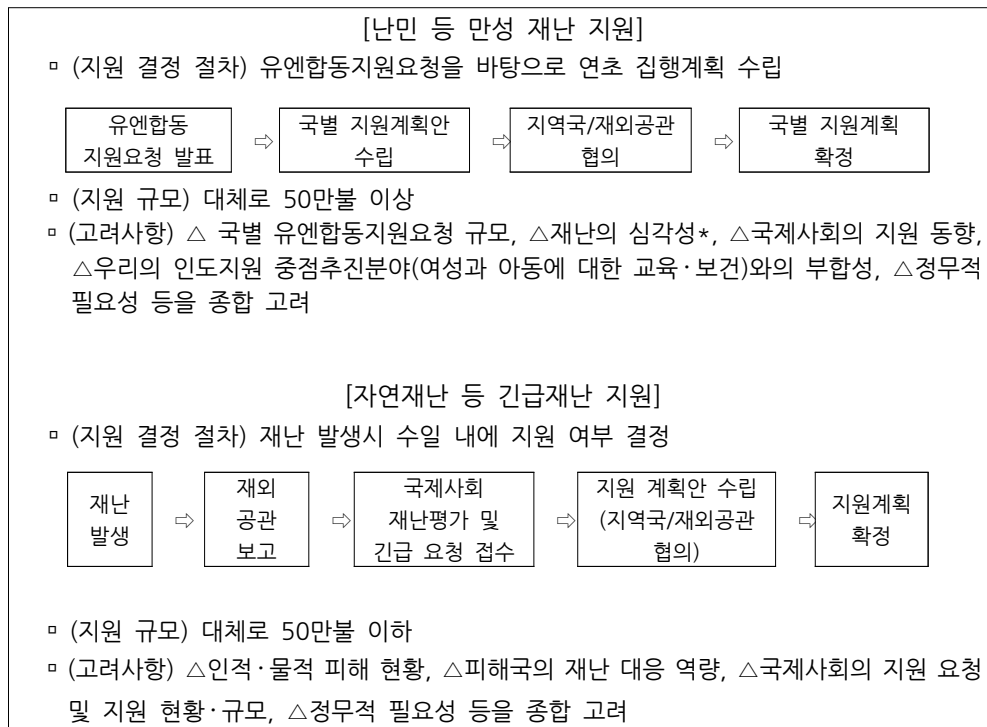
②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인도적 지원의 가시성과 홍보실적,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구호 지원의 신속성이다. 동 사업의 근본목적을 고려할 때, 재난발생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 있었고, 해당 국가에서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하나 이러한 사업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여, 사업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③ 원칙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현지 사정상 지원대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자 차원의 현금·현물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한 위기로 인정한 Level3국가(시리아, 예멘, DR콩고)와 취약계층(아동, 여성, 난민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고려사항을 보면 재난의 심각성, 국제사회 지원 동향,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되어있다. 실제 양자 지원내역도 국제사회에서 중점을 주고 있는 시리아 등의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불어 해당국가 재외공관과 협의 및 심의과정을 걸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고 하나, 해당 심의절차와 의사결정절차의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어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이에 대한 구체성 미흡을 지적받았다.

[해외긴급구호 내 재난대응사업 추진절차]



자료: 외교부

위의 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를 골자로 하여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받았으나, 2020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개선계획이 확인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보조사업 평가의 권고안을 근거로 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편 동 외교센터의 9층에 입주할 예정인 영사콜센터의 외교센터 인테리어 설계 및 상담실 인테리어, 시설공사비가 포함된 예산 9억 3,000만원은 재외국민 보호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영사콜센터 외교센터 이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외국민 보호	10,485	11,879	11,879	19,127	7,248	61.0
영사콜센터 운영	3,066	3,346	3,346	9,521	6,175	184.5
외교센터로의 이전	0	0	0	930	순증	순증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영사콜센터 상담실 리모델링 사업은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사콜센터는 외교센터 9층에 입주예정으로, 영사콜센터 운영 내역사업의 예산 중 9억 3,000만원이 외교센터 이전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순수 이전비와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을 제외하고,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로 5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외교센터로의 이전사업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상담실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1,042㎡면적)	553
외교센터 인테리어 설계	20
상공회의소 사무실 원상복구(798㎡면적)	195
백업서버 이전	120
이전비	42
합 계	930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이전공사 계획수립에서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정당국에서는 공사비 산정시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을 참고하여 해당 자료의 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사의 견적단가를 동시 고려하여 공사비 소요액을 계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영사콜센터의 이전비 계상은 1개 건축사무소에서 대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에만 근거하고 있어, 실소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2020년 1월부터 영사콜센터가 입주할 외교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영사콜센터 사업비로 진행될 인테리어 공사 역시 동 기간에 해당 센터 9층만 대상으로 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별개로 재외국민 보호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편성 당시 영사콜센터의 이전 위치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별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외교센터 9층 입주가 확정된 상황이고, 동일 건물에서 동일 시점에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효율적 사업추진 및 관련 예산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 사업비는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¹⁾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외교센터의 새로운 사용계획에 따른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공사비용 91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

외교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 사업의 적정성 검토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277
2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 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차별화 검토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292
3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지원의 효과성 및 입양동포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295

통일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통일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된다.

통일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30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03억원(30.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7억원, 남북협력기금 1,280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통일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763	2,811	2,811	2,724	△87	△3.1
- 일반회계	1,763	2,811	2,811	2,724	△87	△3.1
기 금	20,069	97,666	97,666	128,033	30,367	31.1
- 남북협력기금	20,069	97,666	97,666	128,033	30,367	31.1
합 계	21,832	100,477	100,477	130,757	30,280	30.1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통일부

통일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4,38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124억원(8.5%)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203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통일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07,669	219,875	219,875	218,344	△1,531	△0.7
- 일반회계	207,669	219,875	219,875	218,344	△1,531	△0.7
기 금	214,493	1,106,322	1,106,322	1,220,279	113,957	10.3
- 남북협력기금	214,493	1,106,322	1,106,322	1,220,279	113,957	10.3
합 계	422,162	1,326,197	1,326,197	1,438,623	112,426	8.5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통일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통일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2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억원(3.1%) 감소하였다

[2020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763	2,811	2,811	2,724	△87	△3.1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4,18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85억원(30.8%) 증가하였다.

[2020년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71,380	319,875	319,875	418,344	98,469	30.8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통일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협력기금으로만 구성된다.

통일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9,528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4,625억원(31.0%) 증가하였다.

[2020년도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남북협력기금	641,059	1,490,298	1,490,298	1,952,762	462,464	31.0

주: 1. 총계 기준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통일부

라. 재정구조

2020년도 예산안의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2,000억원이 전출된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 소요비용 및 기금사업비 충당을 위해 2,000억원이 전입된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조 5,446억원을 예수하고, 6,475억원의 예수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

(단위: 억 원)



주: 총계기준

자료: 통일부

2020년도 통일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일반회계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 공감대 확보를 위하여 통일정책추진 사업(2019년 9.9억원 → 2020년 16.5억원),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2019년 49.4억원 → 2020년 52.6억원),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2019년 16.2억원 → 2020년 23.8억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② 남북협력기금은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한반도 미래 인프라 구축 및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민생협력지원 사업(2019년 4,513억원 → 2020년 4,651억원), 경험기반(융자) 사업(2019년 1,197억원 → 2020년 2,520억원), DMZ 평화적 이용 사업(2019년 110억원 → 2020년 116억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2020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명확한 사업 소요의 발생 등 집행여건과 여유자금 조달 가능성 등 제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반회계 전입을 적정한 규모로 실시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재원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의 국민과의 대화 및 전문가정책연구영역은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의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및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통일부는 현행 신진연구자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DMZ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상 기존의 종합계획을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건립비용 계획안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3,0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기본경비 사업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됨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이다.

[통일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총액인건비 대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기본경비	5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기본경비	25
합 계		30

자료: 통일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통일정책추진, 국제통일기반조성, 구호지원, 민생협력지원, 경협기반(융자) 등이 있다.

①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②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지지 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③ 구호지원 사업은 최근 북한 식량 상황, 과거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대비 602억원 증액되었고, ④ 민생협력지원 사업에서는 남북 산림협력사업의 확대·다양화를 위한 산림복구, 산림보호,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비용이 증액되었다. ⑤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남북간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비용이 증액되었다.

[통일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개)	통일정책추진	985	985	1,646	661	67.1
	국내통일기반조성	1,622	1,622	2,375	753	46.4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400	400	840	840	110.0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5	505	1,298	798	157.0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290	1,290	2,056	766	59.4
남북협력 기금 (3개)	구호지원	81,539	81,539	141,759	60,220	73.9
	민생협력지원	451,296	451,296	465,092	13,796	3.1
	경협기반(융자)	119,655	119,655	252,025	132,370	110.6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통일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운용 문제 검토 등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안을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의 총지출은 전년 대비 4,624억 6,400만원(31.0%) 증액된 1조 9,527억 6,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일반지출 중 사업비는 전년 대비 1,140억 5,300만원(10.3%) 증액된 1조 2,176억 3,600만원, 기금운영비는 전년 대비 9,600만원(3.5%) 감액된 26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금간 거래를 위한 내부지출로는 공자기금예수원금 상환에 전년 대비 3,456억원(170.2%) 증액된 5,486억원, 공자기금예수이자 상환에 전년 대비 19억 6,600만원(1.9%) 감액된 98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유자금 운용 계획액은 전년 대비 48억 7,300만원(6.1%) 증액된 849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계획액(A)	2020년도 계획액(B)	증감	
				B-A	(B-A)/A
총 계	641,059	1,490,298	1,952,762	462,464	31.0
통일정책	4,154	6,341	4,125	△2,216	△34.9
통일기반 조성	4,154	6,341	4,125	△2,216	△34.9
한반도통일마련센터 운영	4,154	6,341	4,125	△2,216	△34.9
남북사회문화교류	9,977	20,530	22,064	1,534	7.5
남북사회문화교류	9,977	20,530	22,064	1,534	7.5
사회문화교류지원	9,977	20,530	22,064	1,534	7.5
인도적 문제해결	7,758	572,345	634,921	62,576	10.9
이산가족교류 지원	5,097	39,510	28,070	△11,440	△29.0
이산가족교류 지원	5,097	39,510	28,070	△11,440	△29.0
대북인도적 지원	2,661	532,835	606,851	74,016	13.9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계획액(A)	2020년도 계획액(B)	증감	
						B-A	(B-A)/A
	구호지원		0	81,539	141,759	60,220	73.9
	민생협력지원		2,661	451,296	465,092	13,796	3.1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89,837	504,367	556,526	52,159	10.3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176,024	473,176	525,335	52,159	11.0
	경제교류협력보험		9,604	9,500	4,750	△4,750	△50
	경협기반(무상)		166,325	309,281	236,970	△72,311	△23.4
	경협기반(유자)		0	119,655	252,025	132,370	110.6
	경제교류협력대출		0	23,750	20,000	△3,750	△15.8
	DMZ 평화적 이용		95	10,990	11,590	600	5.5
	개성공단 조성		13,813	31,191	31,191	0	0
	개성공단 운영대출		2,574	15,071	15,071	0	0
	개성공단 기반조성		11,239	16,120	16,120	0	0
남북협력기금운영비			2,767	2,739	2,643	△96	△3.5
	기금관리비		2,767	2,739	2,643	△96	△3.5
	기금관리비		95	100	90	△10	△10.0
	위탁수수료		2,270	2,250	2,250	0	0
	사업관리비		402	389	303	△86	△22.1
기금간 거래			341,998	303,873	647,507	343,634	113.1
	기금간 거래		341,998	303,873	647,507	343,634	113.1
	공자기금예수원금 상환		278,400	203,000	548,600	345,600	170.2
	공자기금예수이자 상환		63,598	100,873	98,907	△1,966	△1.9
여유자금 운용			84,568	80,103	84,976	4,873	6.1

주: 2018년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내에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원(단위사업) 및 동일 명칭의 세부사업이 신설되어 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다 음연도로 이월된 바 있음

자료: 통일부

통일부에 따르면,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은 북핵문제 진전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 및 남북 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평화경제’ 구현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사업비 편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625억 7,600만원(10.9%)이 증액된 6,349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산가족교류 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114억 4,000만원(29.0%)이 감액된 280억 7,000만원이

편성된 반면, 구호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602억 2,000만원(73.9%)이 증액된 1,417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산림협력 사업에 전년 대비 137억 9,600만원(12.1%)이 증액된 1,27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은 경험기반(무상)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723억 1,100만원(23.4%)이 감액된 2,369억 7,000만원이 편성된 반면, 경험기반(유자) 사업에 전년 대비 1,323억 7,000만원(110.6%)이 증액된 2,520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1-1.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질적인 국회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필요

가. 현 황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안에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의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인 경협기반(무상) 사업의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및 경협기반(유자) 사업의 경우 개괄적인 사업항목(내내역사업)의 명칭만 제시되어 있고, 그 편성내역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계획액 편성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사업 현황]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3000)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 (3040)	경협기반(무상) (3040-401)	기타경제협력 사업(비공개)	- 철도·도로 협력, 북한경제 인력 양성, 남북경협 인프라 개발 연구 등
		경협기반(유자) (3040-402)	경협기반(유자)	- 철도·도로 협력, 경공업 협력, 금강산관리위원회 등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협기반(무상) 사업의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및 경협기반(유자)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서 통일부가 편성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협기반(무상) 사업의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및 경협기반(유자) 사업 등 이른바 비공개사업에 편성된 계획안은 각각 2,151억 6,000만원, 2,520억 2,500만원 등 총 4,671억 8,500만원이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및 경험기반(응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계획액(A)	2020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사업비 총계	211,726	1,103,583	1,217,636	114,053	10.3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89,837	504,367	556,526	52,159	10.3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176,024	473,176	525,335	52,159	11.0
경험기반(무상)	166,325	309,281	236,970	△72,311	△23.4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1,046	297,566	215,160	△82,406	△27.7
경험기반(응자)	0	119,655	252,025	132,370	110.6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통일부는 대북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사전에 남한 정부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비공개사업이 계속사업인 만큼 대북협상 과정도 연속성을 지니므로 당해연도 계획안의 편성내역 뿐 아니라 과거 내역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의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과 경험기반(응자) 사업에 편성된 계획안 규모가 전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조 2,176억 3,600만원의 38.4%에 달하는 규모이고, 2020년도에 이들 사업의 전년 대비 계획안이 전체적으로 500억원(12.0%) 증액된 가운데 사업별로 증감 조정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편성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권을 상당부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제63조제1항¹⁾은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기금자산의 투명한 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²⁾은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수량 등)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 2019,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 p.78.

따라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경협기반(무상) 사업의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과 경협기반(유자) 사업 계획안의 편성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1-2.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재원 운용의 문제

가. 현 황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지출 규모는 31.0%, 사업비는 10.3% 증액 편성되는 등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는 바, 그 재원 조달을 위한 수입 계획안도 증액 편성되었다.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계획액		2020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추경(A)		B-A	(B-A)/A
공자기금 예수금	278,400	1,153,100	1,153,100	1,544,626	391,526	34.0
일반회계 전입금	63,711	1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
정부예금 회수	278,879	139,532	139,532	80,103	△59,429	△42.6
관유물대여료	30	39	39	39	0	0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0,347	14,009	14,009	13,771	△238	△1.7
기타경상이전수입	1,681	44,130	44,130	47,519	3,389	7.7
잡수입	106	3,447	3,447	4,561	1,114	32.3
융자금 회수	7,905	36,041	36,041	62,143	26,102	72.4
합계	641,059	1,490,298	1,490,298	1,952,762	462,464	31.0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법정부담금 등 독자적인 수입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정부내부수입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예수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자체수입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 융자원리금 회수, 그리고 기금운용수익 등이 있는데,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남북협력사업 재개 시 경협보험금 반환에 따른 회수 예상액이 대부분이고, 융자원리금 회수의 경우 경협·교역 대출, 특별자금대출 및 남북 교류·협력분야 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예정액을 편성한 것으로 신규 재원 조달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보기 어렵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 수입 계획안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계획액 1조 9,527억 6,200만원 중 공자기금 예수금은 전년 대비 3,915억 2,600만원(34.0%) 증액된 1조 5,446억 2,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000억원(100.0%) 증액된 2,0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전체 수입 중 89.3%에 해당하는 1조 7,446억 2,600만원이 공자기금 예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하여 조달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명확한 사업 소요의 발생 등 집행여건과 여유자금 조달 가능성 등 제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반회계 전입을 적정한 규모로 실시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재원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가 제시한 산출근거에 따르면, 2020년도 공자기금 예수금은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금¹⁾ 중 2020년도 원금 상환 기일 도래분을 차환하기 위한 재차입 부분과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예수이자의 2020년도 지급분 상환을 위한 부분²⁾과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안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사업³⁾에 편성된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중 2020년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은 5,486억원이고,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⁴⁾에 편성된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이자의

1) 우리나라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 차관공여협정(1999.7.2.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KEDO에 경수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차관공여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동 차관공여의 집행·관리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계정을 설정하여 동 계정을 통하여 KEDO에 자금을 공여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계정의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조달되었다. 1999년 1,498억원, 2000년 2,549억원, 2001년 3,100억원, 2002년 5,050억원, 2003년 8,230억원, 2004년 3,100억원, 2005년 4,100억원, 2006년 9,400억원의 예수가 이루어졌으나, 2006년도에 경수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KEDO 간 채권채무관계의 청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경수로사업 중단 이후의 경수로 계정은 남북협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2) 2012년부터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중 기일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정부출연금)을 통하여 상환하고, 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재차입하여 차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다.

3) 코드: 남북협력기금 9110-910

4) 코드: 남북협력기금 9110-920

2020년도 지급분은 632억원이므로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의 공자기금 예수금 계획액 1조 5,446억 2,600만원 중 9,960억 2,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액 2,000억원 중 1,368억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계획안 공자기금 예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소 요	계획안
공자기금 예수금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금 중 2020년도 원금 상환 기일 도래분을 차환하기 위한 재차입 부분	548,600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부분	996,026
	합계	1,544,626
일반회계 전입금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예수이자의 2020년도 지급분 상환을 위한 부분	63,200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부분	136,800
	합계	200,0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2년부터 2019년 9월말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남북협력사업의 집행여건 상 계획 대비 지출 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규 재원 조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한 예수 외에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일반회계 전입의 경우 공자기금 예수와 달리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분 외에 2017년도에 1,000억원, 2019년도에 9월말 현재 433억원의 사업비 충당을 위한 전입이 이루어진 바 있다.⁵⁾

5)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예수이자 상환을 위하여 107억원의 일반회계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바, 사업비 충당을 위한 추가적인 전입은 없을 전망이다.

[남북협력기금 공자기금 예수 및 일반회계 전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공자기금 예수				일반회계 전입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¹⁾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2012	400,000	40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300,000	112,800
2013	700,000	700,000	700,000	530,000	200,000	200,000	200,000	105,500
2014	810,284	810,284	810,284	228,600	120,000	120,000	120,000	93,400
2015	509,792	509,792	509,792	90,500	120,000	120,000	120,000	93,203
2016	665,367	665,367	665,367	207,000	120,000	120,000	120,000	92,500
2017	1,514,012	1,514,012	1,514,012	765,000	220,000	220,000	220,000	183,000 ²⁾
2018	1,170,863	1,170,863	1,170,863	278,400	80,000 ³⁾	80,000	80,000	63,711
2019 (9월말현재)	1,153,100	1,153,100	1,153,1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89,300 ⁴⁾

주: 1) 공자기금 예수 집행액은 전액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분임

2) 집행액 1,830억원 중 830억원은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분임

3) 당초 정부제출안에는 1,20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음.

4) 집행액 893억원 중 460억원은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분임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의 경우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가운데 여유자금 운용에서 계획액 1,418억 2,700만원 대비 실적액 2,788억 8,000만원으로 196.6%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 집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상당부분은 여유자금으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의 경우 8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집행액이 587억 7,400만원인데, 사업비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33억원에 여유자금 회수액 845억 6,800만원을 합한 금액은 1,278억 6,800만원으로 재원 조달의 규모가 사업의 추진 및 기금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고,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도 이후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며, 향후에도 사업이 구체화되고 재개되기까지 대북제재 면제와 북한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세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차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었던 2018년도의 경

우에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2,117억 2,600만원(집행률 22.1%)에 그친 바 있는데, 이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유동자산 피해지원, 남북 경협·교역·금강산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등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에 집행된 1,504억원을 제외하면 남북 간의 교류나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투입된 재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8월말현재)	
	계획현액	집행실적	계획현액	집행실적	계획현액	집행실적
기금전체	1,973,229	1,196,699 (60.6)	1,659,653	641,059 (38.6)	1,499,983	367,845 (24.5)
공자기금원리금 상환	866,227	846,962 (97.8)	375,241	341,998 (91.1)	303,873	229,596 (75.6)
사업비	961,197	68,398 (7.1)	1,000,579	211,726 (21.2)	1,113,248	57,590 (5.2)
기금운영비	3,978	2,460 (61.8)	3,232	2,767 (88.3)	2,759	1,184 (43.2)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이 명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회계 전입이 기금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비 충당이 아닌 여유자금 적립을 위한 방편으로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법정부담금과 같은 독자적 수입에 기반하여 운용되는 통상적인 기금의 경우 사업비 충당을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여유자금을 일정 수준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정부내부수입인 공자기금 예수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재원구조가 상이하며, 남북협력기금의 향후 사업 전망이 어느정도 구체화되기까지는 중기가용자산의 확보를 위한 여유자금의 적립 보다는 여유자금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기금 운용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명확한 사업 소요의 발생 등 집행여건과 여유자금 조달 가능성 등 제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반회계 전입을 적정한 규모로 실시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재원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통일정책추진 사업¹⁾은 통일정책 관련 국정과제 통일국민협약 체결,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 및 중점추진과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제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6,100만원이 증액된 16억 4,600만원이다.

통일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사업에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 예산으로 2억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²⁾

[2020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일정책추진	590	985	985	1,646	661	67.1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449	239	239	900	661	276.6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0	0	0	254	254	순증

자료: 통일부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2) 2020년도부터 중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코드: 일반회계 1031-302)로 추진하던 ‘해외 통일·통합 사례연구’ 사업이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사업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 3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의 국민과의 대화 및 전문가정책연구용역은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의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및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한반도체제는 2019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하여 제시된 개념으로, 통일부에 따르면, 정권·이념을 초월한 외교·안보·경제를 포괄하는 ‘사람 중심 평화·번영의 새로운 체제’로서, 가치 차원에서 평화·경제를, 공간 차원에서 한반도·동아시아를 결합하여 한반도평화공동체·한반도경제공동체·동아시아평화공동체·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비전이다.

통일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신한반도체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한편, 단기적·중장기적 구상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 개요 및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예산안
국민과의 대화	‘신한반도체제’는 장기적·통합적 비전인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상, 주요정책 설명 및 의견 수렴	- 공모를 통해 위탁 사업자 선정 - 지역별·참여자 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신한반도체제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면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	추진계획 수립 및 위탁업체 선정 (3월)→연중 추진	86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연구기관 회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분야별·주제별 회의를 진행하며 각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발전적 대안 마련 모색	연구기관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수시 개최	43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예산안
세미나 개최	○ 언론계·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전문가 및 국내외 오피니언그룹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여 신한반도체제 담론 확산	○ 상·하반기에 걸쳐 세미나 개최(2회)	○ 세미나 개최 운영 방식 등 확정 → 주요 주제 선정 및 유관기관 간 세미나 개최 협의 후 개최	33
관계부처·유관위원회 협의체 운영	○ 타부처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 및 정책 간 부합성을 위하여 ‘신한반도체제 추진협의회’ 및 ‘신한반도체제 연구협의회’를 설치, 주요 기관 및 연구기관 간 발전방안 논의	○ ‘신한반도체제 추진협의회’ 및 ‘신한반도체제 연구협의회’ 등 부처별·주제별 유관기관 회의 진행	○ 수시 개최	2
전문가정책연구용역	○ 정치·경제·안보 등 통합적 비전인 만큼,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연구 및 분야 간·지역간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 연구결과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	○ 공모를 통해 연구단체(연구자) 선정	○ 연구자 선정 등 연구계획 제출(3월) → 연구추진(4월)	90
합계				254

그런데, 통일부는 동일한 세부사업(통일정책추진)의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을 통하여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연구개발(R&D) 사업³⁾을 통하여 통일정책, 정세분석, 교류협력, 남북회담 등 주요 분야 및 현안 쟁점사항 등에 대한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7031-300

통일부에 따르면,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의 국민과의 대화는 ‘신한반도체제’가 가지는 장기적·통합적 비전이라는 성격을 감안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업 하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지역별·참여자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신한반도체제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면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권역별·지역별로 개최하는 숙의·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과 그 취지 및 추진방식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때,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관련 의제를 선정하여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이 관련 사업의 연계 추진을 통한 성과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의 전문가정책연구용역의 경우 통일부는 신한반도체제가 정치·경제·안보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 국가비전인 만큼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연구를 비롯하여 분야 간, 그리고 지역 간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목적 하에 공모를 통해 연구단체(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비전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통일부의 일반 연구용역 사업인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 동 사업의 연구주제로 ‘신한반도체제 구상’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을 위한 일반국민과의 대화 및 전문가정책연구용역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¹⁾은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8억원이다.

[2020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한인권재단	0	800	800	800	0	0
기관운영출연금	0	800	800	800	0	0
사업출연금	0	0	0	0	0	0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북한인권재단 출연금은 재단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경우 예비비 편성을 통하여 조달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단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일부 소요를 반영한 기관운영출연금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2016.9.4. 시행)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단이사 추천 및 선임²⁾ 문제로 설립 절차가 지연되어 2019년 9월말 현재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³⁾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135-304

2)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

2020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비한 재단사무실 설치비 4억원, 재단사무실 임대보증금 3억원과 2개월분 임대·관리비 1억원 등 8억원이다. 통일부는 2020년도에 재단이 출범할 경우를 상정하여 사무실 설치 등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금액
○ 재단사무실 설치: 설치공사비 390, 설계 및 감리·부대비 10	400
○ 재단사무실 임대보증금: 350평 규모(장소 미정) × 86만원 ≒ 300	300
○ 2개월분 사무실 임대·관리비: 50백만원 × 2개월분 = 100	100
합 계	800

자료: 통일부

다만, 통일부는 재단이사 추천이 이루어져 재단 설립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경우 예비비 신청 및 배정을 통하여 재단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조달할 계획으로,⁴⁾ 이사 임명, 창립이사회 개최, 법인설립 허가 및 설립등기 등 재단 설립절차에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 이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므로 예비비 편성 및 집행 시기와 사실상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일부 소요를 반영한 기관운영출연금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된다.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3)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시행(2016.9.4.)된 직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6년 9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에 재단사무실을 마련하였으나, 재단이사 추천 및 선임 문제로 재단 출범이 지연되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의 임차료 및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정적 손실이 누적되자 2018년 6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였다.

4) 2018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 출연금으로 기관운영출연금 47억 6,900만원, 사업출연금 60억 8,9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재단이사 추천 지연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다.

가. 현 황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¹⁾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성공단 철수기업 실태조사 후속조치 및 경영활동 정상화 지원을 위한 법제도 분야 대책수립,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개성공단 법제도적 기반의 유지·관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을 통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4% 증액된 2억 7,500만원이다. 동 사업 예산안에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을 위한 예산안 2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258	274	274	275	1	0.4
개성공단 운영 체계화	62	66	66	66	0	0
남북협력지구발전 기획단 운영	196	208	208	209	1	0.5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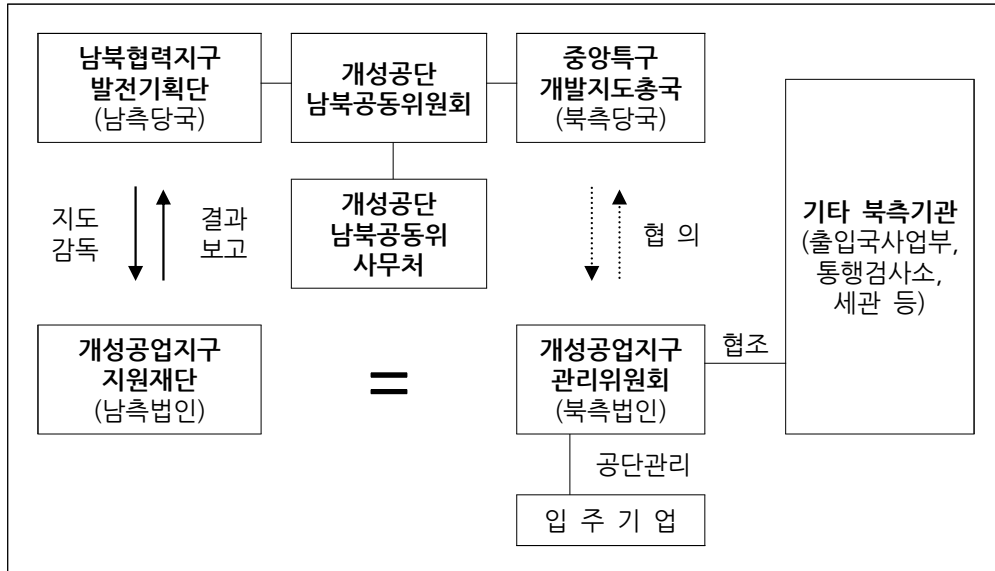
개성공단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이 개성공단 관련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을 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남북공동위사무처가 개성공단 현지에 위치하여 당국 간 상설 연락·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북측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기업 인허가·기반시설 관리 업무 등 공단 운영과 관련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남측에서 관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명: 일반회계 3232-303

[개성공단 운영체계]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15년 이상 존속하고 있어 사실상 정규조직이므로, 직제 반영을 통한 정규조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2004년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최초 설립할 당시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완료 시점까지만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공단을 관리·운영한다는 계획 하에 지원단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기로 당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였다.

이후 통일부는 한시조직 성격의 직제를 개정하여 조직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부서 명칭만을 변경하여 기존 조직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동 조직의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²⁾ 개성공업지구지원단은 2004년 설치되어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였고, 2009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기간을 다시 두 차례 연장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존속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하여, 2019년 9월 현재까지 총 10

2) 현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한시조직이란 이유로 운영 예산이 기본경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차례에 걸쳐 존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5년 이상 존속하는 사실상 정규조직이라 할 수 있다.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연혁]

- 2004.10.5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설치(1단 4팀, 27명 / 존속기간 3년)
 - 2006.1.26 사업조정관(3급) 신설 및 실무인력 4명(5급3, 6급1) 증원
 - 2006.2.23 개발기획팀, 법제지원팀 신설(자체정원조정)
 - 2007.2.28 실무인력 3명(5급2, 기능1) 증원
 - 2007.10.4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존속기한 2년 연장
 - 2009.5.25 기구 축소(1단 1관 6팀 35명 → 1단 3팀 25명)
- 2009.10.5 남북협력지구지원단으로 명칭변경(2과 1팀 25명 / 존속기간 2년)
 - 2011.10.4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존속기간 1년 연장
 - 2012.10.4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존속기간 1년 연장
- 2013.9.26.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으로 명칭변경(존속기간 2015.10.4.까지)
 - 2015.9.25.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간 1년 연장
 - 2016.9.21.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간 1년 연장(1과 1팀 10명으로 축소)
 - 2017.9.29.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간 1년 연장
 - 2018.9.28.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간 1년 연장
 - 2019.10.1.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간 1년 연장(존속기간 2020.10.4.까지)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현재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근로자 지원·대책 수립, 입주 기업 경영정상화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향후 남북협력지구가 재개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준비와 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이 합의하는 협력지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법·제도적 기반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시조직의 계속적인 존속기한 연장은 바람직한 운영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 간 상설 연락·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와 같이 정규조직화³⁾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는 2013년 11월 14일에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직제에 반영되었다.

가. 현 황

정책연구개발(R&D) 사업¹⁾은 통일 및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민간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에게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9,000만원이다.

[2020년도 정책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책연구개발(R&D)	367	390	390	390	0	0
정책연구비(260-02)	367	390	390	390	0	0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정책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통일부는 현행 신진연구자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은 1998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중 일정액(30%)을 통일부의 ‘정책연구개발비’로 편성하면서 추진되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7031-300

동 사업은 남북관계 상황과 통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시행하고, 통일정책·정세분석·교류협력·남북회담 등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분야 및 현안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17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에는 19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통일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연구개발비의 일정액을 신진연구자의 연구주제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목적	○ 북한 및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신진학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의 통일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연구분야 저변 확대 도모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하여 연구과제 선정하여 연구용역 계약 체결 ○ 과제수 총 5개, 연구과제별 1천만원 지원, 연구기간 6개월 내외
공모주제	○ 북한정세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주제
응모자격	○ 응모자격: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전공 불문) ※ 과거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용역수행자, 연구주제 중복자·응모기관(자) 중복응모 불가

자료: 통일부

우선, 정책연구개발(R&D) 사업과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은 통일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 연구개발 사업이고,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은 전문적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특정 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정책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예산의 일정액을 박사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할당하는 방식은 일반적 연구개발 사업으로서의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고유한 사업 성과를 저해하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의 추진방식(지원조건)을 보면, 매년 5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별 지원금액을 1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소액 연구용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진연구자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연계지원사업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으로, 신진연구자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연구용역 수행 현황(2018년도 및 2019년도)]

연도	과제명	연구 책임자	수행기관명	계약금액 (백만원)	연구기간
2018	김정은시대 대외 개방 정책의 정상국가 유도를 위한 남북에너지 넥서스 구축에 관한 연구	000	성균관대좋은 민주주의 연구센터	10	5.25~ 11.24
	‘스틀-플로우 일관 행렬’을 이용, ‘개혁과정’에 진입한 북한 경제의 화폐순환 메커니즘 분석	000	한반도평화포럼	10	5.25~ 11.24
	북한내부의 경제 사회적 변화 역동성 분석: 생존에서 기호로	000	한국평화연구학회	10	5.25~ 11.24
	북한 3대 통제기구의 작동 메커니즘 변화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000	(사)미래통일 연구소	10	5.25~ 11.24
	북한 외과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질환들의 분포와 추세	000	통일보건의료 학회	10	5.25~ 11.24
2019	북중 국경 관리실태 연구: 제도와 실제	00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10	5. 1~ 10.31
	김정은정권 이후 환경분야 정책 변화 분석	00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0	5. 1~ 10.31
	김정은시대 북한의 법현실에 대한 연구	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0	5. 1~ 10.31
	김정은시대 문화유산보호법 제정과 문화재 정책 분석	000	한국정치학회	10	5. 1~ 10.31
	김정은시대 관광산업의 상품과 국제화 전략과 인프라 현황 분석	000	북한개발 연구소	10	5. 1~ 10.31

자료: 통일부

정책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의 일부를 신진연구자의 연구주체에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통 일부는 현행 신진연구자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DMZ 평화적 이용 사업¹⁾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평화 체감도를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된 115억 9,000만원이다.

[2020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계획액(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DMZ 평화적 이용	95	10,990	10,990	11,590	600	5.5
DMZ 국제포럼	95	150	150	150	0	0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0	200	200	1,273	1,073	536.5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0	10,640	10,640	10,117	△523	△4.9
접경지역공동위원회	-	-	-	50	50	순증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DMZ 관련 사업은 2017년도 이후 사업의 기능별 편제가 변경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도에 사업의 기능별 편제를 변경한 것은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을 제시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남측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를 우선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공동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²⁾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5

2020년도의 기능별 편제 변경은 DMZ 평화적 이용 논의 활성화에 따라 기존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내역사업을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협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성에 따라 범정부 협의체인 접경지역공동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2018년도부터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사업에 편입된 내역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기존의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설정된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DMZ 관련 사업의 기능별 편제 변경 현황]

사업명	2017년도까지	2018·2019년도	2020년도
세부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DMZ 평화적 이용
내역사업	공원조성 구체화 연구개발	DMZ 국제포럼	DMZ 국제포럼
	공원기반 조성	DMZ 관광지구 개발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	접경지역공동위원회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DMZ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상 기존의 종합계획을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건립비용 계획안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DMZ 내에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생태와 협력, 평화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2) 이에 따라 2017년도까지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2018년도에 신규 편성된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사업(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되었다.

2018년도까지 사업 구상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 소요경비와 토지매입비, 기본조사 설계비, 공사비(지뢰제거 및 안보시설)가 편성되어 왔으나, 북한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구상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 외에 집행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5까지		2016		2017		2018		계	
	계획 현액	집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구상구체화	1,208	533	263	60	200	0	200	0	1,871	593
공원기반 조성	61,700	0	29,800	0	9,800	0	9,800	0	111,300	0
계	62,908	533	30,063	60	10,000	0	10,000	0	113,171	593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일부는 2015. 12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³⁾ 북한의 호응 등 사업 여건이 조성되면, 동 종합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여 즉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2018년도부터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 2020년도부터는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사업보다 상위의 포괄적인 사업인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종합계획은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⁴⁾

또한, 통일부에 따르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종합계획에 따른 1차년도 사업비는 600억원 수준인데 반하여 2020년도에 편성된 101억 1,700만원은 동 금액 대비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북한의 호응 등 사업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종합계획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2019년도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편성된 공사비 30억 9,000만원(전액)과 건설보상비 20억원 중 1억원 등 31억 9,000만원을 자치단체보조(330-03목)으로 전용하여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3) 통일부에 따르면, 동 종합계획에는 복수의 후보지별로 개발 계획안과 소요 예산액이 포함되어 있다.

4) 통일부는 ‘DMZ 평화적 이용 로드맵’ 구체화 연구용역에 1억 5,000만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 보완’ 연구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편성된 계획액이 종합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⁵⁾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편성된 건립비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통일부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초기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¹⁾은 남북 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하여 보상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7억 5,000만원이 감액된 47억 5,000만원이다.

[2020년도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계획액(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경제교류협력보험	0	9,500	9,500	4,750	△4,750	△50.0
민간이전-보험금 (320-04)	0	9,500	9,500	4,750	△4,750	△50.0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편성된 보험금은 2020년도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계획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계획액은 전년 대비 47억 5,000만원(50.0%) 감액된 4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통일부는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및 「교역 보험 취급기준」 개정고시(안)의 내용에 따라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시 실제 지급하였던 보험금 3,045억원을 환산하여 보험금 지급예상액을 3,347억원으로 추산하고, 가지급비율을 당시 30%에서 50%로 조정한 비율로 가정하는 한편, 수령기업 비율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0

을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112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해당하는 비율인 2.84%로 설정하여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계획액 산출근거]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산출산식	$3,045\text{억원} \times \text{가지급비율 } 30\% \times \text{수령기업비율 } 10.4\%$ $= 9,500\text{백만원}$	$3,347\text{억원} \times \text{가지급비율 } 50\% \times \text{수령기업비율 } 2.84\%$ $= 4,750\text{백만원}$

자료: 통일부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편성된 보험금 계획액은 2020년도 중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이 재개되고, 민간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하여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중 다시 2016년도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집행될 수 있는 바, 2020년도 중 동 계획액이 집행될 가능성은 다른 남북경제 교류협력 사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부는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은 사고 대비성 예산으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도 보험금 계획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획액 47억 5,000만원은 최소한의 필요 계획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계획액 47억 5,000만원을 산출하는데 적용한 수령기업 비율 2.84%의 합리적인 근거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계획액 편성 규모가 보험금 지급예상액에 가지급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편성의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경제교류협력보험제도 개선 추진경과]

- 2013년, 2016년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2004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
 - 기업들은 보험제도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국회 또한 보험 이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업 지원 필요성 제기
- 2016.12월, 통일부, 수출입은행,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TF 구성
 - 현재까지 총 20여회 실무회의 개최, 보험제도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방향, 의무보험·자산보험 전환 등 관련 쟁점 논의
- 보험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3회 수행 및 전문가 자문 등 추진
- 현재 그간의 논의사항, 연구용역 결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수정·보완 중

자료: 통일부

따라서,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편성된 보험금 계획안은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¹⁾은 북한측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남북한 교육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7억 5,000만원 감액된 200억원이다.

[2020년도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계획액(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경제교류협력대출	0	23,750	23,750	20,000	△3,750	△15.8
기타 민간융자금 (450-04)	0	23,750	23,750	20,000	△3,750	△15.8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 편성된 대출금 계획안은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성 있는 교역자금 및 경협자금 대출금 항목을 중심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 계획액은 전년 대비 37억 5,000만원(15.8%) 감액된 2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0년도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의 대출금 계획액은 교역자금, 경협자금, 광업협력, 국제협력 대출금 등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통일부는 교역자금 및 경협자금 대출의 경우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출 건당 평균 대출액과 평균 대출건수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3

를 적용하고, 광업협력 대출의 경우 광산 및 인프라 사업에 각 1건을 가정하고 추진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액 단가를 전년 대비 15% 감액 적용하는 한편, 국제협력 대출의 경우 나진하산 물류사업²⁾ 추진 시 필요한 총대출금 규모를 기준으로 추진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영 비율을 전년 대비 15% 감소시킨 비율로 적용하여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 계획액 산출근거]

구분	내용	산출근거	
		2019년도	2020년도
교역자금 대출	남북교역사업 지원을 위한 대출금	317백만원 × 15건 ≒ 4,750백만원	395.5백만원 × 10.2건 ≒ 4,038백만원
경협자금 대출	남북경협사업 지원을 위한 대출금	1,900백만원 × 5건 ≒ 9,500백만원	1,834백만원 × 4.4건 ≒ 8,075백만원
광업협력 대출	북한 광산 및 인프라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대출금	3,325백만원 × 2건 ≒ 6,650백만원	2,826.5백만원 × 2건 ≒ 5,653백만원
국제협력 대출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금	75,000백만원 × 3.8% ≒ 2,850백만원	75,000백만원 × 2.9% ≒ 2,234백만원
합계		23,750백만원	20,000백만원

자료: 통일부

2020년도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의 대출금 계획액은 전년 대비 일부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집행가능성을 감안할 때, 추가 조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북한 비핵화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호전되는 등 집행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사업은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실제로 재개되기까지

2)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수출할 수 있도록 나진-하산 철도(54km) 구간을 연결하고 나진항 3호 부두를 개발·운영하는 사업(2008~2057년)으로, 러시아 철도공사(70%)와 북한 나진시(30%)가 합자회사 나진 콘트란스를 설립하였으나, 한-러 기업 간 러시아측 지분 인수를 위한 투자협상 진행 중 제4차 북핵 실험으로 중단(2016.3월)되었다. 우리 기업 3사(포스코·현대상선·한국철도공사)는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 실사(2014.2월 및 7월) 및 시범 운송(2014.11월, 2015.4월 및 11월)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과의 협의, 관련 민간기업의 참여 의사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동안의 사업 추진의 경과나 남북 간의 이해관계, 사업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시작으로 재개되어 그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개성공단 사업 및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대출 항목인 교역자금 및 경험자금 대출을 제외한 광업협력³⁾ 및 국제협력 대출의 경우 2020년도 중 편성된 대출금 계획액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광업협력 대출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에 걸쳐 8천만불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섬유·신발·비누 등 94품목)를 북한 측에 차관 제공한 바 있으나, 그 밖에는 집행실적이 없으며, 미상환 대북차관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추진여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경우 우리 기업 3사(포스코·현대상선·한국철도공사)가 러시아 철도공사(70%)·나선시(30%)의 합자회사 ‘나선 콘트란스’의 러시아측 지분 인수를 위하여 진행하던 협상이 2016년 3월 중단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로, 우리 기업의 참여 의사결정과 투자협상 등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 편성된 대출금 계획안은 교역자금 및 경험자금 대출금 항목을 중심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광업협력 대출의 경우 2007.7월부터 2008.3월에 걸쳐 8천만불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섬유·신발·비누 등 94품목)를 북한측에 차관 제공하였고, 2007.12월부터 2008.1월에 걸쳐 초년도 상환분(3%, 240만불)을 아연괴 1,005톤으로 상환받은 바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현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0만원(20.0%) 증가하였다.

[202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	5	5	6	1	20.0

주: 총계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326억 7,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억 9,600만원(3.5%) 증가하였다.

[202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9,811	31,580	31,580	32,676	1,096	3.5

주: 총계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202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의 격년 시행으로 인해 자문회의 운영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2019년 44.8억원 → 2020년 47.1억원), ②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증액 등으로 인해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19년 25.1억원 → 2020년 30.9억원), ③ 무기계약근로자 시급 인상 등으로 인해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2019년 158억원 → 2020년 158.6억원), ④ 경비 근로자 2명 신규채용 등으로 인해 청사관리 운영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다(2019년 2.4억원 → 2020년 3.3억원).

202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17년 구축한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부적절하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동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입주하고 있는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무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청사관리 운영이 있다.

청사관리 운영 사업은 경비 근로자 2명 신규채용, 청소·경비 근로자 시급 인상 등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개)	청사관리 운영	242	242	331	89	36.8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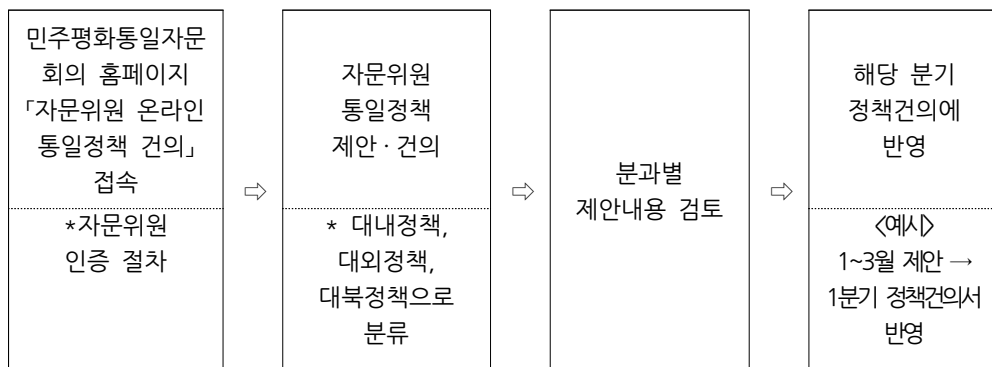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성화 노력 필요

가.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회의 운영 사업¹⁾의 일환으로 2017년 3월부터 홈페이지 상에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정기회의 등 오프라인을 통한 자문위원 의견 수렴과 더불어 온라인을 활용하여 정책건의를 위한 창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통일정책 관련 건의를 게재할 수 있다. 제안된 건의는 ① 대내정책, ② 대외정책, ③ 대북정책 등 3개의 분과로 분류되어 검토를 거쳐 해당 분기의 대통령 정책건의에 반영된다.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 운영 방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나. 분석의견

2017년 구축한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부적절하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동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의 정책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시스템이 구축된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총 186건의 건의만이 온라인상에 게재되어 월 평균 6건 수준의 매우 저조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자문위원의 수가 2만여 명(17기 1만 9,947명, 18기 1만 9,710명, 19기 1만 9,0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동 시스템을 통한 건의가 연간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동 시스템을 구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홍보 및 활용 노력에 소홀하였음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월별 실적 현황(2017~2019년)]

(단위: 건)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7	-	-	17	8	1	5	0	1	17	4	9	2	64
2018	6	4	9	15	19	4	7	5	5	6	4	3	87
2019	3	7	5	3	2	9	2	4	-	-	-	-	35
합 계													18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온라인 시스템을 홍보하고 활용을 권장하였으나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건의 방식을 선호하는 고령의 자문위원들이 대다수여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17, 18기 자문위원 중 약 20%, 19기 자문위원 중 약 30%(4,777명)가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45세 이하의 청년 자문위원임에도 이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문위원들의 시스템 활용을 권장·안내하고, 충실한 내용의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토론 및 논의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다. 국내에는 시·도 및 이북5도에 18곳의 지역회의와 기초자치단체에 228곳의 지역협의회 등 총 246곳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가 있다.

246곳 중 인천 지역회의, 부산 기장군 지역협의회, 충남 예산군 지역협의회를 제외한²⁾ 243곳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가 행정재산인 시·도청 및 시·군·구청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중 39곳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는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해당 행정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무실 운영 현황]

구분	행정재산(A)		비행정재산(B)	합계 (A+B)
	사용허가 받음	사용허가 없음		
개수(개)	204	39	3	246
	243			

주: 2019년 8월 말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인천 지역회의, 부산 기장군 지역협의회, 충남 예산군 지역협의회는 사유 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나. 분석의견

사용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입주하고 있는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무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³⁾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행정재산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9년 8월 말 기준 39곳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가 사무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으나,⁵⁾ 이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될 수 없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무실 현황]

연번	구 분	위 치	연번	구 분	위 치
1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8층	21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보건소5층
2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5층	22	대구 달성군	달성군청본관4층
3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청4층	23	인천 미추홀구	인천미추홀구의회 건물
4	서울 중랑구	중랑구청2층	24	인천 서구	인천서구의회건물
5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12층	25	인천 강화군	강화군청5층
6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4층	26	경기 고양시	고양시청1층
7	서울 도봉구	도봉구청3층	27	경기 양주시	양주시사회단체사무실건물층
8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본관3층	28	강원지역회의	강원도청신관7층
9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본관2층	29	강원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4층
10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청6층	30	강원 횡성군	횡성군의회3층
11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4층	31	강원 평창군	평창군청4층
12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2층	32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8층
13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본관건물	33	전북 익산시	익산시청내별관1층
14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8층	34	전북 김제시	김제시청 시의회
15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8층	35	전북 고창군	고창군청6층
16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2층	36	전북 부안군	부안군청5층
17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본관5층	37	전남 여수시	문수청사3층
18	대구지역회의	대구시청별관104동	38	전남 영암군	영암군청의회1층
19	대구 동구	동구청본관5층	39	경북 안동시	안동시민회관2층
20	대구 수성구	수성구청본관4층	-		

주: 1. 2019년 8월 말 기준

2. 지역회의라고 표기되지 않은 곳은 지역협의회를 의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위원회



국방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방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6조 2,50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571억원(7.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456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265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97억원, 군인복지기금 8,483억원, 군인연금기금 3조 5,305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국방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040,676	1,510,408	1,510,408	1,871,806	361,398	23.9
- 일반회계	238,514	224,949	224,949	245,584	20,635	9.2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36,417	792,141	792,141	926,543	134,402	16.9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65,745	493,318	493,318	699,679	206,361	41.8
기 금	1,160,243	4,283,101	4,283,101	4,378,837	95,736	2.2
- 군인복지기금	521,966	856,372	856,372	848,333	△8,039	△0.9
- 군인연금기금	638,277	3,426,729	3,426,729	3,530,504	103,775	3.0
합 계	2,200,919	5,793,509	5,793,509	6,250,643	457,134	7.9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국방부

국방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5조 2,29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1,208억원(6.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0조 4,314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558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338억원, 군인복지기금 6,421억원, 군인연금기금 3조 4,661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국방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7,002,902	29,098,225	29,098,225	31,120,961	2,022,736	6.9
- 일반회계	26,435,621	28,383,235	28,383,235	30,431,375	2,048,140	7.2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42,010	394,473	394,473	355,835	△38,638	△9.8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25,271	320,517	320,517	333,751	13,234	4.1
기 금	3,742,009	4,010,161	4,010,161	4,108,184	98,023	2.4
- 군인복지기금	521,262	647,157	647,157	642,057	△5,100	△0.8
- 군인연금기금	3,220,747	3,363,004	3,363,004	3,466,127	103,123	3.1
합 계	30,744,911	33,108,386	33,108,386	35,229,145	2,120,759	6.4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국방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국방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방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8,71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614억원(23.9%)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56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265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97억원이다.

[2020년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3,273	224,949	224,949	245,584	20,635	9.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13,397	792,141	792,141	926,543	134,402	16.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06,145	493,318	493,318	699,679	206,361	41.8
합 계	1,632,815	1,510,408	1,510,408	1,871,806	361,398	23.9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35조 87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4,782억원(7.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조 4,612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9,265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97억원이다.

[2020년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9,220,829	31,323,761	31,323,761	33,461,165	2,137,404	6.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48,112	792,141	792,141	926,543	134,402	16.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42,197	493,318	493,318	699,679	206,361	41.8
합 계	30,211,138	32,609,220	32,609,220	35,087,387	2,478,167	7.6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국방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조 3,788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957억원(2.2%)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군인복지기금 8,483억원, 군인연금기금 3조 5,305억원이다.

[2020년도 국방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군인복지기금	1,200,979	856,372	856,372	848,333	△8,039	△0.9
군인연금기금	3,295,977	3,426,729	3,426,729	3,530,504	103,775	3.0
합 계	4,496,956	4,283,101	4,283,101	4,378,837	95,736	2.2

주: 1. 총계 기준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국방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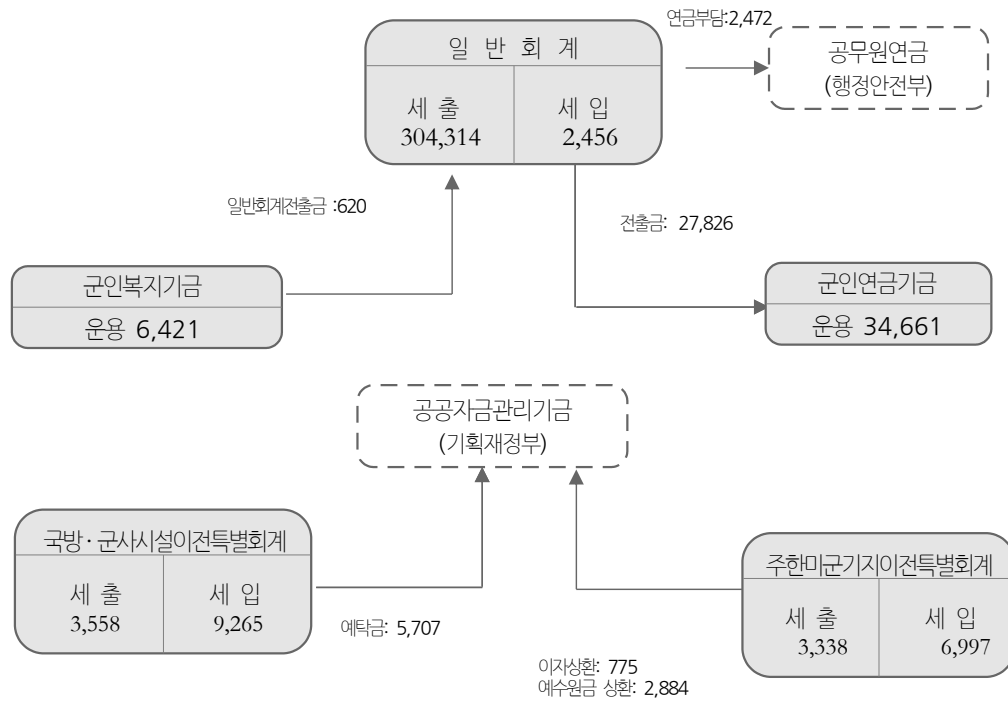
2020년도 예산안의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7,826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472억원이 전출되며,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 620억원이 전출된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707억원을 예탁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경우 3,659억원의 원리금 상환(원금 2,884억원, 이자 775억원)이 발생한다.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2020년도 국방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전·평시 우리 군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첨단무기의 장비유지비를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인 10.4% 증액하는 등 군수·시설 등 군사력 운용 제반여건을 강화하고, ②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첨단 과학기술군에 적합한 간부·군무원 중심으로 국방인력구조를 개편하고 AI, 빅데이터, 드론기술 등 첨단기술의 국방운영을 접목하는 데 투자하였다 (과학화훈련 601억원 → 769억원, 드론봇 전투실험 69억원 → 76억원). ③ 또한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병 봉급(병장 월 41만원 → 56만원) 및 1인당 급식단가를 6%인상하고(일 8,012 → 8,493원), 장병의 자율적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을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 전반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였다.

한편 ④ 장병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군과 지역사회 간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교체(2,379대, 1,885억원), 사용하지 않는 군 유희시설의 철거(2,432개소, 1,078억원), 해·강안 경계 과학화 및 불필요한 철책의 철거(166km, 2020년 완료) 등을 추진한다.

2020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방부가 부사관의 전투역량강화를 위해서 2020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모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부사관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각 소속부대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사항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들의 신규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

둘째,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은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부적절하므로, 국방부는 사업내용을 분리하고 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실시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 기반의 면접체계 활용 사업은 온라인 면접의 특성상 충분한 지원자 검증이 제한된다는 점, 면접 결과의 객관성 담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지역 중심의 접종대상 확대만을 골자로 하는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대 보급 사업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백신 확대 보급에 앞서 체계적인 접종대상 선정 기준 설정 및 발병자 식별·상급병원 후송체계 보완 등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한 강화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체계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107억원 규모이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사업 중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미래부대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39개 부대의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방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1개)	육군 부대개편 5차	10,659
합 계		10,659

자료: 국방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특수피복, 기동장비(획득), 장비유지 사업 전반(기동~특수), 과학화훈련,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시설 유지관리,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사업 등이 있다.

① 특수피복 사업에는 보병의 전투력과 생존성 확보를 위한 방탄복, 특수피복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되었고, ② 기동장비 사업에는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노후경유차 2,379대를 교체하고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등의 내역이 반영되었다. ③ 장비유지 사업들은 F-35A,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전력의 유지보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대폭 증액되었고, ④ 과학화훈련,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사업의 증액은 전방사단 소대급 마일즈장비 보급 확대(2019년 9식, 2020년 21식 등), 군·사단급 과학화훈련장 건설 지속 추진(2020년 2개소) 등 교육훈련의 첨단화, 정예화 추진의 영향을 받고 있다. ⑤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사업의 증액은 대부분 2019년도에 대폭 신규 반영한 생활관 부속 취사식당의 공사비(131동 916억원)이며, ⑥ 시설유지관리 사업의 증액은 유지보수비의 현실화(7,179억원 → 8,211억원 / 적정수준 '21년 9,179억원)가 주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증액은 2019년에 타결된 10차 SMA협정상의 인건비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국방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7개)	증/특식	117,634	117,634	127,708	10,074	8.6
	기본피복	350,667	350,667	363,175	12,508	3.6
	특수피복	153,730	153,730	190,392	36,662	23.8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183,670	183,670	213,343	29,673	16.2
	정보체계개발유지	84,659	84,659	109,043	24,384	28.8
	정보보호	55,565	55,565	71,942	16,377	29.5
	의무물자확보	96,465	96,465	110,785	14,320	14.8
	의무시설개선	16,432	16,432	24,622	8,190	49.8
	기동장비	210,997	210,997	237,845	26,848	12.7
	화력장비	21,647	21,647	42,591	20,944	96.8
	통신전자장비	52,859	52,859	67,022	14,163	26.8
	특수장비	354	354	3,944	3,590	1,014.1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	22,719	22,719	30,468	7,749	34.1
	물자유지	33,994	33,994	44,382	10,388	30.6
	기동장비(장비유지)	807,476	807,476	861,264	53,788	6.7
	화력장비(장비유지)	136,660	136,660	152,304	15,644	11.4
	항공장비(장비유지)	1,237,147	1,237,147	1,410,641	173,494	14.0
	함정장비(장비유지)	378,054	378,054	433,084	55,030	14.6
	특수장비(장비유지)	271,938	271,938	299,712	27,774	10.2
	난방연료	160,976	160,976	176,163	15,187	9.4
	장비연료	560,861	560,861	582,217	21,356	3.8
	함포교육용탄약	62,469	62,469	73,049	10,580	16.9
	탄약정비	101,890	101,890	113,671	11,781	11.6
	자기계발교육	14,865	14,865	23,334	8,469	57.0
	과학화훈련	60,076	60,076	76,863	16,787	27.9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167,224	167,224	193,505	26,281	15.7
	작전상황연습	18,841	18,841	29,894	11,053	58.7
	교육정책지원	1,114	1,114	1,645	531	47.7
	장병 복무 적응 지원	22,342	22,342	31,764	9,422	42.2
	병영생활관	103,848	103,848	121,312	17,464	16.8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133,549	133,549	239,080	105,531	79.0
	관사및간부숙소	185,317	185,317	204,448	19,131	10.3
	정비 및 보급시설	196,286	196,286	230,855	34,569	17.6
	일반지원시설	689,947	689,947	720,084	30,137	4.4
	공군 활주로 재포장	46,946	46,946	68,471	21,525	45.9
	작전지휘부 시설교체 (강릉기지)	2,055	2,055	12,072	10,017	487.4
	777사령부 작전 및 행정 시설 신축	5,667	5,667	25,116	19,449	343.2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시설유지관리	905,207	905,207	1,036,067	130,860	14.5
	예비전력운영지원	43,143	43,143	63,186	20,043	46.5
	국군대전병원 사업 및 지원비	7,489	7,489	10,716	3,227	44.1
	국군의학연구소 사업 및 지원비	1,086	1,086	1,767	681	62.7
	인건비	378,049	378,049	500,500	122,451	32.4
	군수분야	147,714	147,714	167,400	19,686	13.3
	정책기획지원	2,376	2,376	5,791	3,415	143.7
	민간보상	19,311	19,311	34,601	15,290	79.2
	국방행사지원	12,392	12,392	17,031	4,639	37.4
	법무정책지원	1,321	1,321	1,351	30	2.3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5개)	오산기지영외탄약고이전	1,765	1,765	18,951	17,186	973.7
	육군 부대개편 3차	17,084	17,084	165,276	148,192	867.4
	부사관학교 훈련장 이전	98	98	1,221	1,123	1145.9
	육군 부대개편 4차	10,837	10,837	34,082	23,245	214.5
	육군 부대개편 5차	0	0	10,659	10,659	순증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2개)	평택기지이전사업	252,485	252,485	268,316	15,831	6.3
	환경조사 및 치유	8,980	8,980	21,679	12,699	141.4
군인복지 기금 (2개)	복지시설운영	325,159	325,159	348,536	23,377	7.2
	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32,809	32,809	45,009	12,200	37.2
군인연금 기금 (2개)	퇴직급여	2,936,996	2,936,996	3,021,939	84,943	2.9
	퇴직수당	313,221	313,221	325,749	12,528	4.0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2)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방부

가. 현 황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26일 2018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병장 기준 21만 6,000원 → 40만 5,700원)하고, 이후 2020년에는 40% 수준,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병 봉급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7년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하는 경우 병 봉급은 병장 기준 2020년에 54만 900원, 2022년에 67만 6,115원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두 번째 해인 2020년 병 인건비 사업¹⁾의 예산안을 전년 대비 4,045억 1,600만원(23.9%) 증가한 2조 964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2020년도 병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 인건비	1,741,239	1,691,963	1,691,963	2,096,479	404,516	23.9
병 기본급여	1,646,351	1,596,666	1,596,666	1,977,501	380,835	23.9
특수업무수당	27,374	29,545	29,545	28,616	△929	△3.1
상근예비역 기본급여	67,514	65,752	65,752	90,362	24,610	37.4

자료: 국방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01-153

[2020년도 병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원)

구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2017년	216,000	195,000	176,400	163,000
1차 인상(2018년)	405,700	366,200	331,300	306,100
2019년	405,700	366,200	331,300	306,100
2차 인상(2020년)	540,900	488,200	441,700	408,100
2021년	540,900	488,200	441,700	408,100
3차 인상(2022년)	676,115	610,173	552,023	510,089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를 병에 국한하지 않고 전 부처 차원에서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20년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4,045억원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병에 국한된 것으로, 병 봉급 인상과 연계되어 봉급이 인상되는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무관후보생(사관후보생·사관생도·간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관련 재정소요도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44,575명) 봉급을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는데 봉급 인상에 따라 각 부처에서 증액분을 편성하였고, 의무소방대원(1,024명)과 의무경찰(11,709명)의 봉급도 각각 소방청과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증액 편성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봉급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 무관후보생(사관후보생 980명, 사관생도 3,530명 및 ROTC 10,020명)과 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2,720명 및 부사관 학군단 320명)의 봉급도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867억원, 의무소방대원 12억원, 의무경찰 170억원, 무관후보생 93억원, 부사관후보생 44억원 등 총 1,186억원이 증액 반영되었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병 이외의 추가 재정 소요]

(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사회복무요원	44,575	2,149	3,016	867
의무소방대원	1,024	47	59	12
의무경찰	11,709	509	679	170
무관후보생	14,590	394	487	93
부사관후보생	3,040	135	179	44
계	74,938	3,234	4,420	1,186

주: 각 인원 수는 부처별 2020년 예산안 편성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따라서 국방부는 전반적인 국가재정 관리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를 병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대원 등의 봉급 인상분까지 포함함으로써 전 부처의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명확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 봉급 인상에 따라 병 급여 중 특수업무수당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격오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2)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은 격오지 근무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수당을 의미하며, 병 급여 중 특수업무수당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병 봉급 인상에 따라 병 급여 중 특수업무수당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격오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비율 현황]

구 분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인상 전 (2017년)	인상 후 (2022년)	인상 전 (2017년)	인상 후 (2022년)	인상 전 (2017년)	인상 후 (2022년)	인상 전 (2017년)	인상 후 (2022년)
봉급대비 비율(%)	11.5	6.1	35.9	11.5	15.1	8.0	20.5	6.6

자료: 국방부

[병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구 분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지급액	·갑호: 2.5만원 ·을호: 2만원	·을1호 : 8.5만원 ·을2호 : 5.5만원	·병호: 32,700원	·을4호 : 4만원
지급 기준	·갑호: 비무장지대, 울릉도, 독도 및 서해 5도 근무자 ·을호: 비무장 지대와 접한 초소, 해안초소 근무자, 해발 800m이상 고지대 근무자	·을1호 :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 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을2호 :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 레펠·패스트로프 훈련을 한 사람	·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근무지원정, 수륙양용 궤도차량 승무원	·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병사

자료: 국방부

가. 현 황

부대자체교육 사업¹⁾은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각 군 사령부 등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교육재료비, 강사료, 교육 비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병과학교 등 군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안보지원, 정보, 사이버 부대 등 소규모 특기의 직무 보수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17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부대자체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부대자체교육	1,613	1,524	1,524	1,739	215	14.1
육군 부서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0	0	0	226	226	순증
해군 부서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0	0	0	67	67	순증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육군 부서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사업과 해군 부서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들은 국방개혁 2.0에 의해 인력비율이 증가되는 부서관의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육군 부서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초빙강사료, 급량비 등을 포함한 2억 2,600만원이고, 해군 부서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초빙강사료, 민간연수시설 임차료 등을 포함한 6,700만원이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2-303

나. 분석의견

국방부가 부사관의 전투역량강화를 위해서 2020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모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부사관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각 소속부대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사항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들의 신규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다.

육군 부사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사업은 각 부대별(7개 군단 별)로 3~5일간 실시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부사관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정신교육,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훈련 및 전투지휘 훈련, 자긍심 고취를 위한 초빙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모든 육군 부사관은 기본양성과정을 거쳐 임관한 이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 시기는 계급별 해당 계급 진급 직후이다.

[육군 부사관 보수교육 체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관
초급리더과정	하사	각 병과학교 및 부사관학교
중급리더과정	중사	각 병과학교
고급리더과정	상사	각 병과학교 및 부사관학교

자료: 국방부

그런데 육군 부사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하사를 대상으로 하는 초급리더과정의 교육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중복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육군 부사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사업 프로그램 중 부사관 임무와 역할, 명예와 전통 등에 대한 교육은 초급리더과정의 리더십 및 정신교육과 유사하며, 분·소대 전투지휘 훈련 및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훈련 또한 양 교육과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동 신규 내역사업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편제장비 운용·정비 요령, 주임원사 간담회 등의 교육과정은 모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초급리더과정의 교육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육군 부사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사업 프로그램과 초급리더과정의 비교]

초급리더과정(예시)		육군 부사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사업
군 리더십 / 정신교육	리더십	부사관 임무와 역할
	정신교육	명예와 전통
체력단련		-
전투기술	전투분대장 자격인증	장병기본훈련 전문 교관화 교육
전투지휘	분·소대전투(공격)	분·소대 전투지휘
	분·소대전투(방어)	
	분·소대전투(종합훈련)	
	국지도발대비작전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훈련 전·평시 출동준비태세 및 작전계획 토의
무기·장비 조작 능력	편제화기	편제장비 운용·정비 요령
	개인화기	
	통신 및 감시장비	
	지뢰 / 철조망	
기타과업	지휘실습	분·소대 전투지휘
	참모업무	-
	군사보안	-
	군복무설계교육(원격교육)	초빙교육(창의적 군인되기 프로젝트)
	지휘예비 / 지휘관 시간	주임원사 간담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군 부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보수교육과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군 부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반기 1회 3일간 진행되는데, 해군은 각 부대(14개 전단) 주임원사 주관 중·하사 35~40명을 대상으로 주제별 토의·발표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시대 부사관의 역할과 자세, 리더십 초빙교육 등 정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모든 해군 부사관 또한 기본양성과정을 거쳐 임관한 이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 시기는 계급별 해당 계급 진급 직후이다.

[해군 부사관 보수교육 체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관
초급반	하사	각 병과학교 및 교육훈련전대
중급반	중사	각 병과학교
고급반	상사	각 병과학교 및 부사관학교

자료: 국방부

해군 부사관 보수교육의 교육내용을 보면 병과와 무관히 초급반 기준 정신교육 및 리더십 교육이 약 30시간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해군 부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군 부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과 초급반 과정의 비교]

초급반(예시)	해군 부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리더십	리더십 초빙교육
정신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 부사관의 역할과 자세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가 부사관의 전투역량강화를 위해서 2020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모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부사관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2020년 예산안 신규 편성 프로그램은 신규 전입 부사관이 소속된 각 부대의 고유한 임무와 작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제 작전상황에서의 임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대별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각 병과학교에서 실시하는 일반·공통적인 내용의 보수교육 과정과는 차별화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과학교 보수교육 후 각 부대에 전입한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해당 부대의 고유한 임무와 작전 개념 숙지, 작전실행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은 해당 부대에서 전입 장병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훈련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도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해야 할 특별한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교육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해야만 한다면, 오히려 각 부대에서 장병들의 임무수행 능력 및 작전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효과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들을 신규로 편성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부사관 보수교육 과정을 보완·강화하고 각 부대의 전입 장병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사관의 전투역량강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육군 부사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사업과 해군 부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소규모 특기의 직무 보수교육이라기보다는 육군 부사관학교 및 병과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부대자체교육 세부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의 사업명 변경, 계획 보완 및 사전연구 수행 후 추진 필요

가. 현 황

국방부는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¹⁾의 2020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재난안전통신망²⁾을 기반으로 첨단 ICT 기술을 부대·군수·의무관리, 교육훈련, 경계작전 등에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9억 9,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2024년이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1개 연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430-01목) 25억 4,800만원으로, 하드웨어 구축에 14억 5,400만원, 소프트웨어 구축에 10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160,051	183,670	183,670	213,343	29,673	16.1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구축 추진	0	0	0	2,548	2,548	순증

자료: 국방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131-301

2)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사고 계기,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통합 지휘 및 상호공조가 가능한 전국 규모의 광대역 공공안전통신망(PS-LTE: Public Safety Long-Term Evolution)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다.

* 구축계획: 1단계(18년) 중부권 5개 시·도, 2단계(19년) 남부권 9개 시·도, 3단계(20년) 수도권 3개 시·도

[2020년 재난안전망 기반하 첨단ICT 구축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하드웨어	• ICT 구축(DB서버, 어플리케이션, 관리용PC, 라우터, 단말기 등): 737 • 모바일 시범체계 구축(통합서버, 단말기, 방화벽 등): 717	1,454
소프트웨어	• ICT 구축(총기/탄약 GW, IoT통합 플랫폼, 경계작전/교육훈련/안전관리 소프트웨어, 통합관제 등): 924 • 모바일 시범체계 구축(라이선스, 암호모듈 등): 170	1,094
합 계		2,548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은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부적절하므로, 국방부는 사업내용을 분리하고 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동 사업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기반으로 첨단 ICT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사실상 재난안전통신망은 국가적 재난 대응 및 관리를 위한 망으로서, 동 사업 중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내용은 재난상황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단말기 500대와 지령대 20대 구입에 한하며, 첨단 ICT 구축 사업은 재난안전통신망과는 별도로 상용망 및 전술망에 신규 서버 및 플랫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예산안의 사업명이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효과적인 사업관리 및 사업내용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성과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① ‘재난안전통신망 서버·단말기 도입 사업’과 ② ‘첨단 ICT 활용 육군 스마트 부대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은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실시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 내용 중 재난안전통신망 서버·단말기 도입은 국방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으로서 재난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나, 첨단 ICT 활용 육군 스마트 부대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국방부는 첨단 ICT 활용 육군 스마트 부대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①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장병들의 생체정보(체온, 심박수, 운동량)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사전 예측, 사고발생시 긴급조치를 통해 비전투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② 취약지역 등 병영부조리 우려지역을 설정하여 접근 통제를 하고 접근 시 경보 발령 및 해당지역 확인 등을 통해 병영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으며, ③ 첨단 ICT(AR/VR 등)를 활용하여 사격, 소부대 교육훈련, 사(여)단급 훈련장을 조성하면 소음감소 등을 통해 국민과의 갈등 해소가 가능하고, ④ 총기·탄약관리 및 경계근무 등을 자동화하여 부대관리 인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 장병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웨어러블 기기 및 가상훈련을 위한 AR/VR 기기와 관련된 확보·보급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동 기기들의 확보·보급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스템 구축만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장병들이 동 기기를 24시간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야 국방부가 예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병 복장규정 등의 개정 계획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AR/VR 등의 기기를 활용한 사격, 교육훈련 등은 실제 훈련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AR/VR 훈련장 조성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용역 등의 사전 연구를 선행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³⁾

또한 병력에 의한 경계근무를 레이더, 센서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하는 경우 전력 공급 차단 등의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불가하여 추가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ICT 기술을 통해 병력에 의한 경계근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1개 연대의 시범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 동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실시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3) 국방부에 따르면 AR/VR 훈련장이 갖는 효과성에 대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실제 훈련장이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여 전투원이 몰입감을 가지고 전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위험한 환경에서 직·간접적인 체험훈련을 통해 전투원을 보호하면서 전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AR/VR 훈련장’ 자체의 효과성에 불과하며, 국방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성, 훈련장 구성에 따르는 장소선정 및 재원확보 문제, 국만과의 갈등 해소 측면에서의 시급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효과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육군 부대개편 5차¹⁾ 사업은 「국방개혁 2.0」 부대개편 추진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시작되는 39개 부대 구조개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539억 5,100만원이다.

2020년 예산안에는 106억 5,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36억 3,500만원, 실시설계비(420-02목) 69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420-05목) 2,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도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육군 부대개편 5차	-	-	-	10,659	10,659	순증
기본조사설계비 (420-01목)	-	-	-	3,635	3,635	순증
실시설계비 (420-02목)	-	-	-	6,996	6,996	순증
시설부대비 (420-05목)	-	-	-	28	28	순증

자료: 국방부

구체적으로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에 해당하는 부대는 1·2·5군단 직할부대, 7·21사단, 향토사단 32·39·53사단, 춘천병원 등 39개이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131-477

[2020년도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 부대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반영사항	2020년 예산안
39사단 117여단 예비군훈련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398
39사단 118여단 예비군훈련대		182
39사단 119여단 예비군훈련대		162
39사단 119여단 2대대		131
39사단 119여단 3대대		207
53사단 127여단 예비군훈련대		355
53사단 126여단 예비군훈련대		476
53사단 126여단 5대대		171
53사단 127여단 1대대		197
32사단 97여단 예비군훈련대		172
32사단 98여단 예비군훈련대		333
32사단 99여단 예비군훈련대		432
1군단 포병여단 정비근무대, A/B포병대대		390
1군단 천마대대		159
1군단 대공포대대		191
1군단 예비군훈련대		520
2군단 포병여단 정비근무대		67
2군단 공병여단 정비근무대, 장비중대, 통신중대		225
2군단 교량대대		171
2군단 방공단본부, 본부대, 지원중대, 대공포대대		165
2군단 예비군훈련대		231
7사단 본부		294
7사단 직할대개편		418
7사단 사단 군수지원대대		141
7사단 3여단 군수지원대대, 포병대		385
7사단 5여단 군수지원대대, 정보중대		320
7사단 5여단 포병대		132
7사단 8여단 군수지원대대, 포병대		231
5군단 포병여단 A,B포병대대 개편		324
5군단 천마대대 개편		256
5군단 대공포대대 개편		309
13군지단 본부 및 16보급대대		610
13군지단 606수송대대		273
21사단 본부		260
21사단 군수지원대대		239
21사단 63여단 군수지원대대, 포병대		155
21사단 65여단 군수지원대대, 포병대		317
21사단 66여단 군수지원대대		122
춘천병원		538
총계		10,659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15년부터 육군 부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 부대개편 1차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258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기계화사단, 37사단, 52사단, 55사단을 개편하는 것이고, 육군 부대개편 2차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122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3군단 3개 직할부대, 7군단 5개 직할부대, 2사단 3개 직할부대, 8사단, 20사단, 51사단 167여단, 56사단, 1·2·3·5기갑여단, 20기보여단, 특임여단을 개편하는 것이다.

육군 부대개편 3차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484억원을 투입하여 3군단 2개 직할부대, 7군단 3개 직할부대, 1군단 2개 직할부대, 수도군단, 51사단 2개 여단, 30기갑여단, 17·12사단·홍천병원 등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육군 부대개편 4차 사업은 총사업비 3,606억 5,200만원 규모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지상작전사령부 직할 3개 부대, 1군단 직할 1개 부대, 3군단 직할 5개 부대, 5군단 직할 1개 부대, 1군지사 직할 3개 부대, 8·22·35·36사단 예하 13개 부대, 강릉병원 등 27개 부대이다.

나. 분석의견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은 과거 육군 부대개편 1·2·3차 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첫 해에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과거 2015년 육군 부대개편 1차 사업의 첫 해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 115억 1,500만원 중 66억 6,200만원을 이·전용 등으로 감하고 13억 5,700만원은 이월함으로써 6억 9,6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부진(6.0%)하였다.

2차 사업의 경우 사업 첫 해인 2017년도의 집행실적은 1차 사업 대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예산액 160억 6,700만원 중 84억 800만원만 집행하여 약 50% 수준의 예산이 이월 및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사업의 경우 사업 첫 해의 예산액 166억 600만원 중 10억원을 이·전용 등으로 감하고 48억 9,600만원은 이월하는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47.7%로 저조하며, 이는 2차 사업 대비 악화된 수치이다.²⁾

2) 부대개편 4차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7월말 기준 집행률은 56.8% 수준(108억 3,700만원 중 61억 5,100만원 집행)이며, 설계의 연내 미종료 등에 따른 이월액과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 등은 현재 상황에서 파악이 어려워 전체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대한 분석이 제약된다.

[육군 부대개편(1·2·3차) 사업 첫 해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액(B)	집행률(B/A)
육군 부대개편 1차 (2015년)	11,515	△6,662	4,853	1,356	2,801	697	6.1
육군 부대개편 2차 (2017년)	16,067	165	16,232	3,099	4,725	8,408	52.3
육군 부대개편 3차 (2018년)	16,606	△1,000	15,606	4,896	3,268	7,442	47.7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수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범위 확정 지연, 수정 등으로 설계비가 이월되어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부대개편 사업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진행되므로, 사업이 첫 해에 지연되는 경우 향후 연차별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사유 등을 참고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간부양성교육¹⁾ 사업은 장교 및 준사관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과 전투기술능력을 습득하고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34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간부양성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간부양성교육	29,987	30,692	30,692	34,555	3,863	12.6
육군3사 합동교육 실시	0	0	0	171	171	순증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육군3사 합동교육 실시 사업은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공군사관학교 및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와의 합동교육을 통해 타군 이해, 합동작전 필요성 인식,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1억 7,100만원이다.

[2020년 육군3사 합동교육 실시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일반수용비(210-01목)	사무 및 행사용품 (843명×20천원×1회)	17
급식비(210-04목)	육군3사 생도 식사(521명×8천원×6회)	25
임차료(210-07목)	버스임차(16대×5일×650천원)	52
기타운영비(210-16목)	친선의 밤 만찬 행사(1,686명×30천원), 감미품 지원	59
국내여비(220-01목)	육군3사 생도 숙박	18
합 계		171

자료: 국방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1-302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육군3사 합동교육 실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방부는 사관학교 합동교육 및 육군3사관학교 합동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학군 및 학사장교 등 다른 간부양성과정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타군 이해, 인적 네트워크 강화, 합동작전 필요성 등을 목적으로 동계기간에 각 2주씩 사관학교 합동교육(1~3학년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1학년 대상 교육은 육군사관학교가, 2학년은 해군사관학교가, 3학년은 공군사관학교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순항훈련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육군3사 합동교육은 기존의 사관학교 합동교육과는 별개로 실시되며, 국방부는 육군3사관학교 3학년 대상 2개조로 구분하여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와의 합동교육을 각 2일씩 총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회의 2018년 국정감사 및 2019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관학교 합동교육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검토의견²⁾이 있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2019년부터 사관학교 합동교육에 참여³⁾하고 있으며,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학년체계가 상이(2년제 대학 졸업 후 3학년으로 편입)하고 생도인원이 다수(학년별 550여명)임에 따라 기존 사관학교 합동교육에의 통합 편성·참여가 제한되어 2020년부터 별도의 합동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군 및 학사장교 등 타 간부양성과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학군 및 학사장교는 양성교육 기간이 16주에 불과하며 교육시기가 상이하여 합동교육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나, 각 군 장교의 합동성 증진은 사관학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육군3사관학교와 같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2018.10, pp.214~215.

3) 시기 및 인원: 1학년(1.21.~2.1. / 84명), 3학년(1.21.~2.1. / 80명), 2학년(11월 시행 예정)

둘째, 친선의 밤 만찬 행사 등을 위한 예산을 기타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해당 예산의 비목을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육군3사 합동교육 중 친선의 밤 만찬 행사 및 감미품 지원을 위해 5,900만원의 예산을 기타운영비(210-16목)으로 편성하였는데,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기본적인 조직운동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의 비서실 운영비,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에 해당하는 예산비목⁴⁾으로서, 동 사업의 만찬 행사를 위한 예산을 기타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예산을 만찬 행사 등을 위한 비목인 업무추진비(240목) 등으로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4)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9. 4., pp.343~344.

장병 주도형 맞춤형 디지털 교재 제작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정훈문화활동 사업¹⁾은 장병들을 위한 정훈교육, 문화예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493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정훈문화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훈문화활동	42,203	46,437	46,437	49,307	2,870	6.2
장병 주도형 맞춤형 디지털 교재 제작	0	0	0	387	387	순증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장병 주도형 맞춤형 디지털 교재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는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전투현장이나 역사적 사실 등을 그래픽이나 360° 영상으로 구현한 정신전력 교재를 제작하여 장병주간정신전력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3억 8,700만원으로, 콘텐츠 개발 및 전용 앱 운용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 3억 8,200만원과 국내여비(220-01목) 및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5-301

[2020년 장병 주도형 맞춤형 디지털 교재 제작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일반용역비 (210-14목)	• 콘텐츠 활용 가이드 개발: 12개과 × 36회 × 7,000천원 - 실감형 콘텐츠, 워크시트(교재디자인, 책자 등), 상호작용 도구 등	302.4
	• 전용 앱(APP) 운용 및 관리 - 2개 운영체제(안드로이드, iOS용) × 1SET × 4,000천원	80.0
국내여비 (220-01목)	• 콘텐츠 개발(촬영, 편집 등) 및 시연 • 디지털 교재 사용 부대 방문: - 1명 × 40회 × 40천원(1일 일비, 식비)	1.6
관서업무추진비 (240-02목)	• 회의 소집 : 2,400천원(20명 × 10천원 × 12회) • 사업 성과분석 등(400천원: 20명 × 10천원 × 2회)	2.8
합 계		386.8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장병 주도형 맞춤형 디지털 교재 제작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주간정신전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총 12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별 교안과 동영상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동 신규내역 사업을 통해 각 주제에 맞는 체험 소재를 적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주제의 경우 고조선~조선시대 역사 현장 체험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장병 주간정신전력 교육 내용 및 디지털 교재 콘텐츠(안)]

장병 주간정신전력 교육 내용(2019.8 기준)		디지털 교재 콘텐츠(안)(예시)
일 자	주 제	
3. 20(수)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
4. 3(수)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고조선~조선 시대 역사 현장 체험
4. 10(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
4. 17(수)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
5. 1(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	-
5. 8(수)	북한군 군사전력과 군사능력	-
5. 15(수)	북한의 실상	-
5. 22(수)	튼튼한 안보를 위한 우리의 자세	-
6. 5(수)	국가와 군대	-
6. 12(수)	군대조직의 특성과 군대윤리	가상 전투 체험
6. 19(수)	이기는 군대와 참군인의 자세	전투현장
7. 3(수)	미래로 향하는 선진 국군	-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현재 각종 영화, 역사 드라마 등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기록이나 전투현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상황이라는 점, 해당 자료들을 접해 온 장병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사현장이나 전투현장을 단순히 그래픽이나 실감형(AR/VR) 영상으로 구현한 콘텐츠가 정신교육의 효과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²⁾ 동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방부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 후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을 개발할 계획인데, 동 디지털 콘텐츠는 장병 주간정신전력 교육에 활용되는 자료이고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상시 휴대하면서 교육을 실시하

2) 교육 효과성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일부 부대(육군 5사단, 육군 11사단) 대상 시범 적용 후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병 학습자의 만족도 및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이나, 장병 학습자 대상 면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동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용 앱을 개발전용 앱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용 앱 개발 시 앱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용역비가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간정신전력 교육 시 VR 체험 후 전용 앱에 있는 AR 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자료(동영상, 사진 등)를 개인별로 자율 학습하고 퀴즈를 통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주간정신전력 교육 주제의 성격상 지식 습득·암기보다는 국가관·안보관·군인정신의 함양이 주된 목적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과 그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인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2020~2023년 간 총 10,000대의 실감형 콘텐츠 시청 장비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동 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원에 달하는 장비 보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연도별 실감형 콘텐츠 시청 장비 보급 계획(안)]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량	10,000대	1,000대	3,000대	3,000대	3,000대
소요 예산	20억원	2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비 고	-	격오지 부대 先 보급 (1개 대대 기준, 50대)		사·여단급 부대 → 직할부대 보급	

주: 2021년 이후 소요 예산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반영 예정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장병 주도형 맞춤형 디지털 교재 제작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방부는 인사정책지원 사업¹⁾의 2020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AI 기반의 면접체계 구축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면접체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AI기반의 면접기법 시범적용을 위한 체계 사용료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목) 6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20년도 AI 기반의 면접체계 활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인사정책지원	1,609	4,556	4,556	5,501	945	20.7
AI 기반의 면접체계 활용	0	0	0	616	616	순증

자료: 국방부

[2020년 AI 기반의 면접체계 활용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AI 기반의 면접체계 사용료	AI 기반의 면접기법 시범적용을 위한 체계 사용료(30,800명×20,000원) - 육군 21,000명, 해군 3,800명, 해병대 2,500명, 공군 3,500명	616

자료: 국방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9-306

국방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AI 기반의 면접체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음성, 표정, 어휘, 맥박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특성, 적합 직종, 업무역량(호감도, 대인관계, 긍정성, 성실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면접시스템으로, 민간의 일부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²⁾가 있다.

[AI 기반의 면접체계 과정]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0~2021년 기간 동안 민간에 구축된 시스템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면접체계를 시범적으로 활용한 후 우수인재 선발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검증하고, 이후 군 내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AI 기반의 면접체계 시범사용 계획]

- ① 기존 대면 면접평가와 병행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 정확도 검증
- ② 일반적인 질문지 외에 군에 필요한 인재 선발을 위한 질문지 구성, 활용
- ③ 초급간부 중 우수군무자들에 대하여 AI 기반 면접을 시행하여, 그 답변 패턴을 AI에 학습시킨 후 신규 간부 선발 시 우수인재 선발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
- ④ 기존 우수 대면 면접관들의 면접 평가 결과를 AI에 학습시킨 후, 신규 간부 선발 시 우수인재 선발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LG 유플러스,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이 AI 기반의 면접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AI 기반의 면접체계 활용 사업은 온라인 면접의 특성상 충분한 지원자 검증이 제한된다는 점, 면접 결과의 객관성 담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인재선발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에서 스펙 위주의 평가로 객관적인 평가가 제한되어 우수인재 선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AI 기반의 면접체계 구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② 인재선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³⁾

국방부는 일반적인 질문지 외에 군 특수성을 반영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해 군에 특화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온라인 면접의 특성상 미리 정해진 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만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가 도출될 뿐 면접 과정에서의 답변내용에 기초한 추가적·종합적인 질의가 불가능하므로 우수인재 선발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뿐만 아니라 잠재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합격 여부를 100% AI 면접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윤리적인 이유⁴⁾ 등으로 곤란하므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3단계로 진행되는 면접절차 중 일부에 대해 AI 면접체계를 활용하고, 최종 면접은 ‘사람이 대면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AI 면접체계가 기존 면접절차 중 일부에 대한 보완적 기능에 불과하다면, 동 체계의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AI 면접체계가 대체할 일부 면접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약 효과에 불과하며, 이 경우 동 사업을 추진할 만한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군 내 우수군무자 및 우수면접관’을 정의하는 객관화된 기준이 부재하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상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3) 추가적으로 국방부는 AI면접 분석자료를 면접관에게 제공하여 대면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면접의 실효성이 증대되고, 선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국방부는 기계가 사람의 당락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윤리적 논쟁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AI에 학습시키고자 하는 우수군무자의 특성 및 우수면접관의 면접평가 결과 자체가 근본적으로 편향적·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AI 기반의 면접체계가 담보할 수 있는 객관성의 수준은 기존 면접체계가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재선발 과정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 내 우수 면접관들의 면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면접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의무물자 확보 사업¹⁾은 예방중심의 군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백신 및 장병진료를 위한 필수 의약품 확보, 의료기재와 장비운영을 위한 소모품 확보, 안경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의무물자 확보 사업 중 의약품 확보 내역사업의 일환으로 신증후군출혈열²⁾ 백신을 구입하고 있는데,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의 확대 보급을 위해 2020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91억 4,900만원 증액된 9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보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의무물자 확보	84,964	96,465	96,465	110,785	14,320	14.8
의약품 확보	49,725	55,515	55,515	60,939	5,424	9.8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보	0	376	376	9,525	9,149	2,433.2

자료: 국방부

[2020년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보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113.7만개(기초·보강접종 물량) × 8,379원(단가)	9,525

자료: 국방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231-304

2) 신증후군출혈열

- 쥐 매개에 의한 급성발열성 질환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2016년 1.11(575명), 2017년 1.03(531명), 2018년 0.84(433명)
 - 우리나라 사망자 수: 2016년 3명, 2017~2018년 없음
- 백신 접종 방법: 총 3회 접종
 - 기초접종(1개월 간격 2회): 1개월, 2개월째
 - 보강접종(1회, 전년도 기초접종 후 1년 경과): 13개월 째

국방부는 2019년 이전까지 백신 접종대상은 ‘최근 3년간 환자발생 대대’ 또는 ‘예방접종 필요 부대의 장병’이었으나, 2019년 1월 군 내 신증후군출혈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2020년부터 접종대상을 ‘경기·강원권 전 부대 및 각 군별로 추가 선정한 위험지역 부대 장병’으로 확대함에 따라 백신 물량이 확대(대상자 3.5만 → 35.5만 명)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대 보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정 지역 중심의 접종대상 확대만을 골자로 하는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대 보급 사업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백신 확대 보급에 앞서 체계적인 접종대상 선정 기준 설정 및 발병자 식별·상급병원 후송체계 보완 등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야외 작전·훈련 간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군인에 대한 적정 수준의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군 내 특정 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기존 접종대상을 체계적인 기준 없이 대폭 확대하여 9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방부는 전방 격오지 부대 등은 중환자 처치가 가능한 민간병원 또는 군병원과의 거리가 이격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 시 위험도가 높으므로, 경기·강원권 전 부대 장병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강원권 부대가 아닌 지역이라도 야외활동 빈도가 높은 경우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가능성이 존재³⁾⁴⁾한다는 점에서, 접종대상을 단순히 경기·강원권 전 부대로 확대하기보다는 위험지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접종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3)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내 신증후군출혈열 발생률은 0.005%(연평균 약 30명)이다.

4) 2016~2018년 우리나라 지역별 신증후군출혈열 발생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지역 중 경기·강원 지역의 발생비율은 2016년 26.6%, 2017년 21.7%, 2018년 15.9%에 불과하다.(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www.cdc.go.kr))

또한 경기·강원권 격오지 부대라 하더라도 백신 접종 후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타 지역 부대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백신 확대 보급뿐만 아니라 발병자 식별 및 상급 민간·군 병원으로의 후송체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면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한 강화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체계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증후군출혈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3군감염병(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데, 동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에 해당한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울산시, 완주군, 서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인 등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한 신증후군출혈열 무료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⁶⁾

따라서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한 강화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 국방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대응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체계 하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증후군출혈열의 필수예방접종 필요 감염병 지정과 관련한 위 고시의 기한이 2019년 9월 22일⁷⁾이므로, 보건복지부는 동 고시의 개정 등 신속한 조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16. (생략)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4호, 2018. 10. 1)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6)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목적이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군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군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나, 체계적인 접종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7)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대 보급 계획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예방접종 체계 하에서 백신 확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대 보급 계획 및 증액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가. 현 황

화력장비 사업¹⁾은 EOD²⁾ 로봇, 활주로 폭발물 원격제거장치 등 폭발물처리반 장비와 쌍안경, 나침반 등 관측 및 방향유지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7% 증액된 425억 9,100만원이다.

[2020년도 화력장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화력장비	6,326	21,647	21,647	42,591	20,944	96.7

자료: 국방부

주요 증액 사유는 개인전투체계(위리어플랫폼)³⁾ 기반구축 내역사업의 보급물량 증가이며, 중기계획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보급 대상 부대가 증가⁴⁾하여 해당 소요분만큼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되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331-302

2)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 처리

3) 개인전투체계(위리어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실제작전에 투입되는 각개 전투원의 전투력 발휘 보장 및 생존성 향상을 위해 최신 성능의 전투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4)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개인전투체계 보급 계획(2019~2023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육 군	특전여단보병대대(2)		-	-	
	-	특공수색	-	향토사단 기동대대(12)	
		보병사단(12)			-
		기보사단(2)		-	-
해 병	신속기동·특수수색, 1사단수색대대, 헌병특경대		1,2사단, 연평부대, 6여단/9여단 보병		

자료: 국방부

[2020년도 화력장비 사업 내역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개인전투체계 기반구축	7,588	33,183	25,595
대테러 부대장비	10,046	6,914	△3,132
대대급 관측 및 방향유지장비	826	503	△323
특수전 및 경호·경비장비	298	261	△37
화력지원장비	2,889	1,730	△1,159
계	21,647	42,591	20,944

자료: 국방부

[2020년도 개인전투체계 기반구축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개인화기 주야조준경	2,162	3,930	10,700	19,159	8,538	15,229
전술레이저 표적지시기	2435	4,058	11,792	19,357	9,357	15,299
고성능확대경	1,729	3,930	8,560	19,159	6,831	15,229
분대지정사수 원거리조준경	186	339	1,066	1,908	880	1,569
특수작전용 칼	1,076	5,274	1,065	5,219	△11	△55
계	7,588	17,531	33,183	64,802	25,595	47,271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화력장비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향후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화력장비 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편성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집행률이 2014년 78.0%에서 2018년 52.4%로 점차 감소하는 추

세가 나타나고 있는 등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19년의 경우에도 7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10.9%에 불과하여 집행부진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2015~2019년 화력장비 사업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5	11,628	11,628	1,617	△726	12,529	9,149	78.7	1,759	1,612
2016	11,505	11,505	1,759	△3,036	10,228	8,813	76.6	782	632
2017	15,134	15,134	782	△2,583	13,334	10,852	71.7	1,127	1,355
2018	12,064	12,064	1,127	△4,830	8,361	6,326	52.4	1,340	695
2019.7	21,647	21,647	1,340	554	23,541	2,361	10.9	-	-

자료: 국방부

2018년 군별 화력장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EOD로봇의 경우 모든 군 및 해병대에서 계약지연 및 중개업체 구매에 따른 선금지급 제한⁵⁾으로 인한 예산 조정 또는 이월이 발생했으며, 육군에서는 업체 무응찰 또는 업체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업 취소가 다수 발생하였다. 해군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구매여건 변동(제조업체 계약 → 중개업체 구매)에 따른 선금지급 불가로 인해 전액 조정·이월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으며, 공군의 경우 타 장비의 계약잔액을 활용하여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는 등 당초 목표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5) 장비가 중개업체 구매로 획득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34조(선금의 지급)에 따라 선금지급이 불가능하다.

[2018년 화력장비 사업 세부 집행내역 중 계획 대비 집행변동 주요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분	장비명	계획		집행결과		계획 대비 집행변동 사유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육군	쌍안경	14	107	2	19	구매 수량 감소
	EOD로봇	3	902	-	-	계약지연, 중개업체 구매에 따른 선금 집행 불가로 조정
	X-선 장비 및 노트북	22	2,065	-	-	사업 취소(업체 무응찰)
	나침반(비설치형)	4,026	350	1,092	94	구매 수량 감소
	무선폭음/경보장치	3	20	-	-	사업 취소(업체 무응찰)
	사거리측정기(레이저용)	1	3	-	-	사업 취소(업체 무응찰)
	수중탐색기	3	13	-	-	사업 취소(업체 무응찰)
	휴대용 금속탐지기	3	13	-	-	사업 취소(업체 능력부족)
	휴대용 액체 폭약탐지기	3	22	-	-	사업 취소(업체 무응찰)
해군	EOD로봇	2	601	-	-	계약지연, 중개업체 구매에 따른 선금 집행 불가로 조정
	음향발화장치	2	302	-	-	중개업체 구매에 따른 선금 집행 불가로 조정
	수중 폭발물처리 인양장비	2	149	-	-	중개업체 구매에 따른 선금 집행 불가로 조정
	폭약성분분석기	2	65	-	-	중개업체 구매에 따른 선금 집행 불가로 이월
	폭발물 원격 이동기	3	57	-	-	목표가 초과로 사업 취소
	금속탐지기	4	24	-	-	목표가 초과로 사업 취소
	폭파기구세트	2	5	-	-	업체 부정당체재로 인한 계약 불가로 사업취소
	노트북 (X-Ray 촬영기용)	2	-	-	-	'17년 이월예산, 업체계약포기
공군	EOD로봇	1	827	-	-	계약지연, 중개업체 구매에 따른 선금 집행 불가로 이월
	EOD용 청진기 키트	-	-	10	130	타 장비 계약잔액 활용 구매
해병대	EOD로봇	3	902	-	-	계약지연, 중개업체 구매에 따른 선금 집행 불가로 조정
	수중 금속탐지기	3	18	-	-	계약업체 납품포기로 인한 사업 취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매년 업체 무응찰 및 계약 포기에 의한 사업취소, 계약지연 등 유사 사유에 의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집행실적 제고 노력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따라서 국방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업체의 장비제작 능력, 구매여건 등 장비 확보 가능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장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국방부는 2018년부터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고, 3군 통합조달을 통해 단가 동일화, 표준 구매요구서 작성, 군 공통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등 동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의무장비획득 사업¹⁾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단, 검사 및 치료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413억 2,700만원이다.

[2020년도 의무장비획득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의무장비획득	28,281	32,362	32,362	41,327	8,965	27.7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의무장비획득 사업은 연례적으로 큰 규모의 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향후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의무장비획득 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연례적으로 큰 규모의 전용 감액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년 약 18~52억원의 예산이 전용되어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에 충당되고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231-302

[2015~2019년 의무장비획득 사업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5	28,275	28,275	299	△5,205	23,368	20,882	73.9	2,164	322
2016	21,016	21,016	2,164	△2,002	21,178	20,744	98.7	328	106
2017	28,584	28,584	328	△1,827	27,085	26,229	91.8	752	104
2018	29,587	29,587	752	△1,791	28,548	28,281	95.6	259	8
2019.7	32,362	32,362	259	-	32,621	14,066	43.5	-	-

자료: 국방부

2018년 의무장비획득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각막지형도검사기 등 다수 장비의 경우 장비 단가 하락 및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고주파수 술기 등 일부 장비의 경우 향후 활용성 및 장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교체함으로써 예산이 전용되었다. 이외에도 산소소생기 등 장비단가 상승으로 인해 집행액이 상승한 사례가 일부 나타났으며, 사용량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타 장비의 계약잔액을 활용하여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는 등 당초 목표와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2018년 의무장비획득 사업 세부 집행내역 중 계획 대비 집행변동 주요 현황]

(단위: 대, 백만원)

장비명	계획		집행결과		계획 대비 집행변동 사유
	수량	예산	수량	예산	
각막지형도검사기	1	103	1	57	장비단가 하락,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기능적전기자극기	1	10	1	4	
내시경 후두용 냉광공급식	1	74	1	34	
레이저 통증치료기	1	6	1	3	
이비인후과용 미세기구셋	1	43	1	4	
산부인과진찰대	1	27	1	8	
심전도계 사단용	9	63	9	38	
치과용 전기소작기	1	11	1	2	
혈압계분석기	4	88	4	41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생화학자동분석기 소형	7	306	7	240	
수질분석기	3	26	3	16	
전기소작기	11	39	11	29	

(단위: 대, 백만원)

장비명	계획		집행결과		계획 대비 집행변동 사유
	수량	예산	수량	예산	
고주파수술기	1	16	0	0	향후 활용성, 장비상태 등 고려 장비 미 교체
두부진찰등	1	14	0	0	
신경자극기	2	8	0	0	
엑스선기 수술용(C-ARM)	1	129	0	0	
지혈대 자동식	1	26	0	0	
현미경 병원용	1	14	0	0	
환자체온보온기자동식	1	13	0	0	
산소소생기 자동식	82	99	82	151	장비단가 상승에 따른 집행액 상승
엑스선기 유방용디지털	1	68	1	138	일부 물량 조달 계약 지연 으로 미집행
산소호흡기	146	75	8	4	무자격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한 장비 조기 도입
약품포장기 자동식(병원용)	0	0	1	17	사용량 고려 진료여건 개선을 위해 물량 증가
약품포장기 자동식(사단용)	31	388	60	671	
임플란트 치과용	0	0	1	7	사용량 고려 진료여건 개선을 위해 물량 증가, 낙찰차액 발생
청력계 사단용	6	72	7	44	감염관리관련 안전한 보철 치료를 위해 물량 증가
집진기 치과용	0	0	2	2	일부 물량 감소, 2단계경쟁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자동심실제세동기	322	821	315	264	사용빈도, 장비상태 등 고려 장비 교체 증가
치과유니트	20	425	31	572	단가 상승으로 집행액 상승, 수요 고려 물량 증가
환자외진버스	18	1,715	19	2,095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2019년의 경우에도 7월 말 기준 의무장비획득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발생, 단가 하락, 교체소요 감소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의무장비획득 사업 계획 대비 집행변동 주요 현황(7월 말 기준)]

(단위: 대, 백만원)

장비명	계획		집행결과		계획 대비 집행변동 사유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자동약품포장기(병원용)	2	73	2	16	단가 하락
기능적전기자극기	5	48	5	19	과년도 실적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단가 하락, 경쟁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감압농축기	3	19	2	8	활용성 등 고려 교체 소요 감소 및 낙찰차액 발생
교반기	14	6	0	0	
지속적피동운동기	2	11	1	4	
지혈대 자동식	1	28	0	0	
침대자동식 일반용	1	14	0	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장비단가 하락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편성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로 인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비인후과용 미세기구셋(9.3%), 치과용 전기소작기(18.2%) 등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장비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해당 장비들에 대한 정확한 예산 편성 노력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 과년도 조달 실적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일부 장비는 단가 하락 및 규격 변경 등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이비인후과용 미세기구셋과 치과용 전기소작기는 단가 적용에 오류²⁾가 있어 잔액이 크게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국방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용 미세기구셋은 2010년 이후 9년만에 조달한 품목으로, 수술기능이 없는 진료기능 위주 장비이나 예산편성 시 수술기능이 있는 장비(이비인후과 미세수술타일 장비, 로 오펜성되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며, 치과용 전기소작기는 2016년 실적단가 작성 시 오기로 인해 실제 실적단가보다 높게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보다 면밀한 시장조사 및 추계를 통해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장비 활용성 및 상태 등을 보다 세심히 검토하여 조달 필요성을 판단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등 철저한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현 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2006년도에 설치된 특별회계로, 2019년 말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상 누적액은 4조 343억원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2018년까지 8,792억원이 상환되었고, 잔여 예수금은 2019년 994억원, 2020년 2,884억원 등 예수금 7년 거치 후 원금 상환 원칙에 따라 상환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재원은 기존 주한미군부대 시설 및 토지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상환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계획)	2020년(안)
예수금	27,626	4,380	4,404	3,933	5,633
원금상환	3,857	3,361	1,574	994	2,884
이자상환	2,969	615	596	734	775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중 2,295억 6,800만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면밀한 토지 매각계획 수립을 통한 자체수입 확보를 바탕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2개 권역(평택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과 대구·김천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49개 구역으로 통·폐합 이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0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6,996억 7,900만원이며, 이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5,633억 1,900만원)과 토지매각대(1,336억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금예수금은 세출액에 비해 부족한 토지매각대 등의 자체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예수하는 금액이고, 토지매각대는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민간 또는 지자체에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다.

[2020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토지대여료	1,436	1,400	1,400	1,400	0	0
기타재산수입	535	460	460	500	40	8.7
변상금	144	73	73	60	△13	△17.8
가산금	3	0	0	0	0	0
기타경상이전수입	656	360	360	500	140	38.9
기타잡수입	0	119	119	300	181	152.1
토지매각대	77,965	97,600	97,600	133,600	36,000	36.9
전년도 이월금	85,007	0	0	0	0	0
공자기금예수금	440,400	393,306	393,306	563,319	170,013	43.2
총 계	606,145	493,318	493,318	699,679	206,361	41.8

자료: 국방부

2019년 8월 말 기준 주한미군 반환기지 매각대상 토지의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총 매각계획금액 4조 7,328억원 중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1조 7,474억원으로 총 매각계획 대비 매각실적 비율은 36.9%에 불과한데, 국방부에 따르면 반환기지 매각대상 토지의 매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주한미군과의 반환협상 지연, 민간사업자 유치실적 저조,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이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매각대상 토지의 매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총 매각계획	매각실적						이후
		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말 기준)	
매각금액	47,328	17,474	12,512	1,668	1,711	779	804	29,854

자료: 국방부

토지매각이 지연되면서 자체세입 충당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자기금 예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가 향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예수원금 뿐만 아니라 상환시기까지의 이자비용까지 발생하여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2020년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액은 2,884억 4,900만원, 예수이자 상환액은 774억 7,900만원으로, 동 특별회계의 자체세입(1,363억 6,000만원)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2,295억 6,800만원은 2020년 공자기금예수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철저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관리를 통해 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협의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등 토지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향후 면밀한 토지 매각계획 수립을 통한 자체수입 확보를 바탕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평택기지이전사업¹⁾은 용산 9개 기지 및 LPP 4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2,683억 1,600만원이다.

[2020년도 평택기지이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평택기지이전사업	255,806	252,485	252,485	268,316	15,831	6.3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평택기지이전사업은 연례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평택기지이전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70~80% 전후로 저조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5년도 993억원, 2016년도 885억원, 2017년도 698억원, 2018년도 485억원 등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 전체적인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231-301

[최근 5년간 평택기지이전사업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5	587,459	587,459	85,712	△15,000	658,171	543,673	82.6	99,258	15,241
2016	454,310	454,310	99,258	0	553,568	426,946	77.1	88,526	38,096
2017	271,784	271,784	88,526	0	360,310	251,324	69.8	69,754	39,232
2018	252,510	252,510	69,754	0	322,264	255,806	79.4	48,538	17,920
2019.7	252,485	252,485	48,538	-	301,023	112,526	37.4	-	-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2018년 결산현황을 내역사업(프로젝트)별로 살펴보면, 19개 중 11개 내역사업이 집행률 80% 미만이며, 통신센터(12.3%), 전투지휘훈련소(41.4%), 210포병여단본부(37.6%), 175재정관리단(21.7%), 시설부대비(9.6%) 등의 내역사업은 집행률이 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에도 7월 기준 집행률이 20% 미만인 내역사업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집행부진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국방부는 한·미 협의기간 소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 지연, 미측의 통신케이블 추가 설치 요청, 계약 지연, 계약업체 법정관리 및 하도급업체 공사 포기, 미측의 기본설계 지연 등을 주요 집행부진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한·미 협의²⁾에 따라 추진되므로 미측 설계변경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과도한 금액의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평택기지이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측과의 협조 강화 및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국방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사·C4I 등 9개 분야 공동실무작업반(과장급, 대령급) 등의 실무협의(주 1회), 국장급 특별분과위원회와 장성급 회의(격주), 차관급 고위급 회담 및 장관급 안보협의회의 등의 정책협의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 평택기지이전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프로젝트)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간부숙소 개수	73	73	0	0	100
소화기사격장	1,795	1,795	0	0	100
육군숙박시설 및 훈련장시설	1,567	1,567	0	0	100
창고지역	26,316	26,316	0	0	100
가족 비동반 병사숙소	29,532	21,810	7,722	0	73.9
항공기 주기장	309	248	61	0	80.3
통신센터	4,934	607	3,777	550	12.3
전투지휘훈련소	1,800	746	1,054	0	41.4
격납고	10,751	6,555	4,196	0	61.0
210포병여단본부	7,124	2,682	4,244	198	37.6
4지역병영시설	33,190	23,317	9,873	0	70.3
병원 등 의료시설 및 자원시설	40,087	38,467	1,620	0	96.0
175재정관리단	951	206	745	0	21.7
임시기반시설	6,612	4,446	1,392	774	67.2
정보보안시설(작전센터 등)	89,844	88,438	1,406	0	67.2
C4I	16,110	14,151	1,921	38	87.8
FF&E(가구)	25,476	1,434	7,947	16,095	5.6
사업관리용역(감리비)	25,500	22,920	2,580	0	87.8
시설부대비	293	28	0	265	9.6
계	322,264	255,806	48,538	17,920	79.4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 평택기지이전사업 내역사업 중 집행률 부진 현황(7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프로젝트)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전투지휘훈련소	1,054	14	-	-	1.3
임시기반시설	10,496	1,981	-	-	18.9
C4I	18,148	2,733	-	-	15.1
시설부대비	262	6	-	-	2.3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¹⁾은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1.4% 증가한 216억 7,900만원이다. 주요 증액 사유는 캠프마켓의 2019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20년 정화 시공에 따른 정화비 편성(200억원)이다.

[2020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환경조사 및 치유	14,205	8,980	8,980	21,679	12,699	141.4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환경치유기준(KISE)²⁾에 대한 한·미 양측 간 이견으로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반환협상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치유기준에 대한 합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에 공여중인 기지는 주한미군이 규정한 환경관리기준(EGS)³⁾에 따라 관리되며, 이 중 반환대상 기지는 공동환경평가절차(JEAP)⁴⁾에 따라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조사결과에 한미가 합의하면 반환된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명: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232-302

2) 환경치유기준(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3) 주한미군의 평시 환경보호를 위한 자체 기준/절차이며, 세부 18개 항목으로 구성

4)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현재까지 반환이 완료된 주한미군기지 중 환경정화대상 18개의 반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지가 폐쇄 이후 최종 반환까지 2년 이상 소요되었고, 캠프 하야리아 및 캠프 캐슬은 4년, 캠프 그레이에넥스의 경우에는 15년이 소요되었다.

[환경정화대상 반환 완료 기지 현황]

구분	기지명	기지폐쇄 연도	반환 날짜	소요기간
1	캠프 에드워드	2005년	2007. 5. 31	2년
2	캠프 게리오웬	2005년	2007. 5. 31	2년
3	캠프 하우스	2005년	2007. 4. 13	2년
4	캠프 스탠턴	2005년	2007. 4. 13	2년
5	캠프 자이언트	2005년	2007. 4. 13	2년
6	캠프 그레이에넥스	1992년	2007. 5. 31	15년
7	UNC	2005년	2007. 4. 13	2년
8	캠프 페이지	2005년	2007. 5. 31	2년
9	캠프 님블	2005년	2007. 4. 13	2년
10	캠프 라과디아	2005년	2007. 4. 13	2년
11	캠프 카일	2005년	2007. 5. 31	2년
12	캠프 시어즈	2005년	2007. 5. 31	2년
13	캠프 에세이온	2005년	2007. 5. 31	2년
14	캠프 홀링워터	2005년	2007. 5. 31	2년
15	캠프 콜번	2005년	2007. 4. 13	2년
16	매항리(육상)	2005년	2007. 5. 31	2년
17	캠프 하야리아	2006년	2010. 1. 13	4년
18	캠프 캐슬	2011년	2015. 3. 13	4년
기지 반환 평균 소요 기간				2.94년

자료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현재 한·미 행정협정(SOFA⁵⁾) 반환협상⁶⁾ 중인 기지 총 4개(캠프마켓, 캠프 룡, 호비사격장, 캠프 이글) 중 캠프 룡은 2012년부터, 캠프마켓은 2014년부터 환경평가 및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치유기준에 대한 한·미 양측 간 이견으로 SOFA 특별합동분과위 상정(2017년) 후 계류 중이며, 이로 인해 기지 반환 평균 소요 기간인 약 3년보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5) 한·미 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6) 총 80개소 중 54개소 반환 완료, 26개소 미반환

- 반환협상 중(4개소): 캠프마켓, 캠프 룡, 호비사격장, 캠프 이글
 - 환경조사 중(4개소) : 니블로배릭스, 8군휴양소, 캠프 모빌, 필승사격장
 - 잔여 18개소는 현재 미군 사용 중(반환협상·환경조사 미착수)

현재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원인은 양국 간 환경치유기준(KISE)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비용 문제 등의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은 환경치유기준을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은 ‘70년간 10만명 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초과하는 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 환경치유기준]

국방부	주한미군
70년 동안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의 기준은 추상적이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주한미군 측은 타 국가의 주둔부대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반환협상 지연은 토지매각 및 기지개발사업 지연⁷⁾의 원인이 되며, 이후 시행되는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과 구 시설물 철거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반환협상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치유 기준에 대한 합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캠프 룽의 경우 기지 폐쇄 후 지자체의 토지매각대금 납부가 이루어졌음에도 양국 간 반환협상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가. 현 황

군인복지기금 학자금대부계정의 지출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대부를 위한 것으로, 학자금 대부, 일반회계전출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41억 2,300만원($\Delta 16.7\%$) 감소한 703억 600만원이다.¹⁾

[2020년도 군인복지기금 학자금대부계정 지출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계획	수정(A)		B-A	(B-A)/A
학자금대부계정	110,332	84,429	84,429	70,306	$\Delta 14,123$	$\Delta 16.7$
학자금대부	27,830	26,923	26,923	26,466	$\Delta 457$	$\Delta 1.7$
일반회계전출금	10,000	32,000	32,000	32,000	0	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72,502	25,506	25,506	11,840	$\Delta 13,666$	$\Delta 53.6$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군인복지기금 학자금대부 사업은 학자금대부계정의 핵심 사업임에도 학자금대부 수요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전출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부계정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학자금계정의 수입은 학자금 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제2금융권) 예치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복지기금 학자금대부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부액과 대부인원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장학금 제도 발달, 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 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며, 2020년의 경우 최근 3년 간 대부액 증감률·대부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대부 사업의 계획안을 전년 대비 4억 5,700만원(△1.7%) 감소한 26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인복지기금 학자금대부액 및 대부인원 현황(2016~2020년)]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 말 수치)	2020년(안)
전체 대부액	30,752	29,586	27,830	26,923 (14,930)	26,466
대부인원	9,925	9,451	8,887	8,648 (4,731)	8,483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이 학자금대부 사업의 계획액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 학자금대부 계정에서 학자금대부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7.6%에 불과한 상황이며, 학자금 계정 지출액의 60% 이상이 일반회계전출금(45.5%)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16.8%)으로 집행이 계획되어 있다.

[군인복지기금 학자금대부 계정 총 지출액 대비 학자금대부 사업 및 일반회계전출금 지출액 비중(2016~2020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안)
학자금대부 계정 총 지출액(A)	83,602	63,726	110,332	84,429	70,306
학자금대부 사업 지출액(B)	30,752	29,586	27,830	26,923	26,466
비중(B/A)	36.8	46.4	25.2	31.9	37.6
일반회계전출금 지출액(C)	21,426	32,000	10,000	32,000	32,000
비중(C/A)	25.6	50.2	9.1	37.9	45.5

주: 2018년까지는 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계획액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11년 5월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으로 인해 군인복지기금이 복지계정, 학자금대부계정,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되었으며,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비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사업을 사업성격별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사업비 지출 감소에 따른 여유자금 발생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전출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일반회계 전출은 군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예상되는 대부인원의 추가 감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인복지기금 내 학자금 계정 존치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현 황

항공전력강화비 및 조종전문형관리비는 숙련된 전투조종사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항공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포상금(310-03목)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지상방위 기본경비, 해상방위 기본경비, 항공방위 기본경비 사업¹⁾에 전년과 동일한 총 1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항공전력강화비 및 조종전문형관리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상방위 기본경비	156,316	173,218	173,218	175,927	2,709	1.6
(육군)항공전력강화비	552	552	552	552	0	0
해상방위 기본경비	35,621	40,176	40,176	40,627	451	1.1
(해군)항공전력강화비	99	99	99	99	0	0
(해병)항공전력강화비	18	18	18	18	0	0
항공방위 기본경비	30,268	32,377	32,377	33,147	770	2.4
(공군)항공전력강화비	465	465	465	465	0	0
(공군)조종전문형관리비	12	12	12	12	0	0

자료: 국방부

[2020년 항공전력강화비 및 조종전문형관리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육군)항공전력강화비	341명×135천원 ×12개월	552
(해군)항공전력강화비	61명×135천원 ×12개월	99
(공군)항공전력강화비	287명×135천원 ×12개월	465
(공군)조종전문형관리비	1명×1,000천원 ×12개월	12
(해병)항공전력강화비	11명×135천원 ×12개월	18
합 계		1,146

자료: 국방부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111-251 / 7111-252 / 7111-253

나. 분석의견

포상금(310-03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항공전력강화비 및 조종전문형관리비를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수당과 같은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동 예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각 군은 의무복무 후 숙련 조종사의 조기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전력강화비(임관 11~21년차 조종사 대상) 및 조종전문형관리비(임관 22년차 이상 조종사 중 전투기, 수송기 조종사 대상)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군은 연간 비행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반면, 육군과 해군, 해병대는 모든 조종사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항공전력강화비는 1989년 3월 조종사 조기유출 방지를 위한 “조종사 관리 강화대책” 관련 대통령 보고에 따라 1990년 12월 최초 지급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포상금(310-03목)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그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특별한 공적과 노고를 치하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와 각 군이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임관 11년차 이상 조종사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수당과 같은 성격으로 포상금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포상금의 편성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

더욱이 국방부는 조종사 민간 유출 방지와 이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에 따라 조종사에게 월 48~109만원의 항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관 16~21년차 조종사에게는 월 10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수당과 동일한 목적으로 임관 11년차 이상 조종사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집행에 해당하여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항공전력강화비 및 조종전문형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의 성격에 맞게 집행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군인사법」 제48조제3항¹⁾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²⁾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 2020년 육아휴직수당 예산은 장교인건비 사업³⁾에 전년 대비 60.0% 증가한 60억 3,600만원이, 부사관인건비 사업⁴⁾에 전년 대비 72.6% 증가한 88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48억 9,200만원이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군인사법」

제48조(휴직)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5. (생략)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3) 코드: 일반회계 1101-151

4) 코드: 일반회계 1101-152

[2020년도 육아휴직수당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장교인건비	4,257,804	4,327,136	4,327,136	4,435,633	108,497	2.5
육아휴직수당	5,344	3,780	3,780	6,036	2,256	60.0
부서관인건비	5,293,316	5,478,808	5,478,808	5,717,865	239,057	4.4
육아휴직수당	7,291	5,130	5,130	8,856	3,726	72.6

자료: 국방부

[2020년 육아휴직수당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장교인건비 사업 육아휴직수당	503명 × 1백만원 × 12월 - 수당규정 개정1)사항을 반영하여 단가인상(75만원→1백만원2)) 및 편성인원 증원(420명→503명)	6,036
부서관인건비 사업 육아휴직수당	738명 × 1백만원 × 12월 - 수당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가인상(75만원→1백만원) 및 편성인원 증원(570명→738명)	8,856
계		14,892

주: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1.8.

2) 상한과 하한의 평균액으로 단가산출: {(150+70)/2×3개월+(120+70)/2×9개월}/12=10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연례적인 육아휴직수당 예산 부족 및 상당 규모의 조정액 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는 육아휴직계획 사전 조사 등 정확한 육아휴직자 추계 및 육아휴직수당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 간 편성 대비 실제 육아휴직자 현황을 보면, 매년 실제 휴직인원이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을 약 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예

산 편성 시 장교 육아휴직자를 318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휴직인원은 525명이었고, 부서관 육아휴직자는 402명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제 휴직인원은 797명이었다.

[연도별 편성 대비 실제 육아휴직자 현황(2015~2019년)]

(단위: 명)

구분	장교		부서관		계	
	편성시 추계 인원	실제 휴직인원	편성시 추계 인원	실제 휴직인원	편성시 추계 인원	실제 휴직인원
2015	199	435	214	511	413	946
2016	205	437	257	625	462	1,062
2017	225	410	262	561	487	971
2018	318	525	402	797	720	1,322
2019 (7월 말 기준)	420	542	570	848	990	1,390

자료: 국방부

예산편성 당시 추계한 육아휴직자 수와 실제 육아휴직자 수의 상당한 차이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매년 전용, 조정 등을 통하여 부족액을 보충해온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수당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24억 3,700만원을 조정 증액하였고, 조정액이 매년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 61억 5,500만원이 조정 증액되었다.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육아휴직수당 예산액이 증액되었으나 7월 말 기준 휴직인원이 1,390명으로, 예산 편성 시 산정한 990명을 이미 40% 이상 초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9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조정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육아휴직수당 결산 현황(2015~2019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5	장교	1,791	1,791	0	1,351	3,142	3,142	0
	부사관	1,926	1,926	0	1,086	3,012	3,012	0
2016	장교	1,885	1,885	0	1,622	3,507	3,507	0
	부사관	2,313	2,313	0	1,278	3,591	3,591	0
2017	장교	2,025	2,025	0	1,919	3,944	3,926	0
	부사관	2,358	2,358	0	2,404	4,762	4,757	5
2018	장교	2,862	2,862	0	2,482	5,344	5,344	0
	부사관	3,618	3,618	0	3,673	7,291	7,291	0
2019 (7월 말)	장교	3,790	3,790	0	-	3,790	2,973	-
	부사관	5,130	5,130	0	-	5,130	3,691	-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이와 같은 연례적인 육아휴직수당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실제 육아휴직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편성인원을 증원(장교 420 → 503명, 부사관 570명 → 738명)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2020년 예산안에 편성한 육아휴직인원은 2018년의 실제 휴직인원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2019년과 비교할 때 7월 말 누적 휴직인원보다 적은 수라는 점에서, 2020년에도 육아휴직수당 부족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육아휴직수당 예산 부족이 연례적인 현상임을 고려할 때 매년 반복되는 상당 규모의 조정액 발생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육아휴직자 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임무수행 간에도 예상치 못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는 육아휴직계획 사전 조사 등 정확한 육아휴직자 추계 및 육아휴직수당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
(203~256 비공개)

병무청

1

현황

병무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병무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1,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00만원(4.9%) 증가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병무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13	206	206	216	10	4.9

자료: 병무청

병무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367억 3,7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4억 800만원(3.7%) 증가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병무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15,089	228,329	228,329	236,737	8,408	3.7

자료: 병무청

한편, 병무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0년도 병무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최신 병역판정검사 장비 도입 등을 통한 병역처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② 군 소요 적정충원 및 병력동원 업무 수행, ③ 사회복무요원 책임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강화 및 체계적 복무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내실화, ④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자긍심 고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0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병무청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상시 운용하고자 하는 체험형 장비는 필요성 및 시급성, 현역병 모집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장비 구입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확대 추진되고 있으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범위에 관련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병무청은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2개 사업, 37억원 규모이다.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무요원운용,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이 있다.

① 사회복지무요원운용 사업은 병무청 사회복지무요원 운용을 위한 보수, 급식비, 출퇴근 교통비 등 인건비 성격의 사업으로 보수 인상 반영 및 전년 대비 133명 증원에 따른 증액이며, ②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병무청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일부 증액하였다.

[병무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사회복지무요원운용	1,904	1,904	3,440	1,536	80.7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30	130	210	80	61.5

주: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병무청

1

모병면접장 예산 증액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현역병 모집 사업¹⁾은 각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특기별로 모집 선발하고, 입영 예정자에게 군 복무와 취업, 진로를 연계하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1% 증액된 11억 7,400만원이다.

병무청은 각 군의 모집병 선발과정 중 면접 및 체력평가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총 14개의 지방청에 모병면접장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은 2020년 모병면접장 비품, 별관 사무실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를 전년 대비 9,200만원 증액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현역병 모집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현역병 모집	651	994	994	1,174	180	18.1
모병면접장 비품, 별관 사무실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4	4	4	96	92	2,300.0

자료: 병무청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232-303

나. 분석의견

병무청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상시 운용하고자 하는 체험형 장비는 필요성 및 시급성, 현역병 모집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장비 구입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병무청은 2019년부터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²⁾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내 ‘상설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운용(2019년 1명 → 2020년 9명)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 내 기존시설(구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회관) 사무공간을 보수하고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해 4,200만원을, 체험형 장비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2020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모병면접장, 별관 사무실 집기류 자산취득비 증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서울지방병무청 모병면접장 비품, 별관 사무실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 : 42백만원 · 직원·민원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 20백만원 · 책상 및 의자 등 집기류 : 11백만원 · 복사기, 프린터기 등 11백만원 - 체험형 장비 구입 : 50백만원	92

자료: 병무청

병무청이 구입하고자 하는 체험형 장비는 전자 시뮬레이터 1대, 드론 시뮬레이터 1대, 한국전쟁 전투 체험용 VR 1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2) 병무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은 약 3시간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병역의무자의 적성·전공 등과 군 특기 연계 등 병역진로상담, 군 생활 및 복무 중 자기계발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 군 보급품 전시, 군복 체험, 전투 장비 시뮬레이션 체험 등 간접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별관 사무실 체험형 장비 구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군 장비 모의 체험 장비	- 전차 시뮬레이터 1대 · 컴퓨터(데스크탑), 조종대, 헬멧 등 1세트 · 전차, 장갑차 훈련 및 체험용 시뮬레이터	10
	- 드론 시뮬레이터 1대 · 컴퓨터(데스크탑), 컨트롤러, VR 등 1세트 · 드론 비행 훈련 및 체험용 시뮬레이터	15
군 전투 모의 체험 장비	- 한국전쟁 VR 장비 1대 · 컴퓨터, 컨트롤러, HMD 장비 등 1세트 · 한국전쟁 배경 전투 체험용 VR	25
합 계		50

자료: 병무청

병무청에 따르면 모병면접장에서는 입영 예정자의 원활한 군 생활 적응과 군 복무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군 보급품 전시, 군 복 체험, 전투 장비 시뮬레이션 체험 등 간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육군 기계화학교 전차 시뮬레이터, 육공군 드론 시뮬레이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군 병과학교 교육 및 군 내 행사가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체험형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차 조종, 드론 운용 등 특정 특기에만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체험이나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전투 체험은 군 복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체험이 아니라 군 복무의 극히 일부분에만 해당하는 흥미 위주의 간접체험으로, 현역병 모집 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입영 예정자에게 군 복무에 대한 왜곡된 선입관을 형성하여 입영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전담 인력 운용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현역병 모집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흥미 위주의 일부 체험형 콘텐츠를 상시 운용할 필요성 및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지방병무청 모병면접장의 체험형 장비 구입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가. 현 황

병무청은 병무행정안내 사업¹⁾의 일환으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자율적 병역이행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500만원 증액된 3억 3,900만원이다.

[2020년도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병무행정안내	1,503	1,450	1,753	1,831	78	4.4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431	719	719	793	74	10.3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	195	254	254	339	85	33.5

자료: 병무청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병역명문가패 및 기념품 등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목) 1억 1,700만원, 시상식장 등 임차료(210-07목) 2,100만원, 시상식 및 영상물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 1억 5,200만원, 시상식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900만원, 포상금 3,0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019년에 비해 증액된 주요 비목은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인데, 일반수용비의 경우 2013~2017년 5년 간 연평균 선정가문(약 500가문)보다 최근 2년(2018~2019년) 연평균 선정가문(700가문 이상)이 평균 200가문 이상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패 및 증서 제작비가 1,800만원(200가문 × 90,000원) 증액되었고, 일반용역비의 경우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병무청 자체인력으로 수행해왔으나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134-310

품격 높은 행사 개최에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다.

[2020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일반수용비 (210-01목)	병역명문가패, 증서, 기념품 제작 등: 61 병역명문가 시상식 및 증서수여식 등 부대비용: 40 표창심사위원회 심의 수당: 1 병역명문가 발굴·홍보: 9 병역명문가 정책개발 세미나 등: 6	117
임차료 (210-07목)	시상식장 임차료: 20 차량 임차료: 1	21
일반용역비 (210-14목)	병역명문가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 제작: 33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구축: 9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30 병역명문가 시상식: 80	152
국내여비 (220-01목)	병역명문가 시상식 등 참석 여비: 19	19
포상금 (310-03목)	병역명문가 부상금: 30	30
합 계		339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확대 추진되고 있으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범위에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병무청은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병역법」 제82조²⁾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은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³⁾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하며, 2004년 시행 이후 총 5,378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단위: 가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04년~ (누적)
신 청	858	690	653	868	922	8,381
선 정	466	560	492	714	741	5,378
병역 이행자(명)	2,490	2,932	2,670	3,779	3,820	27,154

자료: 병무청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 외에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⁴⁾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공영주차 요금, 시설 사

2)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3)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²⁾(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이 경우 직계비속 2대, 3대 중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에 대해서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이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입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4)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용료, 보건소 진료비, 시 산하기관 입장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토록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하여 현재 894개 시설에서 참여하고 있다.

[연도별 병역명문가 표창가문 포상금 현황]

구 분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2004~2007년	300만원(1)	200만원(2)	100만원(5)	50만원(12)
2008년	500만원(1)	300만원(2)	150만원(5)	50만원(12)
2009~2016년	500만원(1)	300만원(2)	150만원(5)	100만원(12)
2017년	300만원(1)	200만원(2)	150만원(5)	100만원(17)
2018년	300만원(2)	200만원(3)	150만원(5)	100만원(11)
2019년	300만원(2)	200만원(3)	150만원(5)	100만원(11)
2020년(안)	300만원(2)	200만원(3)	150만원(5)	100만원(11)

주: 1. ()안은 가문 수

2. 2014~2015년 특별상 2가문 추가 선정(상금 각 100만원)

자료: 병무청

[병역명문가 지원(면제·할인) 시설 현황]

(2019.8.31.기준)

계	국가 시설	지자체 시설	민간 시설
894개소	궁·능원 등 63개	박물관, 보건소 등 241개	병원, 휴양시설 등 590개

주: 서울시 등 110개 지자체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자료: 병무청

그런데 이와 같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예우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병무청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직무규범에 지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명확화하고, 지원 내용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병무청은 인건비 사업¹⁾ 예산으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20년 인건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332억 8,400만원이며, 2020년 연가보상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15억 3,300만원이다.

[2020년도 연가보상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인건비	119,328	128,701	128,701	133,284	4,583	3.6
연가보상비	1,123	1,696	1,696	1,533	△163	△9.6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무청이 편성한 2020년 연가보상비 예산안은 과거 집행수준 및 연가사용 확대 기준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의 2014~2019년 연가보상비 결산내역을 보면, 2014년 87.7%였던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여 2018년의 경우 집행률이 63.7%에 불과한 상황이다.

연례적인 연가보상비 집행을 저조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2014년부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연가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연가보상일수보다 실제 보상일수가 적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2018년의 경우 연가보상비 중 일부를 총액인건비제로 편성하여 인력채용(15명), 직급상향(75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채용지연 및 수시퇴직(5명)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신봉진 예산분석관(bjshin@assembly.go.kr, 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101-100

[2014~2019년 연가보상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세목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지급 인원
2014	1,650	-	-	-	1,650	1,447 (87.7%)	-	203 (12.3%)	1,823
2015	1,735	-	-	-	1,735	1,448 (83.5%)	-	287 (16.5%)	1,831
2016	1,846	-	-	-	1,846	1,330 (72.0%)	-	516 (28.0%)	1,826
2017	1,704	-	-	-	1,704	1,253 (73.5%)	-	451 (26.5%)	1,828
2018	1,764	-	-	-	1,764	1,123 (63.7%)	-	641 (36.3%)	1,850
2019 (8월말)	1,696	-	-	-	1,696	431 (25.4%)	-	-	-

자료: 병무청

이와 같은 병무청의 연가사용 확대 조치는 「인사혁신처 정부기관 근무혁신 중합대책(2018.1.)」에 따른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병무청이 2020년 연가보상비 예산안으로 편성한 15억 3,300만원은 2014~2018년 평균 연가보상비 집행액 13억 2,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연가를 100%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가보상비 예산을 미편성하겠다는 병무청의 추진 방향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연가사용 확대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정 수준의 연가보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 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홍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신 봉 진 예산분석관
민 성 철 예산분석관
박 은 형 예산분석관
오 덕 근 예산분석관

지 원 | 이 정 아 행정실무원
이 근 영 자료분석지원요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10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금양문화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17-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